

연구보고서 2008-0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

이삼식
박종서
장보현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기간동안 1.6 내외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인 충격은 약 3년의 간격을 두고 가구의 출산행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2001년 이후에는 1.1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인구현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노력은 2006년에 본격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6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증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향후 출산율이 1.6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기획한 정책을 단순 집행하고 있다. 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자칫 ‘고비용-저효과’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인구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량 배양은 ‘지방자치’ 실질적인 구현에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한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

의 정책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였다. 동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전국 확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역 실정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정책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저출산 대응관련 지식과 경험을 기초자치단체간 공유 및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출산율 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본 연구 수행에 도움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원의 오영희 박사와 강혜규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2008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37
제3절 연구방법 및 이용자료	39
제2장 선행연구 고찰	42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2
제2절 컨설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6
제3장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과 문제점	52
제1절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환경	52
제2절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58
제3절 기초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시사점	85
제4장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	87
제1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념	87
제2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	89
제5장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구축	120
제1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개념 및 기본원칙	121
제2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개발	123
제3절 컨설팅모형 시뮬레이션	136
제4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지원 확산 방안	16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176
참고문헌	180
부 록	183

표목차

〈표 1- 1〉 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최종 심사대상 기초자치단체 현황	41
〈표 3- 1〉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조직체계	54
〈표 3- 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57
〈표 3- 3〉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결혼 지원 현황	60
〈표 3- 4〉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임산부 지원 현황	61
〈표 3- 5〉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임산부 편의 지원 현황	63
〈표 3- 6〉 기초자치단체의 보육·교육·보건 서비스 지원 현황	65
〈표 3- 7〉 기초자치단체의 보육·교육시설 지원 현황	66
〈표 3- 8〉 기초자치단체의 보험방식 양육 지원 현황	68
〈표 3- 9〉 기초자치단체의 양육비용 지원 현황	72
〈표 3-10〉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양육일반지원: 서비스제공 방식	75
〈표 3-11〉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한 지역별 장학금 지원사업(기금 운영현황)	76
〈표 3-1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국제결혼가정 지원 현황	78
〈표 3-13〉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직장환경 조성 사례	80
〈표 3-14〉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사례	81
〈표 3-15〉 기초자치단체 공공교양·교육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우대 사례	82
〈표 3-16〉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보망 구축	84
〈표 4- 1〉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 선정기준	89
〈표 4- 2〉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분석 대상 선정결과	90
〈표 4- 3〉 결혼준비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시	97
〈표 4- 4〉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관련 정보망 구축 내용(안)	113
〈표 4- 5〉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에 관한 일반정보 예시: ‘아가사랑’ 사례	114

〈표 5- 1〉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평가: 성과산물 지표 예시	135
〈표 5- 2〉 영주시 저출산 대응 업무 담당부서 및 업무	137
〈표 5- 3〉 컨설팅 종합계획(예시)	139
〈표 5- 4〉 영주시 재정자립도, 2005~2006	142
〈표 5- 5〉 2005년도 영주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142
〈표 5- 6〉 2005년도 영주시 산업별 종사자 현황	143
〈표 5- 7〉 영주시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05	144
〈표 5- 8〉 영주시 의료기관 현황	144
〈표 5- 9〉 영주시 인구 추이(1997~2007)	146
〈표 5-10〉 영주시 연령별 인구	147
〈표 5-11〉 영주시 동읍면별 인구 분포	148
〈표 5-12〉 영주시의 연도별 인구동태, 1996~2006	149
〈표 5-13〉 영주시의 연도별 인구이동, 1996~2005	150
〈표 5-14〉 영주시 합계출산율 추이, 1997~2006	152
〈표 5-15〉 영주시 가임기 남녀인구의 미혼율(2005)	154
〈표 5-16〉 출산순위별 출생아 분포	155
〈표 5-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동 추이	156
〈표 5-18〉 영주시 가임여성인구 추이	158
〈표 5-19〉 영주시 맞벌이부부 현황, 2007	159
〈표 5-20〉 영주시 가·미혼인구의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의식	159
〈표 5-21〉 영주시 기혼인구의 향후 추가출산시 희망 자녀양육방법	160
〈표 5-22〉 영주시 보육시설 현황(2008년 3월 현재)	160
〈표 5-23〉 영주시민(20~49세)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태도	161
〈표 5-24〉 영주시민(기혼남녀 20~49세)의 성역할에 관한 태도	163
〈표 5-25〉 영주시민(20~49세)의 저출산원인에 대한 인식	164
〈표 5-26〉 저출산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관한 영주시민(20~49)의 인식	165
〈표 5-27〉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확산 방안 비교	175

그림목차

[그림 1-1]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틀(Research Framework)	38
[그림 1-2]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과정	39
[그림 2-1] 컨설팅 프로세스 모델 예시	49
[그림 2-2] 정교화된 HPT 모형	50
[그림 4-1] Dating서비스 모형	93
[그림 4-2]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	98
[그림 4-3]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및 전용주차장 이용 허가증 예시	101
[그림 4-4] 임신부 및 영유아 편의증진 프로그램 모형	103
[그림 4-5]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관련 정보망 구축 체계(안) ..	112
[그림 5-1]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123
[그림 5-2]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턴트 선정 절차	125
[그림 5-3] 전국, 경상북도 및 영주시 합계출산율 비교, 1997~2006	152
[그림 5-4] 영주시 남녀의 평균초혼연령, 1995~2006	153
[그림 5-5] 영주시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및 미혼여성의 희망출생아수 비교, 2007	154
[그림 5-6] 영주시 가임기여성의 연령별출산율 추이(1995, 2000, 2006)	157
[그림 5-7] 컨설팅-정책 연계 지원방안 수행 절차	172
[그림 5-8] 보건복지가족부의 컨설팅서비스 일방적 지원방안 수행절차	174
[그림 5-9]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수행절차	174

요 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수립·시행
 -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수립·시행한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다는 한계성 존재
-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관련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시키고, 결혼,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주민의 욕구 충족의 역할 수행 필요
 -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환경과 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거리에 위치
 -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영역인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 조성은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 요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상황이나 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반영하기에 한계성 존재
 -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미흡으로 정책 역량 미흡
-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모형 개발에 중점
 -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컨설팅 모형이 추구하는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념 도출 및 사례심층분석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구축
 - 모형의 현장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적 시뮬레이션 실시 및 전국 확산방안

도출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역량 제고를 통해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 실정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정책 개발 역량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 촉진
 -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출산율 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연구내용은 이론적 고찰,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역량 진단, 지역 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 분석,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 방안 도출 등으로 구성
- 이론적 고찰
 -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과 컨설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로 구분하여 실시
 - 전자는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의 필요성 제시
 - 후자는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 및 방향성 제시
-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역량 진단
 -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최종 참가(1차 심사 통과)한 44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관한 자료 심층 분석
 - 저출산 대응관련 조직체계, 인력, 법제화 등 정책의 환경 분석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내용(체계성, 지속성, 적합성 등)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모형 개발에의 시사점 도출
-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 정립 및 모형화
 -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 정립
 -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제출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들 중 우수사례 분석 및 모형화 시도
 -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와 의견 교환(직접 방문, 유선연락 등)

-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 방안 도출
 - 컨설팅 모형의 개념 정립 및 기본원칙 제시
 - 컨설팅 지원모형 개발 및 모형의 현장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적 가상시물레이션 실시
 -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와 의견 교환(방문, 유선 등 활용)
 - 컨설팅 모형의 전국 확산 방안 도출
 -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제시

II. 선행연구 고찰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결혼, 출산·임신, 자녀양육 등 가족형성과 가족확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
- 지역단위 가족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미흡
 - 그 원인들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부진,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한, 담당부서의 다원화 내지 분산 등(조봉근, 1994; 이계탁, 1995; 김춘희, 2002; 송다영, 2005)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
 - 게다가 정책이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남기민, 1991; 이정호, 2001; 김춘희, 2002; 박병현; 강천동, 2004).
- 정책들이 지역 환경이나 주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남기민, 1991; 김춘희, 2002; 강천동, 2004)
 -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도되는 개혁방안으로 행정자체 시스템 개혁과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 개혁 필요(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그 방법으로 교육 및 훈련, 해외연수, 전문인력의 탄력적 배치, 선진외국 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교류, 비교체험, 잦은 인사이동 자제, 전담조직 구축,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조봉근, 1994; 김춘희, 2002; 박병현, 2004)
- 시사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 지역밀착형 인구정책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투자 강화 긴요

2. 컨설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컨설팅 정의 및 유형

- 컨설팅의 정의는 정부, 기업, 개인 등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란 문제대응의 변화 노력을 다루기 위해 조직 내·외부 자원을 동원하여 개인, 집단, 조직에 지원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쌍방적인 과정(Lippitt & Lippitt, 1986)
 - ILO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경영·업무상 문제점 해결, 새로운 기회 발견·포착, 학습 촉진, 변화 등을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 전문자문서비스로 정의(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
- 컨설팅 유형은 클라이언트중심형, 컨설티(consultee)중심형, 프로그램중심형, 컨설티·행정중심형으로 구분(최성재·남기민, 2006)

□ 컨설팅 모형

- Schein 모형은 컨설티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검토 지원(최성재·남기민, 2006)
 - 이 모형에서 컨설턴트의 역할은 지시적인 것과 비지시적인 것 사이에 위치하며, 지시적인 역할은 제안, 지침, 설득, 지시 등 포함
- Nelson과 Economy(1997)의 컨설팅 프로세스에서 컨설턴트는 클라이언트와 조직

- 의 핵심멤버의 요구를 주의깊게 경청함으로써, 조직의 문제와 상황 또는 기회를 조사·탐구하며, 수집자료, 문제점,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을 분석
-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대안 제공, 때때로 해결책 대행 및 실행과정 지원(Weiss, 1992; Philips & Philips, 2002: 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 재인용).
 - Kadshin(1977:129-182)은 컨설팅 과정을 준비단계, 시작단계, 활동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되, 효과적인 컨설팅은 각 단계마다 컨설턴트와 컨설티가 같이 관여(최성재·남기민, 2006)
 - Lewis와 Lewis(1983)는 컨설팅 과정을 접촉 및 시작, 계약과 원조관계 확립, 문제 확인 및 진단적 분석, 목표설정 및 기획, 실행 및 환류접수, 완료·유지 및 종결로 구분(최성재·남기민, 2006).
 - 퍼포먼스 컨설팅 서비스 프로세스는 ① 수행분석, ② 원인분석, ③ 해결책 선정과 설계, ④ 해결책 실행과 변화, ⑤ 평가 등의 5가지 과정으로 구성(Van Tiem, Moseley, & Dessigner, 2004: 정재삼·이진구, 2007 재인용)
 - 이상 선행연구 고찰 결과, 다양한 컨설팅 모형들은 주로 컨설팅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에 관한 정의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 컨설팅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목적으로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 개발

Ⅲ.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분석

1.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환경

가.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행체계

- 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행체계는 T/F체계, 기존부서전담체계, 분산조직체계로 구분 가능

- T/F체계는 업무단위 또는 담당인력별로 구성(대도시에 집중 경향)
 - 대전 서구의 경우 복지지원과, 보육, 아동, 가족보건, 행정지원, 인사, 예산, 인력개발, 여직원회 등 업무담당인력으로 T/F 구성
 - 전남 목포시의 경우 보건사업과, 기획실, 사회복지과, 총무과 등으로 구성
- 기존부서전담체계는 기존 부서 중 한 부서를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체계(44지역 중 9지역)
 - 인천 남구(가정복지과), 광주 남구(보건소), 경기 김포시(보건소), 경기 화성시(보건소), 강원 동해시(주민생활지원팀), 전남 화순군(보건소), 경북 영주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 등 9지역
 - 중소도시 보건소에 집중 경향
- 분산조직체계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총괄 또는 전담 조직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부서들이 각각의 업무 수행(44지역 중 28지역)
 - 관련부서들로는 자치행정과,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가족여성과, 농정과 등 다양
 - 일부 도시지역과 군지역 대부분에서 채택
- 이들 중 T/F체계가 저출산 대응 관련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리하나, 진단 결과 일부 지역에서만 T/F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
 - 기존부서전담체계의 장점으로는 저출산 대응 업무를 집중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정책우선순위 조정, 예산 배정) 가능
 - 현실적으로 1개 부서에서 보건의료, 보육·교육, 사회복지, 여성정책, 노동 등 전 영역을 수행하는데 한계성 존재
 - 특히, 조직 구조상 힘이 약한 부서에서 저출산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다른 부서의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저출산 대응 업무가 전담부서의 업무 위주로 편성 우려
 - 전담부서는 고유업무에 저출산 대응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게 되는 경향이 있어

두 업무 모두 부실 우려

- 이러한 조직체계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 개발·수행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 분산조직체계 하에서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들이 개별적·분산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정책들간 유기적인 연계성이 약하며, 정책들간 우선순위나 예산배분 등 조정 곤란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종합성이나 지속성을 강화하는데 한계

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영역은 임신·출산·양육지원(44지역 중 18지역), 보육시설운영(5지역), 다문화가족지원(5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임신·출산·양육지원 영역에 집중 경향
- 지역의 인구문제를 포괄적·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인구정책에 관한 법제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

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가. 결혼 지원

- 결혼지원정책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결혼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거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인구정책 경진대회자료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 중 결혼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일부에 불과
 - 부산 동래구의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인천 서구의 ‘선남선녀 만남의 장’, 충북 청주시의 ‘결혼예비학교’ 등
- 부산 동래구의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인천 서구의 ‘선남선녀 만남의 장’은 미혼 남녀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어 결혼률을 제고하기 위함.

-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직업이 한정되어 효과성 불확실
- 충주시 결혼예비학교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결혼준비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같은 교육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내용 제약, 실시횟수 제한, 대상의 한계성 등 문제점 존재
 - 대학생의 경우 실제 결혼시기와 다소 시간적 거리가 있어 관심 부족 및 참여율 저조
 - 결혼적령 남녀 대부분 직장생활 등으로 인하여 참가 곤란
 - 교육의 내용 및 접근방법 미흡 등

나. 임신·출산 지원

- 신혼부부 및 임신부 대상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전남 목포시와 경북 경주시에서 신혼부부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한 교육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한계점으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거나 관련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상이 제약되고,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수준도 미흡한 실정
- 임신부 편의 증진
 - 임신부 승용차요일제 적용 배제, 임신부 전용주차장 설치, 임신부 우대창구 운영 등
 - 승용차요일제 적용 배제 정책은 대전 서구, 경기 화성시, 제주시 등(유아동승시에도 혜택)에서 도입
 - 임신부 전용주차장은 경북 경주시, 의성군 등에서 설치·운영
 - 임신부 우대창구는 부산 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 대전 서구·중구, 경북 영주시 등에서 설치·운영

- 한계점으로는 홍보 부족, 쾌적성 미흡 등

다. 보육·교육·보건서비스 지원

□ 주민의 자녀보육·교육·보건서비스 직접 지원

- 경기도 성남시는 ‘아름다운 교육나눔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 및 3자녀이상 가정의 아동에게 무료 수강 및 학원비 할인 혜택 제공
 - 성남시 학원연합회에 가입된 일부 학원들에만 적용되고 있는 관계로 지역에 따라 접근성 제약, 반복적인 지원 곤란 등
- 제주시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검진서비스 제공
 - 보육-보건 연계사업으로 효과적이나, 검사대상이 지나치게 기본적인 항목들에 국한

□ 보육·교육시설 지원

- 보육·교육시설에 간식비 지원(경기 성남시·김포시, 전남 목포), 급식 지원(경기 김포시), 전기안전 점검(경기 남양주시), 냉난방 지원(부산 연제구, 대전 서구, 경기 화성시), 평가인증비 및 살균소독비 지원(인천 동구) 등
 - 이용 아동수보다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 존재
 -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성 검증 곤란

라. 자녀양육 지원

1) 보험방식 자녀양육 지원

- 아동의 생명, 상해, 의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은 인천 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평창군, 전남 목포시·함평군·화순군, 경북 성주군 도입
 - 장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타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여 투명성 확보 용이
 - 한계점

- 셋째아 이상으로 대상을 매우 좁게 한정(보편적 접근 곤란)
- 외지에서 전입한 영유아 배제
-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보장범위 제한
- 상해나 질병 등의 의료보장에 한정되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교육보장 제외

2) 수당방식 양육 지원

☐ 출산장려금(출산시점 전후 현금이나 축하물품 제공)

- 지원 대상은 대체로 모든 출생아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으로 출산순위 제한
- 장려금액은 일률적 또는 출산순위별 차등 지원
- 지급횟수는 대부분 1회 전액 지급(일부 2회 또는 3회 분할 지급)
- 전달방식은 통장입금 또는 직접전달

☐ 양육비 지원(충북 청주·단양, 경북 영주, 경남 김해·함안 등)

-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셋째아 이상 대상, 0~5세 동안, 매월 10만원 지원
 - 월 수당액으로 7만원 또는 15만원 지원 사례도 있음
 - 1년 미만 지원: 전북 완주, 순창, 정읍 전남 강진
 - 서울 중구에서는 셋째아 이상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만 대상

☐ 보육료 지원

- 인천 옹진군은 기존 보육료 지원 가족에게 차액 그리고 미지원 가족에게 전액을 군비로 지급(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구현)
- 제주시는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상위아동 중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3~4세 아동(170개소 820명)을 대상으로 수납한도액(정부지원 100%)과 실보육료의 차액을 시비로 지원
- 서울시 중구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10만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시설에 지급

☐ 중복 지원 현황

- 경기 화성시과 남양주시는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동시 제공
- 양육비와 보육료를 동시에 지원하는 지역은 전무
 - 양육비 또는 보육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
 - 서울시 중구의 경우 보육시설 비이용 셋째아에 매월 10만원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아동에 보육비의 50% 지원(중복 지원 억제)
- 기초자치단체 자녀양육 지원방법의 한계점
 - 기초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 인구문제의 심각성, 자치단체장의 의지, 재정자립도 등 여러 여건들에 따라 자녀양육 지원 기초자치단체들과 그렇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들 존재
 - 기초자치단체들간 지급액 등에서 차이
 - 거주기간의 형평성 문제
 - 수혜 대상으로 일정기간 해당지역 거주 제한(일반적으로 6개월~1년)
 - 아동의 출산순위간 형평성 문제(수혜 대상 범위 제한)
 - 대체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 양육 지원
 - 시설이용여부의 형평성 문제
 - 보육료의 경우 대부분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대상 지원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아동수당(또는 양육수당) 도입 필요
 - 출산율 회복, 건전한 아동성장 환경 조성 등 다목적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원
 - 수혜 대상 출산순위를 셋째아에서 둘째아, 첫째아로 점진적 확대
 - 지원기간도 2세 이하에서 5세 이하, 9세 이하 등으로 점진적 확대 고려
- 3) 인센티브 방식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 대전 서구에서 공연관람 및 회원 모집시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10% 우선 할당제 도입, 경기 성남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도서 특별 대출 서비스와 문화교실 접수시 여성 수강신청 우대서비스 제공

- 문화영역에서의 다자녀 우대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분위기 조성 가족사랑의 정서적 측면 강조 강점
- 그러나 가족 가치를 중시하고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자녀수 제한 철회 필요, 이외 자녀 동반 가족단위의 문화공연 또는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에 할인혜택(또는 자녀에 대한 무료) 부여 필요
- 경기 김포시에서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제를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
- 경북 성주군에서 셋째아 이상 대상으로 가족무료검진·진료서비스 제공
 - 전체 아동으로 확대 필요(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한계성 존재)
- 4) 장학금방식 양육 지원
 - 선거법 저축을 우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장학사업을 실시하기보다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실시
 - 재단법인은 보통 모금과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조성
 - 지자체의 출연금이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금 조성 곤란
 -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지원
 - 일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분야별 특기생 지원
 - 다자녀 가정 자녀는 대상에 불포함

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
 - 인천 남구, 경기 성남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의성군 등
 - 동해시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임산부 및 유자녀 가정에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등 지원
 - 강진군에서 이주여성 임산부 건강교실을 열어 산전후관리, 고위험임신관리 등 지원
 - 의성군에서 이주여성 임산부를 위해 산전진찰, 영유아 예방접종 시 차량 지원

- 국제결혼가정의 임신·출산 지원 수준은 여전히 미흡
 - 아직까지 국제결혼가정의 출산 및 자녀양육보다 국제결혼 성사 및 이주여성 정착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

바.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사례

☐ 임신공무원 보호 지원

- 대전 서구에서 임신공무원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태교(음악감상, 독서) 제공
- 경북 영주시에서 임신공무원(또는 배우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배제, 임신공무원의 희망부서 우선 배치, 보호의자 제공 등
- 경북 성주군에서 임신·출산 전후 보직이동 최소화, 임신공무원 각종행사 차출 제외, 출산축하 꽃바구니 및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휴가비 지급, 근무시간에 임신부·영유아 건강교실 참가 허용, 임신부 전용주차장 운영 등

☐ 공무원 자녀양육 지원

- 충북 청주시에서 청사 내 방과후교실 운영
- 경기 성남시에서 2008년부터 다자녀(3자녀 이상)직원에게 대해 문화시설 또는 공연 등 관람에 무료 및 할인 혜택 제공
- 경북 성주군에서 다자녀(3자녀 이상) 직원에게 대해 휴양시설 이용 우대, 장기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선발시 우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우선 선정 등

사.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인천 남구에서 우체국과 연계하여 ‘출생기념 예금통장 발급’ 사업 실시

- 아동발달계좌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계속 입금할 유인할 수 있는 동인 부재

☐ 경북 경주시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행사장에 출산장려 홍보관 설치운영

- 단기간 행사의 성격을 가져 지속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한계

아. 임신·출산·양육관련 정보망 구축

- 서울 중구, 인천 서구, 충북 충주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아기사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 등록자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보망을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정보망을 실제 모자보건서비스 제공과 연계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동적(off-line)으로 한계성 존재

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분석의 시사점

- 저출산 대응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양육비용 경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 규모나 타 업무들과 관계를 고려할 때,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이 경우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의 컨설팅 지원 필요
- 저출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정책들을 설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필요
 - 마스터플랜은 지역사회 진단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 요구
 - 법제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개발에 매우 중요
- 개별정책 실행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량 부족과 연계
 -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에 대해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 필요

IV.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 분석

1.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출산을 제고를 위해 결혼·출산·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제거 및 결혼·출산을 직간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정의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결혼 및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적 접근과 인구자질을 향상시켜 잠재적으로 출산 증가효과를 거두기 위한 질적 접근 모두 실행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보건의료, 복지, 노동, 여성 등 전 분야를 망라
-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한 정책으로 정의
 - 이는 중앙정부의 전국 대상 저출산 대응정책과 대립되지 않고, 대체적이거나 보완적인 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주된 이유로 주민의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이 지역의 특수상황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

2.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

-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컨설팅모형을 구축하는데 표적성과 현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모형화를 위한 정책사례들은 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들 중 연구진이 선정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한 정책들을 선정
 - 선정기준

- 내용적 기준: 주민욕구 충족성, 지역환경 적합성, 시의적절성, 지속가능성
- 환경적 기준: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지지도, 재정적 가능성, 인력 충분성·전문성,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들 우선 선정
- 선정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들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모형화
 - 모형화 방법으로 정책의 배경 및 목적 진단, 외국사례 분석,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실시 등 적용
-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상세 내용은 본문 참조)
 - Dating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공신력과 친밀도를 토대로 지역사회 미혼남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의 결혼률 제고 기대
 - 결혼준비교육 제공
 -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준비에 관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결혼준비교육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내 미혼남녀의 결혼생활, 임신·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사전방지 및 사후대처에 기여하여, 합리적인 결혼준비와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유도 효과
 - 임신부·영유아 편의 증진
 - 임신부 차량 및 임신부·영유아(0~2세) 동승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승용차요율제 적용 제외 혜택 제공
 - 임신부 차량 및 임신부·영유아(0~2세) 동승차량에 대해 전용주차장 이용 제공
 - 임신부 및 영유아(0~2세) 동반 민원인을 위한 우대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대기하

지 않고(접수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토록 배려

-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반주민들에게 이동편의서비스 제공

○ 직장여성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내 임신 중인 직장여성들과 자녀양육 부모를 위해 검진서비스 등을 휴일에 제공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제고 노력의 한계성(태아검진휴가제 미도입 등) 및 기업 등의 인식 개선 미비에 보완적 역할 기대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험료 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 건강, 교육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대신 납부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납부

○ 결혼·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제공

- 기초자치단체별로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지식) 제공
- 출산 및 양육관련 발생가능 위험의 사전 방지, 자녀양육비용 경감,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정책에 관한 지역사회 욕구 수렴 및 환류 등 효과 발생

○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녀가정 우대

- 다자녀가정에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가 시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제공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부담이 적으면서도, 자녀양육가정의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다자녀가정 자녀 장학금 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 또는 장학재단 설립(기존재단과 연계)을 통해 다

자녀가정의 교육비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향후 노동력 부족 대비 인력개발 사회투자 등 효과

V.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1. 개념 및 기본원칙

□ 개념

-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 등을 감안한 인구정책의 기획, 집행,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등 전 과정에 대해 전문가(개인 및 집단)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개념화
 - 컨설팅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상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지역환경과 주민욕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는 쌍방향적인 과정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목적(문제해결)을 달성하고, 공무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포착해주고, 학습을 촉진하며, 관리자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기여

□ 컨설팅 모형 개발의 기본원칙

- 컨설팅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에 관한 역량 제고
 - 저출산 대응에 지방공무원의 정책개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인식 제고와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 제공
- 컨설팅 모형은 지역 환경과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환경으로는 인구구조, 지역 경제, 직업·산업구조, 지역문화 등 인문지리적인 것들과 지방자치단체 조직, 재정, 지역사회 자원 등
- 컨설팅 모형은 주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그리고 주민

의 부담 능력 등 감안

- 컨설팅 모형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유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컨설팅 모형은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 컨설팅 결과로서 인구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상적일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낮기 때문
- 컨설팅 모형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설계
 - 모형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복잡한 경우, 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컨설팅은 자칫 지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릇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원인 제공
-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컨설팅 지원이 조절될 수 있도록 설계
 - 지나치게 초보적이거나 고도의 컨설팅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의 흥미나 관심 감소 우려
- 컨설팅 모형은 특정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교육(학습)적 목적을 가지도록 설계
 - 이를 위해 컨설티들로서 특정 개인(담당자)보다 집단(조직 구성원) 설정
- 컨설팅 모형은 정책 개발(기획)과 수행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과차원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설계

2. 컨설팅 모형 개발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은 총 7단계로 구성

- ① 컨설티 및 컨설턴트 선정, ② 컨설팅 계획 수립, ③ 자료수집, ④ 지역사회 진단, ⑤ 정책 도출 및 설계, ⑥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⑦ 정책 평가 및 환류
-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각 단계마다 컨설턴트와 컨설티가 같이 참여

가. 단계 I: 컨설팅 및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선정

- 컨설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집단 모두가 가능하며, 집단의 경우 팀, 과, 국, 지자체장을 포함한 전체 조직까지 확대 가능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부서들이 저출산관련 업무를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컨설팅은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T/F팀으로 구성하는 방안 고려
 - 이 경우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지자체 전체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턴트는 저출산 관련 분야(예를 들어, 인구, 사회정책,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교육, 여성정책 등)의 개인 또는 집단 모두 가능
- 컨설턴트로 가급적 지역사회 또는 인근지역의 적합한 전문가(대학, 지방연구원, 전문민간단체 등) 선정 바람직
 - 컨설팅 대상지역의 상황에 보다 정통
 - 컨설턴트와 컨설팅간 친밀감(rapport) 형성에 유리
 - 빈번한 상호 교류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
- 해당 지역 내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지역에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합한 컨설턴트를 물색하여 컨설팅 의뢰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은 세 가지 형태로 추진 가능

- (1)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형태, (2)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추진하되, 일정 예산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 그리고 (3)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서 추진하는 형태
 - (1)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컨설팅 지원기관(또는 여러 기관이나 개인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으로 적합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
 - (2)와 (3)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컨설턴트 선정

나. 단계Ⅱ: 컨설팅 계획 수립

- ☐ 컨설턴트와 컨설티간 협의를 통한 컨설팅 종합계획 수립
 - 효과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진단
 - 컨설팅 지원체계는 예산, 자료 및 정보, 컨설팅 도구 등
 - 제반 사항들을 고려, 컨설팅 단계(자료수집, 지역사회 진단, 정책 도출 및 설계,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정책 평가 및 환류)별 수행사항과 일정 결정

다. 단계Ⅲ: 자료수집 컨설팅

- ☐ 컨설팅 관련 기초자료 수집
 - 1차 자료
 - 자료(원자료)로서 주민등록자료, 인구동태통계자료,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주민욕구조사 등
 - 자료 수집에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종합계획에 미리 반영
 - 2차 자료
 - 통계청, 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표 자료 수집

라. 단계Ⅳ: 지역사회 진단 컨설팅

- ☐ 지역경제사회환경 진단
 - 주민의 경제활동상태, 산업 및 직업 구조, 종사상지위, 소득수준, 학력 등
 -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초인프라 등
- ☐ 지역인구 변동 진단
 - 지역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분포 진단
 - 지역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 진단
- ☐ 지역의 출산수준 및 결정요인 진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저출산 원인 및 주민욕구 진단에 대한 컨설팅

- 지역의 저출산 수준이나 원인이 전국과 유사한지 아니면 지역 고유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에 대한 컨설팅
- 지역의 저출산 원인구조가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단토록 컨설팅(정책 강도나 지속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

마. 단계 V: 정책 도출 및 설계 컨설팅

□ 정책 도출

- 저출산원인 해결을 위한 방법 또는 정책 모색
 - 이미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고유 정책수요에서 제외토록 검토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책간 우선순위 결정
 - 지역의 특수원인 대응 또는 주민욕구가 높은 정책 등에 우선순위

□ 정책대상 명료화

-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상 명료화
 - 정책대상 구분기준으로 지역, 결혼상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기출산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 등 고려

□ 정책 설계

- 정책설계는 비전 및 목표 설정, 기본전략 수립, 추진과제 설정, 평가·환류 기획 등으로 구분하여 컨설팅 실시
- 비전 및 목표는 해당 지역의 특수 상황과 주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출산을 증가
 - 단일정책의 경우 출산율보다 출산을 결정요인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토록 컨설팅
- 추진전략은 실천 가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으로 설정(지역사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체계화, 서비스 개발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정책 대

상 명료화, 수행기간 책정, 수행조직(인력) 구축, 예산 확보, 가용한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활용, 지역사회 및 주민의 참여 유도, 홍보 활동 등

○ 평가 및 환류 기획

바.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컨설팅

□ 개인이나 조직의 역량은 수행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능력으로, 컨설턴트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업무수행 당사자의 어떤 점을 집중해서 컨설팅 해야 할지를 명확화

□ 이와 관련, 정책 실행 이전에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결과, 기획과 실제간의 차이에 대한 수정 보완 조치

사. 단계Ⅵ: 정책 평가 및 환류

□ 정책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과정 컨설팅

○ 평가 및 환류는 정책설계단계에서 마련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며, 정책수행과정에서 평가툴(tool) 작동

□ 컨설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 컨설티로서 조직이나 개인의 역량의 성숙 정도 평가

3. 컨설팅모형 적용 시뮬레이션

□ 개발된 컨설팅 모형을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상적으로 적용시키는 시뮬레이션 실시

○ 주된 목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된 컨설팅 모형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컨설팅 모형의 현장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험-환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4. 컨설팅 지원 확산 방안

☐ (1안) 중앙정부의 컨설팅-정책 동시 지원

- 장점: 지역사회진단부터 평가·환류의 전 과정에 대한 개별적 컨설팅 가능
- 단점: 예산 확보 곤란

☐ (2안)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른 개별적 컨설팅 연차적 지원

- 장점: 지자체별 구체적 컨설팅 가능, 지자체 관련정책 연계시 효과 배가
- 단점: 기본적으로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 가능

☐ (3안)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지자체별로 컨설팅 연차적 지원

- 장점: 구체적 컨설팅 가능, 해당 지자체의 관련정책 연계 수행시 효과 배가
- 단점: 기본적으로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 가능

☐ (4안) 중앙정부가 계획에 의거 유사지역 집단별 컨설팅 연차적 지원

- 장점: 특성이 유사한 지역간 경험 공유 가능
- 단점: 기본적으로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 가능

☐ (5안) 중앙정부가 계획에 의거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

- 장점: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 단점: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 가능, 일방적 교육훈련 형식으로 효과 감소

☐ (6안) 중앙정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단적 컨설팅 지원

- 장점: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 단점: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 가능, 일방적 교육훈련 형식으로 효과

※ 전국적인 확산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시범사업 실시 고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출산율(이하 합계출산율을 의미)은 1960년 6.0에서 약 20년이 지난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5~1.7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 더욱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8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은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인구대치수준과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 1.6에 비해서도 아주 낮다.

저출산·고령화는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생아수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신규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인구가 감소하는 등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는 반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소비 및 생산이 위축되어 대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낮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기업(시장),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하다. 이들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환경과 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영역인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나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지역의 특수상황이나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주민의 특수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기에도 여러 제약점이 있다(이삼식 외, 2006). 즉,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그들 인력마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기획, 수행, 평가 및 환류(feedback)하는 역량이 미흡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 지원모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을 도출하고, 그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모형화 한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동 모형의 전국 확산 방안을 고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실정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출산율 회복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론적 고찰,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역량 진단,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념 정립 및 모형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 방안 도출이다.

우선 이론적 고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과 컨설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로 구분된다. 전자는 컨설팅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역량에 대한 고찰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에 대한 논의는 정책의 환경과 속성과 관련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후자는 컨설팅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로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한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대응 관련 조직체계, 인력, 법제화 등 정책의 환경과 기초자치단체 수행 정책의 특성(체계성, 지속성, 적합성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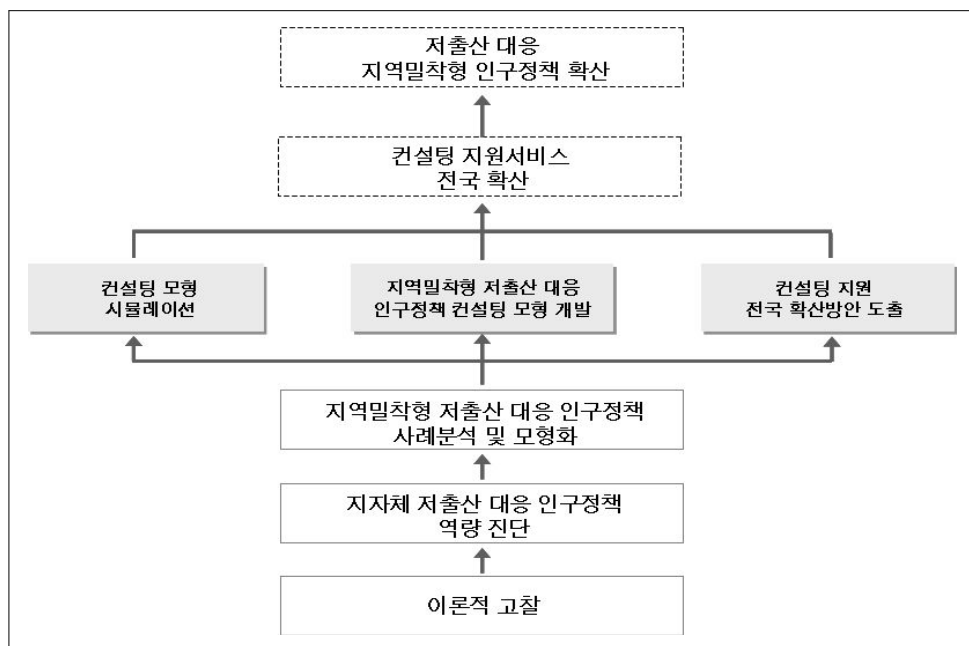
궁극적으로 컨설팅은 지역 환경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 모형이 지향하는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분석 대상으로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제출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들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일정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모형화를 시도한다.

끝으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한다. 우선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원칙들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동 모형의 현장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컨설턴트(consultant)와 컨설티(consultee)간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연구진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의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컨설팅이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산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연구틀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틀에서 점선 부분은 본 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후속 연구나 사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틀(Research Framework)



제 3 절 연구방법 및 이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문헌조사,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 분석 및 모형화, 컨설팅 모형 개발, 시뮬레이션 실시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문헌조사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과 컨설팅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기 위해 적용된다. 문헌조사 대상에는 국내외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사례분석 및 모형화의 연구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그리고 컨설팅 모형의 지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한다. 사례분석은 정책 환경과 정책 내용의 두 측면에서 실시한다. 사례분석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진일 보완하여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정책 모형화에서는 정책목표 설정, 지원 방법, 대상 선정,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요소들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한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이하 ‘인구정책 경진대회’)」의 심사자료를 이용한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총 6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2).

[그림 1-2]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과정



주: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과정은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임.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경진대회 참가를 요청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전문가, 광역자치단체 고위공무원 등)를 구성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제출자료를 심사하였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초자치단체들을 선정, 신청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였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4개 기초자치단체가 본선에 참가하였다(본선 참가 기초자치단체 수는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의 총수에 비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2차심사(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심사단은 13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3차심사(현장확인)를 실시하였다. 2차심사(서류평가)와 3차심사(현장확인)에 이용된 심사들은 [부록 I]에 제시되어 있다. 이후 워크숍을 통해 1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책사례를 발표하였다. 심사단은 2차심사와 3차심사 및 워크숍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인구정책 경진대회의 2차심사자료로 44개 기초자치단체의 사례가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3개 지역 대신 44개 지역의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종합평가점수가 낮을지라도 개별정책은 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나, 여러 제약점들로 인하여 곤란한 실정이다. 우선 ‘평가의 만능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어,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자발적인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험을 다른 기초자치단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인구정책 경진대회 결과는

1)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평가는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Vendung, 1992: 라휘문, 2004 재인용). 그 이유는 먼저 미국연방정부가 위태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1960년대 후반에 시도되었던 PPBS의 도입실패에 기인한다(라휘문, 2004).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역량을 제고하는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1〉 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최종 심사대상 기초자치단체 현황

시도(기초지자체 수)	시군구
서울특별시(1)	중구
부산광역시(3)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2)	달서구, 남구
인천광역시(4)	서구, 남구, 동구, 옹진군
광주광역시(2)	남구, 동구
대전광역시(2)	서구, 중구
울산광역시(2)	북구, 동구
경기도(4)	성남시, 김포시, 화성시, 남양주시
강원도(3)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
충청북도(3)	충주시, 청주시, 단양군
충청남도(3)	청양군, 당진군, 서천군
전라북도(3)	순창군, 정읍시, 완주군
전라남도(4)	목포시, 화순군, 강진군, 함평군
경상북도(4)	영주시, 경주시, 성주군, 의성군
경상남도(3)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제주도(1)	제주시

끝으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도출, 설계, 실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한다. 다만 이러한 모형은 지나치게 이론화할 경우 현장 적용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연구예산과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시뮬레이션의 투입-수행-산출 과정을 모두 거치기가 어려우므로, 시범지역의 일부자료와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토대로 가상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밀성이 미흡하나,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들은 최종적인 컨설팅 모형 개발에 환류(feedback)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과 정책 개발 등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의 필요 정도를 가늠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컨설팅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모형의 기본적인 틀과 지향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하다. 요컨대 선행연구 고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전개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그리고 제2절에서는 컨설팅에 관한 선행연구를 각각 고찰한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는 이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진단과 컨설팅 모형 개발에 반영될 것이다.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저출산현상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 가족형성과 가족확대의 가족주기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결과로서, 넓게는 일반적인 가족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가족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에 들어 지역복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 두 가지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전재일·모지환, 2000).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복지서비스공급체계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communitary care)가 강조되고 서비스 체계가 고객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복지시책은 일부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인구고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계층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정책 대상이 될 것이다. 가족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통해 지역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송다영, 2005). 결국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김춘희, 2002). 예컨대, 중앙정부는 거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반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단위 가족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이란 정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의 동원과 흡수, 자원관리, 현재 활동의 평가 등 다국면적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김혜정, 2006). 이러한 역량의 양과 질은 주민의 정책체감도와 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김혜정, 2006), 실로 많은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부족을 제시하고 있다(조봉근, 1994; 이계탁, 1995; 김춘희, 2002; 송다영, 2005; 남기민, 1991; 박병현, 2004; 이정호, 2001; 강천동, 2004 등).

예를 들어, 정책 환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부족,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부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한, 정책담당부서의 다원화 내지 분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조봉근, 1994; 이계탁, 1995; 김춘희, 2002; 송다영, 2005).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업무는 주변적이고 제한적인 위상에 놓여 있어, 가족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미흡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 업무만을 전담할만한 충분한 인력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소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성마저 낮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이삼식 외, 2006).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은 출산율 저하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에 한계성을 안고 있다(송다영, 2005). 또한, 서비스나 업무의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화된 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사업집행과정의 불연속성과 서비스의 파편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송다영, 2005).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배정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 계획부터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중앙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김춘회, 2002).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중앙부처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도 부진한 실정이다(조봉근, 1994). 게다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각 부처들이 해당 업무를 시작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들이 다원화되어 있고, 이들 각자는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담당부서의 다원화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전달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든 이용방법이나 관할부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부족은 정책이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남기민, 1991; 김춘회, 2002 재인용). 또한, 정책 및 서비스는 지역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나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박병현, 2004).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이정호, 2001; 강천동, 2004). 이러한 관점들은 김춘회(2002)가 구분하고 있는 4가지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이나 서비스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이든 간에 그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둘째, 수혜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지리적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

다. 셋째, 수혜대상자가 필요로 한 때에 편리한 곳에서 해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용이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민참여의 원칙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 역량과 관계되는 것으로, 실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준희(200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필요한 장단기 복지행정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남기민(1991)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 분담을 위해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정책 환경으로서 조직, 재정, 중앙부처와의 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개발·실행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 부문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도되는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하나는 행정자체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는 핵심역량이론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역량의 실체를 조직구성원과 내부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요컨대, 핵심역량이란 특정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 내부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도모하고 전체 조직수준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이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의 파악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감소시키는 대신 기회요인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최고관리자의 강력한 비전제시와 전 조직구성원의 참여에 의한(단기적) 추진완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Prahalad & Hamel, 1990; Stalk, Evans & Shulman, 1992; 이순철, 1997). 조직운영의 핵심역량을 조직구성원에 두는 경우

Coyne과 Clifford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찰/예견력(과학적 지식, 데이터보유, 정보접근능력, 창의력, 분석능력)과 업무실행능력 등이 주요 요소가 된다(Lassey, 1998).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 교육 및 훈련, 해외연수, 선진외국기관(시설)과 정보교류, 비교체험 등이 제시되고 있다(조봉근, 1994; 김춘희, 2002; 강천동, 2004). 또한 전문인력의 탄력적 배치, 전문성 발휘여건 조성 등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담조직 구축, 빈번한 인사이동 자제, 민간기관과 협력관계 유지 등이 필요하다(박병현, 2004). 본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서 컨설팅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 2 절 컨설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컨설팅 정의와 필요성 및 유형

컨설팅은 정부, 기업, 개인 등 그 대상이 다양하며, 각 대상에 따라 컨설팅의 정의는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127). 일반적인 의미의 컨설팅이란 문제대응의 변화 노력을 다루기 위해 조직 내·외부 자원을 동원하여 개인, 집단, 조직에 지원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쌍방향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ippitt & Lippitt, 1986).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경영·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자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128).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특정 대상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김기용, 1992; 정재삼·이진구, 2007 재인용). 최성재·남기민(2006)에 따르면, 컨설팅은 어떤 업무에 있어서 능력 있고 배려가 깊은 한 전문가가 때때로 행정적 권력관계 없이 한 개인 또는 집단을 만나서 문제해결을 위한 자

문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편, 사업과정별로 컨설팅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퍼포먼스컨설팅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량을 파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적 해결책과 교육외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Nilson, 1999; 정재삼, 2002; 정재삼·이진구, 2007 재인용). Biech(1999)은 컨설팅을 개인 또는 기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은 정보제공, 권유, 실질적인 작업결과물로 규정된다(정재삼·이진구, 2007 재인용).

컨설팅의 유형으로 Caplan은 내용에 따라 클라이언트중심형, 컨설티중심형, 프로그램중심형, 컨설티·행정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최성재·남기민, 2006). 클라이언트중심형은 컨설티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컨설티 또는 컨설티의 조력자를 만나 컨설팅하는 형태이다. 컨설티중심형은 컨설티의 지식, 기술, 자신감, 객관성 부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컨설티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이다. 프로그램중심형은 개인보다는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의 전체적인 욕구(프로그램 계획수립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이다. 컨설티·행정중심형은 컨설티가 관련 체계와 어떻게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또 다른 분류로 재정 예측, 환경 적응(environmental compliance), 인적자원 적응(human resources compliance), 기술 훈련, 시스템 설계 및 실행, 시장 조사, 노동계약 협상 등과 같은 전문적·기술적인 컨설팅프로젝트와 전략 기획, 조직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지원하는 관리지향적인 컨설팅프로젝트로 구분된다(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 또한 어려움에 처한 회사에게 그들의 마케팅, 재정, 그리고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팀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있다(Philips & Philips, 2002; 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 재인용).

이와 같이 컨설팅은 컨설턴트와 고객(client)간의 만남이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인간관계의 해결에 초점을 둔 카운슬링과 차별화된다(이의준, 1999; 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127 재인용). Barcs와 Wikinson(1995)은 컨설턴트가 지니고 있는 전문지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과제 수행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

고,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인의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부서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정재삼·이진구, 2007). Ferguson(1969)에 따르면 컨설턴트의 주요 역할 중에는 개인간, 집단간 및 개인과 집단간의 연계, 의사소통의 매개체, 환류의 권유, 발전방안 수립의 산파역, 문제해결 회의의 분석 적절한 심리적 분위기 조성, 상호지도 및 팀 구성의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다(최성재·남기민, 2006 재인용). 컨설팅은 궁극적으로 ‘성과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여러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성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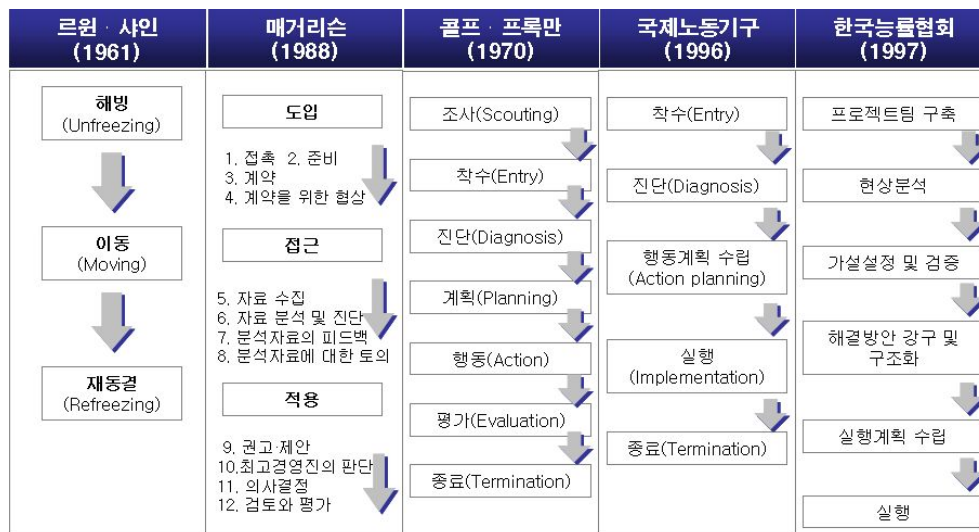
2. 컨설팅 모형

Schein이 제시하고 있는 컨설턴트의 역할 및 활동에 따른 모형을 보면, 컨설턴트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의 진단 및 해결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검토하도록 도와준다. 이 모형에서 컨설턴트의 역할은 지시적인 것과 비지시적인 것 사이에 위치한다. 지시적인 역할은 제안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지시한다. 훈련자와 교육자로서 정책과 지식을 가르치고, 공동의 문제 해결자로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과정의 상담자로서 문제해결 과정을 지켜보며 이슈가 되는 것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최성재·남기민, 2006).

Nelson과 Economy(1997)에 제시한 컨설팅 프로세스에서 컨설턴트는 클라이언트와 조직의 핵심 멤버의 요구를 주의 깊게 경청함으로써, 조직의 문제와 상황 또는 기회를 조사, 탐구하며, 수집된 데이터, 문제점, 그리고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을 분석한다. 나아가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대안들을 제공하며, 때때로 그들의 솔루션을 대행, 실제로 실행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컨설턴트의 능력, 스킬, 지식, 자원,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피환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Weiss, 1992; Philips & Philips, 2002: 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128에서 재인용).

Kadshin(1977)에 따르면, 컨설팅 과정은 준비단계, 시작단계, 활동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되, 효과적인 컨설팅은 각 단계마다 컨설턴트와 컨설티가 같이 관여해야 하고, 이러한 단계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가 전체적으로 잘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한다(최성재·남기민, 2006 재인용). Lewis와 Lewis(1983)는 컨설팅 과정을 접촉 및 시작, 계약과 원조관계 확립, 문제 확인 및 진단적 분석, 목표 설정 및 기획, 실행 및 환류, 완료·유지 및 종결로 구분하고 있다(최성재·남기민, 200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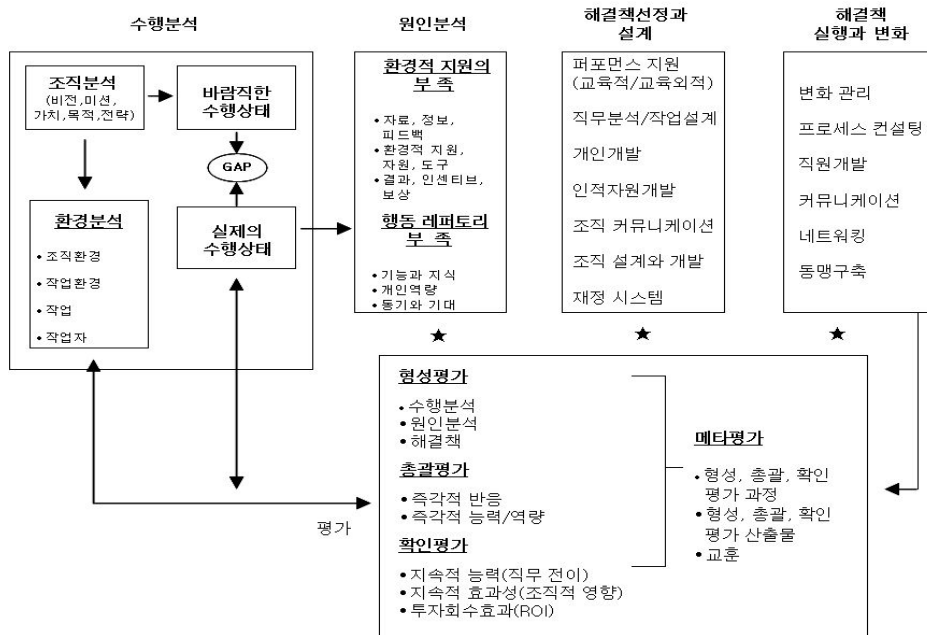
[그림 2-1] 컨설팅 프로세스 모델 예시



출처: 조일현·황광용·박인정(2003:129).

이외로 르윈·샤인은 컨설팅 과정(모형)으로 해빙, 이동, 재동결로 구성하고 있으며, 매거리슨은 도입(접촉, 준비, 계약, 계약을 위한 협상), 접근(자료 수집·분석 및 진단, 분석자료의 피드백, 분석자료에 대한 토의), 적용(권고 제안, 최고경영진의 판단, 의사결정, 검토와 평가)로 구성하고 있다. 콜프·프록만은 컨설팅 과정으로 조사(scouting), 착수, 진단, 계획, 행동, 평가, 종료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착수, 진단, 행동계획 수립, 실행, 종료로 제시하고 있다(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 재인용).

[그림 2-2] 정교화된 HPT 모형



출처: Van Tiem 외(2004): 정재삼·이진구, 2007 재인용.

한편, 퍼포먼스 컨설팅 서비스 프로세스는 ISPI의 수행공학모형(Human Performance Technology Model)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ISPI의 전형적인 HPT모형을 Van Tiem, Moseley 그리고 Dessigner가 정교화한 모형은 [그림 2-2]와 같다. 수행공학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수행분석, ② 원인분석, ③ 해결책 선정과 설계, ④ 해결책 실행과 변화, ⑤ 평가 등의 5가지 과정을 거친다. 수행분석에서는 수행착오(performance gap)를 찾아내고, 원인분석에서는 수행착오가 환경자원 부족에서 오는지 행동레퍼토리에서 오는지 그 원인을 파악한다. 해결책 선정과 설계에서는 근본원인이 밝혀지면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 평가과정은 수행공학 해결책을 실행한 결과를 실제의 수행환경에서 확인한다(정재삼·이진구, 2007:97-98).

기존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컨설팅 모형은 주로 컨설팅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과정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에 관한 정의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 컨설팅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목적으로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도록 한다. 한편, 컨설팅 모형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역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단을 토대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과 문제점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량 부족과 그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컨설팅 모형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중 일부 우수 사례들은 모형화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에 관한 분석은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조직과 법적 체계를 진단하고, 인구정책의 특성(지역의 특수상황 및 주민 욕구 반영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제 1 절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환경

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행체계

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행조직의 형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T/F체계, 기존부서전담체계, 그리고 분산조직체계가 해당된다(표 3-1 참조).

우선 T/F체계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체계이다. T/F는 사업부서 또는 담당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의 경우에 복지지원과, 보육, 아동, 가족보건, 행정지원, 인사, 예산, 인력개발, 여직원회 등 담당인력이 T/F에 참여

하고 있으며,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는 보건사업과, 기획실, 사회복지과 그리고 총무과가 T/F에 참여하고 있다. T/F 내 부서간 연계수단으로는 정례회의, 수시회의 등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44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인천 서구, 대전 서구와 중구, 경기 성남시, 전남 목포시 등 7지역에서 저출산 대응 T/F를 설치하여 대도시에 보다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기존부서전담체계는 기존의 부서 중 한 부서를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전담’ 부서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들로는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44지역 중 9지역으로, 인천 남구(가정복지과), 광주 남구(보건소), 경기 김포시(보건소), 경기 화성시(보건소), 강원 동해시(주민생활지원팀), 전남 화순군(보건소), 경북 영주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가 해당된다. 기존부서전담체계는 중소도시에서 보다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전담부는 주로 보건소(9지역 중 6지역)이다.

분산조직체계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총괄 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저출산 관련 부서들이 각각의 업무를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분산조직체계를 취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44지역 중 절반 이상인 28지역으로 나타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일부지역에서만 분산조직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농촌(군)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는 가정복지과, 보건소, 총무과(자치행정과, 기획예산실), 전산정보과, 가족보건담당,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여성청소년), 사회위생과(보건사업과), 여성아동정책부, 농정과(친환경농산과), 산업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등을 들 수 있다.

〈표 3-1〉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조직체계

구분	특징	지역사례
T/F 체계 (7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따른 3~4개의 전담부서가 있으며, 1개의 총괄부서가 있음. •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체계적인 추진관리 •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각 업무 추진 • 정례회의, 수시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상황보고 및 시책 발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연제구(복지지원과, 총무과, 보건소) • 부산 해운대구(여성아동팀, 보육지원팀, 보건소) • 인천 서구(복지서비스과, 기획공보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 대전 서구(복지지원과, 보육, 아동, 가족보건, 행정지원, 인사, 예산, 인력개발, 여직원회 등) • 대전 중구(여성아동, 보육, 모자담당, 총무, 인사, 노인, 방문보건 등) *저출산고령화대책팀' 명칭으로 구성·운영 • 경기 성남시(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 전남 목포시(보건사업과, 기획실, 사회복지과, 총무과)
기존 부서 전담 체계 (9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업무 외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업무 겸무 • 고유업무로 적극적 추진 미흡(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미흡) • 해당팀의 성격에 따라 정책방향 좌우 경향 • 보건소의 경우, 관련 부서의 행정협조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남구(가정복지과) • 광주 남구 (보건소) • 경기 김포시(보건소) • 경기 화성시(보건소) • 강원 동해시(주민생활지원팀) • 전남 화순군(보건소) • 경북 영주시(보건소) • 경북 경주시(보건소) •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
분산 조직 체계 (28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출산,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업무를 원 소관부서에서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수행 • 부서간 업무 연계 및 역할분담 불분명 -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미흡 *지역에 따라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구(가정복지과, 보건소, 총무과, 전산정보과) • 부산 동래구(여성청소년담당, 가족보건담당, 총무담당 과) • 대구 중구(건강증진, 주민복지과) • 인천 동구(주민복지과, 보건소) • 인천 옹진군(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 광주 동구(복지사업과, 총무과, 보건소) • 울산 북구(복지서비스과, 보건소) • 경기 남양주시(가족여성과, 총무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 강원 평창군(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정책부, 보건의료원) • 강원 양양군(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 충북 청주시(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 충북 충주시(보건소, 총무과, 자치정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충북 단양군(생활지원과, 보건소, 농정과, 건강증진과) • 충남 청양군(사회복지과, 보건사업과) • 전남 함평군(보건소,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산과) • 전남 강진군(조직관리팀, 방문보건계) • 경북 성주군(자치혁신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 경북 의성군(기획실, 총무과, 노인여성복지과, 보건소) • 경남 김해시(주민생활지원과, 허가과, 건강증진과, 여성아동과, 농업경영과)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이들 세 유형의 조직체계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T/F조직체계의 장점으로서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환경이나 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다 적합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T/F조직체계는 정책들간 우선순위 조정이나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1명의 인력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이른바 종합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여러 부서의 인력들이 T/F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T/F조직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부서전담체계의 장점은 기존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한 부서에서 저출산 대응 업무를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정책간 우선순위 조정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출산 대응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보건 의료, 가족정책, 보육·교육, 여성정책, 노동 등 광범위하여, 전담부서 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규모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구조상 힘이 약한 부서에서 저출산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을 수 없으며,²⁾ 그 결과 저출산 대응 업무가 전담부서의 업무 위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타부서의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나 예산배분 등에 대한 조정권을 갖지 못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전담부서는 원래 맡고 있는 고유업무에 저출산 대응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맡게 되는 경향이 있어, 두 업무 모두가 부실해질 수 있다. 결국 전담부서가 지역 환경과 주민 욕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2) 연구진이 방문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부서가 보건소인 경우에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다.

끝으로 분산조직체계의 장점으로서는 기존의 업무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들이 개별적이면서도 분산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정책(프로그램)간 유기적인 연계성이 약하며, 이에 따라 정책간 우선 순위나 예산배분 등의 조정이 곤란하게 된다. 그 경우 예산이 충분치 못한 기초자치 단체의 실정을 감안하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발이나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형태의 조직체계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다.

2.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자치법규: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 중요하다.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들 중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법제화한 사례들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법제화 영역은 크게 임신·출산·양육 지원(분석대상 44지역 중 18지역), 보육시설 운영(5지역),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5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법제화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법제화는 대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 지원과 출산 후 양육 지원으로 구분된다. 임신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사례로는 임신부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제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부산 해운대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목포시 임신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출산준비금 지원’ 등이 해당된다.

3) 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에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등 복무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3-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구분	조례명(주요 내용)
출산 임신 양육 지원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2007. 4. 10 제정) • 부산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임산부 직접방문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 • 용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07. 7. 26 개정) • 용진군 영유아보육료지급에 관한 조례(2007. 1. 11 제정) • 광주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7. 3. 30 제정) • 광주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 10 제정) • 대전서구 출산장려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출산장려기금 채원 조성, 기금 존속기한 및 용도, 출산장려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용, 임신·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 산 전 관리 등) •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2007. 6. 27 제정) •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07. 7. 31 공포예정) • 김포시 신생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7. 7. 31 공포예정) • 화성시 신생아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6. 4. 28 제정) • 화성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2006. 2. 24 제정) •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출산장려금, 인구늘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2007. 1. 5 제정)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2007. 1. 5 제정) •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2007. 4. 20 개정) •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2007. 4. 20 제정) •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 150만원이상, 다섯째 이상- 200만원 규정) •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출산준비금 지원(출산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있는 가족지원)* •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2007. 4. 20 제정) • 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06. 3. 14 제정) •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07. 8 제정) •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2005. 2. 24 제정)
보육 시설 운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보육시설의 업무에 대한 규정) • 광주남구 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 사항) •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조례(시설 설치 운영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 •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입소절차, 입소자격, 보육료납부, 비용부담 등)
다문화 가족 지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2007.3.15 제정) •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2007. 5. 30 제정) •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2007. 4. 20 제정) •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 체육행사 등)

주: *는 임신단계에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기초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의 상세 내용은 [부록 IV]를 참조한다. 대부분 조례들은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출산 후 일시금 지원, 수당형태의 매월 지원, 보육료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조례의 명칭은 서로 유사하나 세부 규정들(지급조건,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명칭은 상이하나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구문제들을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구정책 일반에 대한 법제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제화란 지역의 인구문제들을 명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개별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절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44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또는 프로그램)들은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결혼지원정책, 임신·출산지원정책, 양육·보육지원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외에 정책대상의 특성이나 정책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정보화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 지원

결혼지원정책은 미혼남녀들의 결혼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거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구정책 경진대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중 결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부산 동래구의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인천 서구의 ‘선남선녀 만남의 장’, 그리고 충북 청주시의 ‘결혼예비학교’를 들 수 있다.

부산 동래구의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은 관내 거주 미혼남녀(25-35세)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중 1회(미혼남녀 54명)만 실시하였다. 전문진행자의 사회로 이벤트(식사, 오락 등) 행사 후에 미혼남녀 간 매칭을 주선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행사 종료 후 프로그램 참가 남녀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2차 모임을 가져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등 만남의 기회를 지속시키고 있다. 동래구청에서는 그러한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예식장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청의 ‘선남선녀 만남의 장’은 목적이나 방법 측면에서 동래구청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부산 동래구청의 경우 참가대상을 관내 일반인으로 확대한 반면, 인천 서구청의 경우에는 참가대상을 8개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미혼남녀 60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이들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적합한 상대방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남녀에게 이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들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직업(구청 공무원)을 한정함으로써 만남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상 한계로 인하여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다.⁵⁾

한편, 충북 충주시의 ‘결혼예비학교’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결혼준비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충주대 평생교육원은 충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내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이성교제, 결혼의 조건, 행복한 가정만들기, 다가족의 의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수료자에게는 추가적으로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결혼 후 행복한 인생 설계, 임신·출산관련 건강한 정신과 육체 유지의 방법이나 검사 등에 관한 교육이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프로그램의 중요성

4) 프로그램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 등과의 연계가 관업무의 특성상 부정부패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5) 실제 부산 동래구청이나 대전 서구청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 성사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동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지속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결혼 지원 현황

지역	세부사업 명	목적 및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부산 동래구	미혼 남녀 만남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제공 • 대상: 동래구 거주 미혼 (25-35세) 남녀 27쌍, 5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동래구청 • 사업: 전문 진행자 초청(결혼전문기관 등 협조), 구청 전 부서 및 유관기관, 지역업체 등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예산: 300만원 • 만남에서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예식비 할인 • 행사 종료 후 자발적인 2차모임을 통해 인터넷 카페 운영
인천 서구	선남선녀 만남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주관 • 대상: 8개 유관기관 미혼 남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서화회(인천 서구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 • 사업: 레크리에이션과 화합의 장 운영 • 예산: 400만원 • 1회성 사업, 연계 프로그램 없음.
충북 충주시	결혼 예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미혼남녀의 건강한 결혼준비와 행복한 결혼 생활유도 • 대상: 관내 미혼 남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주최: 충주대 평생교육원에 위탁 • 사업: 건전한 이성교제, 결혼의 조건, 행복한 가정 만들기, 다가족의 의미 등 • 예산: 1,000만원 • 교육 수료자에게 풍진항체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혜택 부여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충주시 프로그램은 대상과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실제 결혼시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프로그램 참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동 프로그램은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 더 효과적일 것이나, 결혼적령기 남녀 대부분이 직장생활 등으로 인하여 참가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요컨대,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을 결혼전후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참가가 용이한 시기를 선정하며, 더 나아가 상시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임신·출산 지원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들 중 일부는 신혼부부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3-4 참조). 전남 목포시에서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YWCA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예비 엄마아빠되기 체험캠프’를 개설하였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07~2011년 동안 관내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기간(초기, 중기, 말기)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즉, 부모연약식 및 기념촬영, 산부인과 의료상담 및 진료, 라마즈 기체조교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에서도 신혼부부교실을 개설하여 결혼 초기 신혼부부 30명을 대상으로 ‘부모됨’과 관련한 아름다운 신혼설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검진서비스(혈압 측정, 간염 검사, 빈혈 검사, 매독·에이즈 검사 등),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성장발달촉진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자문, 대상 및 강사 선정, 교육 실시, 만족도 조사, 사후 평가 등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임산부 지원 현황

구분	세부사업 명	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전남 목포시	예비 엄마아빠되기 체험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지역 전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YWCA 등 사회단체와 연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기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부모연약식 및 기념촬영 - 산부인과 의료상담 및 진료 - 라마즈 기체조교실 • 소요예산: 1,000만원 • 사업기간: 2011년까지 지속 예정
경북 경주시	신혼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양육의 관심도 증진 - 건강한 부모역할교육 -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초기 신혼부부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보건소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신혼설계, 자녀출산,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성장발달 촉진법 - 혈압측정, 간염·빈혈검사, 매독·에이즈검사 등 • 소요예산: 20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이와 같은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의 취약점으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 정도가 낮

거나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은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으로 제한되어,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신혼부부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그램의 보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목포시와 경주시의 경우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검진서비스 위주이며, 가족과 부모됨의 소중함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동일 대상에 대해 주기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지속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산부 승용차 요일제 적용배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 등이 포함된다(표 3-5).

관내 공공기관에 임산부가 방문하는 경우 승용차 요일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로는 대전 서구,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제주시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유아(미취학자녀) 동승 시에도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종사 임산부(기관장의 허락 취득 후)에 한해서만 승용차 요일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은 그 대상을 일반 주민(민원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⁶⁾

6) 2007년 2월 12일부터 정부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해 제외하기로 하였다(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7. 2. 12). 구체적으로 임산부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이를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그리고 소속 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한 경우이다. 요일제 적용 제외기간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하고 있다. 제외기간 중에는 타 공공기관에도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공립대학병원 등에 출입도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유아동승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은 만 7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는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 또는 부착한 경우가 해당된다.

〈표 3-5〉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임신부 편의 지원 현황

구분	세부사업 명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부산 동래구	임산부 우대 및 배려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 민원실 내 임신부 전용창구·대기석 설치 • 지역업체(이마트 등)와 연계하여 임신부 우선 계산대 설치, 도우미 운영, 임신부 구매물품 배달서비스
부산 연제구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 구청 1층 민원실 내 전용창구 설치
부산 해운대구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 임신부 방문시 신속한 안내, 접수 번호표 없이 우선 민원처리 • 임신부 전용석 마련 • 구청내 민간인 대상 수유방 설치
대전 서구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민원실 등 방문 임신부	•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 정·운영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임산부·유아·동 승차량으로 본 인 신청시	• 임신부와 유아동승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전 중구	민원실 임신부 전용 창구 개설	임산부 및 어르신	• 민원실내 임신부 및 어르신을 위한 전용실 개설 및 행정서비스 우선 지원
경기 화성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승용 차요일제 면제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임신사실이 확인되거나, 차량에 유아가 탑승하였을 경우 공공기관출입 무조건 가능 •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여 악용되는 사례 없도록 조치
경북 영주시	임산부 우선창구 설치	임산부	• 민원실 내 임신부 방문시, 행정 우선 처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영주시청 및 산하 읍면동사무소	• 임신부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임신부 전용주차장 설치 • 저출산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 효과 • 사업량은 24개소(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 소별 1면 이상 설치(24개소 26면 완료)
경북 의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 보건소 내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지정
제주 시	임산부·유아동승 차 량 요일제 적용 제외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	• 임신부 및 유아동승 차량에 한해 요일제 면제차량증명 스티커 발부 (전체 승용차 요일제 차량 1,491대 중 83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임신부 전용주차장은 경북 경주시와 의성군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임신부를 ‘한시적 장애인’

으로 규정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일정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도 임산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승용차 이용 임산부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산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 배제나 전용주차장 설치의 전국적으로 확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임산부 우대 창구는 부산 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 대전 서구·중구, 경북 영주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임산부가 민원업무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 대기시간 없이 바로 ‘임산부 전용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 동래구의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관내 업체(이마트 등)에까지 확대하여, 임산부 우선 계산대 설치, 임산부 도우미 운영, 임산부 구매물품 배달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운대구에서는 구청 방문 민간인을 위한 수유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도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하는 임산부가 그리 많지 않아 다른 민원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세할 것이다. 문제는 임산부 우대창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우대창구가 임산부의 거동이나 착석의 안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산부 공무원을 위하여 착석이 안전하고 쾌적한 의자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나아가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를 동반한 민원인에게까지 우대창구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보육·교육·보건 서비스 지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표 3-6). 경기 성남시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육나눔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 및 3자녀이상 가정의 아동에게 무료 수강 및 학원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성남시 학원연합회에 가입된 일부 학원들에만 적용되고 있는 관계로 지역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며, 한 학생이 중·고등학교 전학년 동안 계속 지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성이 있다.

제주시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서비스(신장, 체중 등 8개 항목)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소의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이 없는데다가, 보육대상 아동의 신체이상을 발견·치료하는 보육-보건연계사업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서비스 대상 항목이 지나치게 기본적인어서 시설 이용 영유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성이 있다.

〈표 3-6〉 기초자치단체의 보육·교육·보건 서비스 지원 현황

구분	세부사업 명	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대전 서구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0-7세 아동 중 이용희망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 • 운영기간: 2007. 2 ~ 12. • 운영장소: 2개소 • 이용료: 시간당 최대 2,000원 • 예산: 운영비(8,300천원)/교사인건비(34,440천원)
경기 성남시	아름다운 교육나눔 운동	저소득층 및 3자녀이상 가정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연합회와 협조로 저소득층과 3자녀이상 가정 아동에게 무료 수강 및 학원비 할인 • 주최: 성남시 학원연합회 • 사업시행 시기: 2007. 5 ~ • 소요예산: 비예산
충남 청양군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관내 12개 보육시설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유아기의 신체 발육 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로 적정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예방 • 시행일: 1997. • 지원대상: 관내 12개소 보육시설 영유아 • 지원액: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에게 무료 건강검진 • 2007년도 예산액: 7,070천원
제주시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관내 보육시설 314개소 아동 14,26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신장, 체중 등 8개 항목), 유아(신장, 체중 등 8개 항목) • 검진방법: 보육시설 방문검진 • 운영기간: 2007. 4 ~ 11. • 소요예산: 60,000천원 (영아 1인당 4,000원, 유아 7,000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보육·교육지원은 보육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다(표 3-7). 구체적인 사례로 간식비 지원(경기 성남시와 김포시, 전남 목포시), 급식 지원(경기 김포시), 전기안전 점검(경기 남양주시), 냉난방 지원(부산 연제구, 대전 서구, 경기 화성시), 평가인증비 및 살균소독비 지원(인천 동구) 등을 들 수 있다. 지원방법으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에 동일한 내용(금액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이용 아동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후자의 냉난비 등은 이용 아동수보다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간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육시설 대상 지원이 실제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표 3-7〉 기초자치단체의 보육·교육시설 지원 현황

구분	세부사업 명	목적 및 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부산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 영유아 보육시설 88개소, 유치원 15개소	• 보육시설 1개소당 400천원, 유치원 300천원 • 소요예산: 40,500천원
인천 동구	보육시설 평가인증비 및 살균소독비 지원	• 2007년도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 살균소독비: 동구 관내 보육시설 30개소	• 평가인증비 21인 이상(30만원), 21인 미만(25만원) 지원(총 5,000천원) • 살균소독: 공립 연3회, 이의 연1회 이상(총 8,800천원)
대전 서구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 관내 보육시설	• 20인 이하: 200천원, 30인미만: 350천원, 30인이상: 400천원, 40인이상: 450천원
경기도 성남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 보육시설 영아, 장애아, 야간보육아동	• 소요예산: 828백만원 (1일 500원) • 추진실적: 2006년 5,161명
경기 남양주시	보육시설 전기 안전점검비 지원	• 보육시설 중 인가일 기준 1년이상의 시설 375개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리지점에서 전기안전점검 • 소요예산: 16,000천원
경기도 김포시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 관내 보육시설 134개소	• 분기별로 시설내 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 5명 미만 시설: 미지원, 6~20명 시설 30만원, 21~49명 시설 45만원, 50~100명시설 60만원, 101명 이상 시설 75만원(총 206만원)
	김포급썰 보육시설 급식지원	• 관내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 142개소	• 김포쌀 44,000원/20kg가격의 30% 지원 • 소요예산: 78,189천원
경기 화성시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 관내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325개소	• 민간보육시설 60만원, 가정보육시설 40만원
전남 목포시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197개소 2,500명)	• 보육시설 이용 3세 이하 영아에 월 4,500원 연 6개월 간식비 지원(예산 75백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4. 자녀양육 지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의 자녀양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험방식지원, 수당방식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방식, 장학금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보험방식 양육 지원

보험방식지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출생아(아동)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로 보장내용은 주로 생명, 상해, 질병 등 상해 및 의료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 보험방식지원을 도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로는 인천 옹진군, 광주 남구, 경기 김포시, 강원 평창군, 전남 목포시·함평군·화순군, 경북 성주군이 해당된다(표 3-8 참조).

인천 옹진군과 전남 함평군은 보험지원 대상으로 모든 출생아를 설정하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출산순위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로 전남 목포시와 화순군은 둘째아 이상을 그리고 광주 남구와 경기 김포시는 셋째아 이상을 보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험계약방식은 대체적으로 5년 납입 10년 보장의 중장기계약(광주 남구, 경기 김포시, 전남 목포시, 함평군, 화순군)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인천 옹진군, 경기 김포시)들은 매년 계약 갱신 방법(1년 납입, 1년 보장)을 채택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기적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이주시 보험료 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예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작게는 1만원에서 4만원까지 다양한 편이나 아직까지 4만원을 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을 통한 자녀양육 지원은 수당이나 보육료 지원과 달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방식지원은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표 3-8〉 기초자치단체의 보험방식 양육 지원 현황

구분	사업명칭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인천 옹진군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보험기간 동안 관내 출생 등록 신생아의 경우 계속 관내 거주할 경우 5세까지 보장, 출생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입원 의료비, 상해의료비, 암진단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식중독, 골절진단, 화상 발생 위로금, 특수 교육자금, 자녀 배상 책임 보상 • 소요예산: 총 17,000천원
광주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상해보험, 만기환급형 보험, 5년납입/10년 보장 • 소요예산: 34,000천원
경기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월 1일 이후 김포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장내용: 상해 및 의료보장 5년 • 소요예산: 25,830천원
강원 평창군	저출산 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월 3만원 이하 5년간 지원 • 18년간 순수보장형의 보험 보장
충남 청양군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보육시설 영유아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1인당 월 1만원 (650명)
전남 함평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함평군에 거주하면서 05년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 전원 •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후 12개월 미만 전입한 아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매월 22~40천원 범위 내에서 5년납입 - 10년보장 혜택, 만기시 환급금: 군세입 조치 • 소요예산: 166,800천원
전남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순군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둘째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납입/ 10년 보장(전출, 사망시 자동해지) - 보장 내역: 질병치료 입원비, 골절치료비 등 24종 - (주)금호생명보험과 연계하여 매월 22,000원 상당의 건강보장 보험 지원 • 소요예산: 49,240천원
전남 목포시	신생아 보험가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이상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매월 13,000원 5년 납입, 10년보장 혜택 • 지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 시 신청서 작성(동) → 심사 후 지급 - 보험계약사항 각 세대별로 통보 안내 보험적용 • 소요예산: 406백만원(연간)
경북 성주군	성주 아기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보건(지)소에 등록되어 관리중인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모성사망, 장해출산위로금, 저체중아 육아비용 - 신생아: 모든 담보 - 보험기간 : 2007. 1.1 ~2008. 12.31 • 소요예산: 약 25,000천원 (1인당 184,000원×135명)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한편, 경북 성주군의 ‘아기보험 가입’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보건(지)소에 등록되어 관리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보장 내용도 모성사망, 장해출산위로금, 저체중아 육아비용 등 임산부에 한정되

어 있다. 충남 청양군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 아동에게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위한 의무상해보험을 먼저 가입한 후 그 내역을 증빙하여 행정기관(청양군)에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보육시설에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건강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경우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지원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보험방식지원의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보험지원은 셋째아 이상으로 대상을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어 보편적 접근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둘째, 외지에서 출생 후 전입한 영유아를 정책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투자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부 지역의 경우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보장범위가 제한되면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보험방식지원이 상해나 질병 등의 의료보장에 한정되어 있을 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교육보장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로 교육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방식지원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발달계좌(CDA)와 같은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나. 수당방식 양육 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수당 방식의 양육 지원 현황은 <표 3-9>에 제시되어 있다. 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막대한 양육비용 부담이다.⁷⁾ 양육비용은 보육료뿐만 아니라 의료비, 분유 및 기저귀 등 생필품 구매비용 등 포괄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적인 보육료 지원만으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OECD

7) 최근 기혼여성의 출산중단 사유 중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나타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0~2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희망하는 여성들이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약 30%로 영아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이삼식 외, 2005a).

국가 대부분이 공보육을 확립하였으면서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양육비 또는 보육료(유아교육비)의 명목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급 방식으로 수당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출산장려금제는 출산 시점을 전후로 현금이나 축하물품(출산관련 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액수 또는 물품의 종류는 지자체간 차이가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체로 모든 출생아이나,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으로 출산순위를 제한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있다. 일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출산순위별로 차등을 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지원 금액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첫째아의 지원금액은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다양하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도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몇몇 사례는 2회 또는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1회에 모두 지급하고 있었다. 출산장려금품을 분할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오랫동안 관할 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의 전달방식으로는 통장입금방식 또는 직접전달방식을 채택하고, 물품의 경우는 보건소나 담당부서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단체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격려 및 축하와 함께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들(충북 청주·단양, 경북 영주, 경남 김해·함안 등)의 양육비 지원은 양육수당으로 불리울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0~5세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월 수당액으로 7만원 또는 15만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전북 완주, 순창, 정읍, 전남 강진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⁸⁾ 서울시 중구에서는 셋째아 이상 중 보육

8) 단기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양육수당이라기보다 출산장려금 형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기존의 정부지원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차등보육료지원제도에서 소득계층별, 아동연령별 지원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족에게는 차액을 그리고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가족에게는 전액을 군비로 지급하여 이른바 무상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에도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아동들 중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3~4세 아동(170개소 820명)을 대상으로 수납한도액(정부지원 100%)과 실제 보육료와의 차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보육프로그램은 재원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보육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료는 대체로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존 정부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 중구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10만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시설에 지급하는 이중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수당방식의 양육지원 즉, 출산장려금(물품), 양육비, 보육료(유아교육비)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다. 경기 화성시와 남양주시는 출산장려금과 보육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양육비와 보육료를 동시에 지원하는 지역은 전무하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양육비 또는 보육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의 50%를 지원하여 중복적인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표 3-9〉 기초자치단체의 양육비용 지원 현황

지역	출산장려금품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서울 중구	둘째아 이상	둘째-2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넷째-300만원(1회)	보육시설 비용 셋째아 이상	10만원 (72개월 매월)	3세미만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이상	정부지원금 제외후 보육료 50%지원
대구 달서	셋째아 이상	30만원(1회)				
대구 남구	셋째아 이상	30만원(1회)			보육시설이용 1-2 세 셋째아 이상	20만원(매월)
인천 옹진	모든 아동	첫째-50만원(1회) 둘째-100만원(1회)			모든 아동	보육시설수납 보육료 100%
광주 동구	모든 출생아	첫째-5만원 상품권 둘째-5만원 상품권 셋째-50만원(1회)				
광주 남구	쌍둥이	쌍생아-50만원(1회) 삼생아-100만원(1회)				
울산 북구	셋째아 이상	10만원(1회)				
강원 동해	둘째아 이상	둘째-35만원(1회) 셋째-75만원(1회)				
강원 양양	모든 출산가정	첫째-10만원(1회) 둘째-10만원(12개월) 셋째-10만원(36개월)				
경기 성남					보육시설 이용 0-5세 , 셋째아 이상	국공립 보육료 수납액의 70%
경기 김포	여성장애인 출산자녀 셋째아 이상	100만원(1회)			보육시설 이용 25개월~5세, 셋째아 이상	만1세-159천원 만2세-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5세-81천원
경기 화성	둘째아 이상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시설이용 셋째아 이상	1인, 최고 10만원
경기 남양주	둘째아 이상	둘째-30만원 셋째-100만원			보육시설·유 치원이용 아동	입소료 3만원 (년 1회)
충북 충주	임산부, 모든 출생아	임산부 10만원(1회) 첫째-30만원(1회) 둘째-10만원(1년간 매월) 셋째-15만원(1년간 매월) 다태아는 각100만원(1회)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기준단 가의 20~30%
충북 청주	모든 출생아	첫째-3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0-5세 셋째아 이상	15만원(매월)		
충북 단양	임산부	단양사랑상품권 20만원			0-5세 셋째아 이상 (가족지원)	소득층위별 정부지원단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표 3-9〉 (계속)

지역	출산장려금품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충남 청양	모든출생아	첫째-3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0~5세 셋째아 이상	10만원(매월)		
충남 당진	모든출생아	첫째-20만원(1회) 둘째-3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충남 서천	모든출생아	첫째·둘째 30만원(1회) 셋째80만원+20만원상품(1회)				
전북 순창	모든출생아	첫째·둘째-80만원(1회) 셋째이상-330만원(1회)	모든 출생아	첫째,둘째-5만원 (1년 매월) 셋째 5만원(3년 매월)		
전북 정읍	둘째아 이상	둘째-20만원(1회) 셋째이상-30만원(1회)	저소득층	0~3세5만원(매월) 4~5세25만원(매월)		
전북 완주	셋째아 이상	10만원 상당 용품 30만원(1회)	셋째아 이상	10만원(9개월간 매월지급)		
전남 목포	모든출생아	첫째-1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전남 함평	모든출생아	첫째·둘째 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08부터 10년간 연 100 만원 적립 천만원통장)				
전남 강진	임산부 모든출생아	20만원(출산준비금) 첫째-120만원(년간) 둘째-240만원(년간) 셋째-420만원(년간)	셋째아 이상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 각 100만원		
전남 화순	셋째아 이상	셋째-50만원(1회) 넷째-100만원(1회)				
경북 경주	둘째아 이상	둘째-10만원(1년간 매월) 셋째-20만원(1년간 매월)				
경북 영주	모든출생아	첫째·둘째-50만원(1회) 셋째-50만원(1회)	셋째아 이상	10만원(3년간 매월)		
경북 성주	임산부 모든출생아	임산부·첫째-10만원(1회) 둘째-2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경북 의성	모든출생아	첫째·둘째-100만원 셋째-150만원(2회분할)				
경남 김해			0·5세 셋째아 이상	10만원(매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경남 밀양	둘째아 이상	둘째-20만원 셋째-100만원			4세 셋째이후 아동 64명	보육료 전액
경남 함안	둘째아 이상	둘째-50만원(1회) 셋째-520만원(5회)	둘째아 이상, 만4세까지	7만원(매월)		
제주	셋째아 이상	셋째-50만원(1회) 넷째-100만원(1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인구문제의 심각성, 자치단체장의 의지, 재정자립도 등 여러 여건들에 따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들과 그렇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간에도 지급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기초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둘째,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타지로부터 전입한 아동들이 배제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거주기간의 형평성 문제).⁹⁾ 셋째, 대체로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함으로써 수혜 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아동의 출산순위간 형평성 문제). 넷째, 보육료의 경우 대부분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설비용 아동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시설이용 여부의 형평성 문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아동수당(또는 양육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¹⁰⁾ 여기서 아동수당은 출산을 회복, 건전한 아동성장 환경 조성 등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수혜 대상 출산 순위를 셋째아에서 둘째아, 첫째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기간도 2세 이하에서 5세 이하, 9세 이하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다. 인센티브 방식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3-10). 구체적으로 대전 서구에서는 공연관람 및 회원 모집시 다자녀가정(3

9) 수혜자격의 기준으로 거주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 일반적이다. 단기간 내에 다시 전출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북 순창군은 부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금을 50% 삭감하고 있다.

10)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세계 172개국 중 88개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제도(공공부조, 자산조사)를 시행하는 국가는 27개국, 보편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61개국(24개국은 고용연계방식) 등이다. 캐나다, 영국(아동수당제도 병행), 뉴질랜드, 미국은 조세제도를 통해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자녀 이상)에 대한 10% 우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도서 특별 대출 서비스와 문화교실 접수시 여성 수강신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 서구와 경기 성남시의 정책은 문화영역에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가족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경기도 ‘I사랑카드’에서 셋째아 이상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가맹업체별 할인 서비스를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한 드사랑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동 정책은 여전히 가맹업체 중 아동관련 지출이 많은 분야가 상당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표 3-10〉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양육일반지원: 서비스제공 방식

구분	세부사업 명	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대전 서구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3인 이상)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관람 및 회원 모집시 다자녀가정에 10% 우선 할당제 도입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단체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신설 프로그램 - 주민대상 교육 또는 연극 • 비예산 사업
경기 성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3자녀 이상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녀 이상 가정에 도서 특별 대출 서비스 • 문화교실 접수시 3자녀 이상 여성 수강신청 우대
경기 김포시	다자녀가정 우대할인 사업	김포시 거주자로 둘째가 2001년 이후 출생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사랑카드발급을 통한 가맹업체별 할인우대 • 할인업체: 음식점, 이·미용, 개인택시, 자동차 경 정비, 학원, 주유소, 사진관 등 • 경기도의 I사랑카드와 차별적으로 둘째아이상부터 지원 • 소요예산: 5,000천원(카드발급비)
경북 성주군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 13세 미만 3자녀이상+ 50세 이하 세대주 가정의 가족 중 2촌이내 직계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 및 뇨검사, X-ray 촬영, 예방접종, 일반 및 치과, 한의과 진료 • 사업기간: 2007~2010년 • 소요예산: 800만원(1가구당 5만원) •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일주일 이내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장이 검토하여 14일 이내 신청인 통장에 입금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경북 성주군에서는 셋째아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진료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민간병원에서 혈액검사, 뇨검사, X-ray 촬영, 예방접종 등 서비스를 받고, 이를 보건소에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체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많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라. 장학금방식 양육 지원

장학사업은 재단법인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문데, 장학금 제공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중앙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은 보통 모금과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2005년 설립 당시 기존의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이월액 32억원과 당해 모금액 21억 4천만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그 후 매년 약 20억원의 모금액을 조성하였고, 2007년 말까지 10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자체의 출연금이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장학재단이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곤란하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장학사업은 기본적으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주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 자녀 또는 체육 장학생과 같은 분야별 특기생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1〉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한 지역별 장학금 지원사업(기금 운영현황)

구분	기금 명칭	추진내용	비고
경기 화성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성적 우수자, 저소득층 자녀 등	2006년
충남 서천	서천사랑장학회	성적 우수자, 특기생 등	1999년(군출연금+성금)
전남 강진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저소득층 자녀, 재능우수자 등	2005년 설립
경북 의성	의성장학금 기금	향토 인재 발굴 및 육성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심사자료) 분석.

5. 다문화가족 지원

현재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대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언어훈련, 인권침해, 기타 애로사항 등)에 국한될 경우, 저출산 대응과 관련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한국국민으로서 그들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 지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들(인천 남구, 경기 성남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의성군 등) 모두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 중 강원 동해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원 동해시에서는 동해시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하여 이주여성 임산부 및 유자녀 가정에 방문교육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이주여성 임산부를 위한 건강교실을 열어 산전후관리, 고위험 임신관리 등을 지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이주여성 임산부의 산전진찰,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국제결혼가정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도 단기적인 것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사는 관내 노총각 등의 국제결혼 성사와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결혼여성의 규모나 인구학적 특성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많은 OECD 국가들(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이민자의 출산율은 전체 출산율에 기여하고 있다.¹¹⁾ 따라서

11)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적 이민(immigration)이 활발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민자의 출산율이 비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이삼식 외, 2007).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출산율(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2.0이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1.7로 히스패닉 3.0, 흑인 2.4,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등으로 한국인을 제외하면 백인이 가장 낮다. 미국 이민 주요 10개국 여성의 출산율은 평균 2.86명으로 출신국가의 출산율 평균(2.32명)보다 높게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1996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은 인도인 2.21,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

기초자치단체들도 국제결혼 성사와 이주여성의 정착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제결혼가정의 출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3-1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국제결혼가정 지원 현황

구분	세부사업 명	목적 및 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인천 남구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나와 너 그리고 우리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안정적 한국생활 조기정착 및 생활환경 조성 • 대상: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와 학산문화원네트워크, 인하대 동아리 회원간 멘토 연결 • 우리말배우기, 한국생활문화(한복입기, 다도, 김치담그기) 체험 • 연극으로 나누는 생활이야기, 관계치유 프로그램 • 가족캠프 • 주최 및 주관: 남구/ 남구 학산문화원, 참가자: 30명 내외 • 운영기간: 2007.07~10월 (4개월) - 6월중 참여자 모집 • 소요예산: 10,000천원(구비)
경기 성남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프로그램	결혼여성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의 소통과 이해증진교육 • 한국문화의 이해와 생활예절실습 등 • 추진체계: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외국인 주부 친정어머니 모시기 결연사업 별도 추진
강원 동해시	임신에서 육아까지의 맞춤형 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 중 임신부 및 유자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 도우미 파견 • 현장견학(남양유유 천안공장) 및 관내 공공기관 견학 • 아기용품 만들기 • 주최 및 주관: 동해시/ 동해가정법률사무소 동해지부 • 소요예산: 7,071천원(동해시 여성발전기금)
전북 정읍시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친정어머니 결연) 사업	결혼여성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월 1회 • 대상: 30명(결혼이주여성) • 내용: 이주여성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 주관: 공직자 가족봉사회/ 서국회
전남 강진군	결혼여성 이민자 임신부 건강교실	결혼여성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여성 이민자 중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고위험 임신과 관리, 분만과 진통과정, 산후관리 지도 • 소요예산: 30천원

각각 4.90으로 영국인의 1.67에 비해 아주 높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1997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옛 유고슬라비아인 2.41, 터키인 1.91 등으로 스위스인의 1.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독일 거주 터키인의 1996년 합계출산율이 2.40으로 독일인의 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999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모로코인 2.14, 알바니아인 2.60, 튀니지인 3.30, 이집트인 3.40 등으로 이탈리아인의 1.2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표 3-12〉 (계속)

구분	세부사업 명	목적 및 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경북 의성군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임산부 차량지원	임신한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 여성결혼이민자 사전진찰, 영유아 예방접종 시 차량지원으 로 정서적지지(비예산 사업)
	결혼여성이민자 건강증진 통역요원 근무	결혼여성이민 자 임산부 및 영유아 모	• 예방접종, 모자보건, 임신부관리, 정서적 지지 통역 및 홍 보 (베트남어) • 2007년 8~ 12월
	결혼여성이민자 대모 및 자매 결연식	결혼여성이민자 및 남편, 시부모	• 결혼여성이민자의 대모 및 자매결연으로 타 문화의 이해 및 정서적 심리적 지지
경남 김해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농촌거주 영농종사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후 결혼소요비용 일부 지원 -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우보증서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신청 자 실태조사 실시 •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시행후 3년간 지속 관리 • 국제결혼희망 농촌총각은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에 제출 •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대상자 선정
경남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산전·산후교육 실시	여성결혼이민 자 중 임산부 및 초보엄마 30명	• 주최 및 주관: 밀양시/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 운영기간: 2007년 7월 9일~ 7월 30일 (4회) • 소요예산: 1,100천원(보조금 1,0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프로그램: 임신부의 출산전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및 질 병 대처법, 라마즈체조 및 모유수유법, 태교음악 및 아기장 난감만들기
경남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가족 되어주기 결연사업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202명 (결연 77명)	•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친정어머니 역할 수행 • 한국문화에 대한 조언 • 문화탐방 나들이 등을 통한 관계증진 • 주최 및 주관: 밀양시/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6.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여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공무원)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크게 임신 여성공무원보호와 자녀양육 지원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례로, 대전 서구에서는 임신공무원을 위하여 점심시간

을 이용하여 태교프로그램(음악감상, 독서)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임신공무원(또는 배우자)의 당직 및 비상근무를 배제하고, 임신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며 보호의자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는 임신 및 출산 전후 보직이동을 최소화하고, 임신공무원을 각종 행사 차출에서 제외시키고, 출산축하 꽃바구니 및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산휴가비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에 임신부·영유아 건강교실에 참가를 허용하고, 임신부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3〉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직장환경 조성 사례

구분	세부사업 명	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대전 서구	공공기관 태교시간 마련	본청 및 사업소, 관내 기관단체 등	• 점심시간과 연계하여 휴식 포함한 태교시간 마련 • 음악감상과 육아를 위한 독서시간 활용
경기 성남시	다자녀(3자녀)이상 직원 우대	다자녀(3자녀 이상) 직원	•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또는 공연” 등 무료 및 할인 적용(2008년도 시행 예정)
충북 청주시	청사내 직원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공무원 자녀	•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방과후 직원자녀를 위하여 구청내 공부방 설치 및 운영 • 소요예산: 21,901천원(2개소)
경북 영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본인 임신중/배우자가 임신 중인 공무원	• 공무원 중 임신부와 배우자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당직과 비상근무 면제 • 영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임산부 희망부서 우선 배치	출산전후 여성공무원	• 임산부 대상 조사를 통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 • 2007년 5월부터 시행
	임산부 보호의자 제공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 신체조건을 고려한 의자를 선택하여 희망하는 임산부공무원에게 제공 • 실적: 본청 여직원의 6%
	홈페이지 출산장려방 운영	전체 직원	•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홍보 •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다양한 정보 제공 •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경북 성주군	임산부 우대 사업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 각종 행사 차출 제외 • 출산축하 꽃바구니 및 복지포인트 10p, 출산휴가비 지급 • 임신부, 영유아 건강교실 근무 시간내 참가 허용 • 임신 및 출산 전후 보직 이동 최소화 • 임신부 전용 주차 시설 설치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다자녀(3자녀 이상) 직원	• 휴양시설 이용 우대(3자녀 이상 직원 우선 배정) • 장기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선발시 우대 •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대상 우선 선정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2차 심사자료) 분석.

공무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충북 청주시에서 청사 내 직원자녀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2008년부터 다자녀(3자녀 이상) 직원에 대해 문화시설 또는 공연 관람에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홈페이지 출산장려방을 운영하여 공무원에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홍보하고,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는 다자녀(3자녀 이상) 직원에 대해 휴양시설 이용 우대, 장기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선발시 우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대상 우선 선정 등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7.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남구에서는 ‘출생기념 예금통장 발급’ 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신생아에 대해 천원이 입금된 출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다. 동 사업은 아동발달계좌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계속 입금할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표 3-14〉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사례

구분	세부사업 명	목적 및 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인천 남구	출생기념 예금통장 발급	남구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우체국과 연계하여 출생기념 통장 발급(비예산 사업) • 우체국 통장에 1천원이 입금된 출생아 명의의 통장 개설 •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이 출생신고시 통장발급(교환권) 안내 - 우체국에 교환권 제시시 통장개설
경북 경주시	출산장려 홍보관 운영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2007” 행사장에 출산장려 홍보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하나 더 낳기” 서명 운동 • 출산장려 표어 포스터 공모 수상작 전시 • 전국 각 시군의 출산장려 시책과 홍보물 전시 •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및 경주시 출산장려사업 홍보 • 사업기간: 2007년 9월 7일 ~ 10월 26일 • 소요예산: 1,000천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경북 경주시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2007. 9.7~10.26)’ 행사장에 출산장려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아이 하나 더 낳기” 서명 운동, 출산장려 표어·포스터 공모 수상작 전시, 전국 시군의 출산장려시책과 홍보물 전시, 경주시 출산장려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일회성 행사로서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사업은 주로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와 경기 성남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교양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이용권을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15〉 기초자치단체 공공교양·교육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우대 사례

구분	부산 동래	경기 성남
대상	다자녀가정 자녀 (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신청자 중)	- 세자녀 이상 가정 - 세자녀 이상을 둔 여성
기간	연 중 상시	연 중 상시
내용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접수자 중 다자녀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킴	-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시 과목당 30% 우선접수 - 여성문화교육 우선모집 및 수강료면제 혜택 부여 (모집 정원대비 5%범위 내, 연 160명 수혜 예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8. 임신·출산·양육관련 정보망 구축

서울 중구, 인천 서구, 충북 충주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는 육아코디네이터(coordinator)사업으로 육아상담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실과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다.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보육사업, 저출산지원사업, 보육시

설 등 주로 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이용자 요구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세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행복한 5 Family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5인가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 제공, 결혼·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 제공, 보건소 출산장려 지원프로그램 전자책 제공, 함께 나누기 마당을 통한 개인정보 공유공간 제공 등이 포함된다. 보육·교육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는 없다. “행복한 5 Family 홈페이지”는 개인이 ID를 통해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Q&A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아가사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 등록자 개별적인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망을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서구도 지역사회 보육상담실을 운영하여 육아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서구는 별도의 정보실이나 상담실을 운영하기보다 복지서비스과에 일용직원 1명을 채용하여 문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서도 출산장려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임신·출산·양육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자(임산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off-line(전화)으로 해당 사업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의 Mom & Baby Homecare Service Plan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 의료진과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방법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출산 후 15일이 지난 임부 8명에게 전화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6〉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보망 구축

구분	세부사업 명	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서울 중구	육아 코디네이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대응기술 제공 - 육아 불안감 최소화 • 대상: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상담실 운영: 내소 또는 방문상담 - 정보제공 A: 우편, SMS, ACS, E-mail, 전화 등 - 정보제공 B: 홈페이지, 중구광장, 지역신문, 지역방송, 정보지 등 • 운영기간: 2006년부터
인천 서구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영유아 영양, 건강, 보육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내에 보육상담실 운영(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등) • 영유아의 영양, 보건, 생활예절 등 • 육아정보 교환 •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충북 충주시	행복한 5 Family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출산·양육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개인 정보 공유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 제공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정보 제공 - 보건소 출산장려 지원프로그램 전자책 제공 - 함께 나누기 마당을 통한 개인정보 공유 공간 제공 등
경북 성주군	Mom & Baby Homecare Service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 의료진과 실시간 상담서비스 • 대상: 성주군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금요일마다 출산후 15일 이후 임부 8명에게 전화 콜서비스 • 비예산 사업
경남 김해시	출산장려정 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정보구축 및 모자 보건서비스 제공 • 대상: 출산장려정보센터 등 록자 (임산부 및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임신, 출산관련 프로그램의 전산화 · 월별, 분기별 관리대상자 출력 및 관리내용 기록관리 · 기록관리사항을 통계처리 하여 사업 평가 자료화 · 향후 사업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내 출산 장려 관련 자료 생산 - 출산장려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임신, 출산, 육아관련 각 부서별 정보 공유 · 혼인신고시 출산장려정보센터 이용 홍보리플렛 배부 · 각종 홍보매체 활용 출산장려정보센터 이용 안내 • 운영기간: 2005년부터 연중 • 소요예산: 756,599천원(2007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제3절 기초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시사점

이 장에서 분석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 대응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양육비용 경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조정(coordination) 및 통합(integration)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도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저출산 대응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결과는 지자체간에 차이가 있다. T/F를 구성하여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부서들이 저출산관련 업무들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T/F나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T/F의 핵심부서나 전담부서의 원 업무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 다른 부서의 관련 업무들은 별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 규모나 타 업무들과 관계를 고려할 때,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의 컨설팅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저출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정책들을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저출산 대응 종합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법제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보육료나 수당 지급 등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들에 한해 예산집행의 근거로서 조례·규칙을 제·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을 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마스터플랜은 지역사회 진단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즉, 마스터플랜 형식의 법제화 노력은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2007년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들은 결혼 지원,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 지원,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정보망 구축 등 다양하나, 개별 지자체별로 보면 극히 일부 정책만을 도입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 대상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정책 내용이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정책은 지역환경이나 주민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정책들은 일회적인 이벤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환류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

제 4 장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

앞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 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 컨설팅 대상으로서 인구정책은 ‘지역밀착형’을 전제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모형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념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출산을 제고를 위해 결혼이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결혼과 출산을 직간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결혼 및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적 접근과 인구자질을 향상시켜 잠재적으로 출산 증가효과를 거두기 위한 질적 접근 모두를 시도한다.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보건의료, 복지, 노동, 여성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2006년에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2)’ 상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운영지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역의 인문지리적인 상황이나 주민의 욕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반면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융통성 있게 반영하여 수립한 정

책으로서의 개념을 가진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중앙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한 인구정책과 대립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체적이거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또는 급여 형태, 대상, 지속기간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인구 구조, 산업·직업 구조, 지역 경제, 문화적 전통, 주민 수요, 지역사회 가용자원, 인프라 구축 정도, 재정적 여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포괄한다. 지역 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된 이유로 주민의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이 지역의 특수상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력 및 고령화 수준이 다르며, 특히 저출산 원인들이 달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들로는 1) 저출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관심도, 2) 수행 조직체계, 3) 인력 규모 및 전문성, 4) 안정적인 재원 확보 능력, 5) 제도화, 6) 지역사회자원의 협조, 7) 주민 참여 등을 들 수 있다(이삼식 외, 2006). 이러한 여건들은 추후 논의될 컨설팅 모형에서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관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데 표적성과 현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사례들로는 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들 중 연구진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한 정책들을 선정하였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정기준은 내용적 기준(주민욕구 충족성, 지역환경 적합성, 시의적절성,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기준(자치단체장·지방의회지지, 재정적 가능성, 인력 충분성·전문성, 지역자원 활용가능성)으로 구분된다(표 4-1).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표 4-1〉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 선정기준

구분		내용분석
내용적 기준	주민욕구 충족성	주민 욕구의 반영 또는 충족 가능성
	지역환경 적합성	인구지리적 환경(연령구조, 산업·직업구조 등)에의 적합성
	시의적절성	수행 시기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계속적으로 추진 가능성
환경적 기준	지자체장·의회 지지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지지 가능성
	재정적 가능성	지자체의 재정으로 감당 가능성
	인력충분성·전문성	지자체의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수준으로 수용 가능성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지역사회 관련자원의 활용 가능성

이와 같이 선정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들은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정책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의 생애주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결혼관련 정책에는 Dating 서비스 제공과 결혼준비교육 제공이 포함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지역사회 미혼남녀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들로 저출산 원인 중 하

나로 적절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거나 결혼비용 부담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인적, 물적)의 활용이 가능하고 소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신·출산 영역으로는 임신부·영유아 편의 증진과 직장여성 휴일검진서비스 제공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주민의 실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문화를 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인데다가, 예산 소요가 적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양육관련 영역에서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험료 제공, 결혼·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제공,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녀가정 우대, 그리고 다자녀가정 자녀 장학금 제공이 선정되었다. 양육지원정책들은 주민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친 출산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료 제공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에 자녀양육비 경감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혼·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제공과 다자녀가정 우대 프로그램들은 저예산으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표 4-1>에 제시된 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모형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정책 배경 및 목적 진단, 외국사례 분석, 지자체 담당자와 심층면접 등을 적용하였다(구체적인 기초자치단체 사례들은 부록 II 참조).

〈표 4-2〉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분석 대상 선정결과

분야	사업명
결혼	Dating 서비스 제공
	결혼준비교육 제공
임신·출산	임산부·영유아 편의 증진
	직장여성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험료 제공
	결혼·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제공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녀가정 우대
	다자녀가정 자녀 장학금 제공

사례 1: Dating 서비스 제공

① 배경 및 목적

- 법률혼에 의한 출산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출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만혼화 현상)으로 인한 20~30대 인구의 미혼율 증가에 기인함.
-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민간결혼알선업체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을 중개하고 있으나, 그 비용이 고가인 데다가 지나치게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관계로 신뢰성 문제 발생 가능
 -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결혼 중개가 필요하나, 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실시하기에는 시장질서 위해와 사생활 영역에의 지나친 개입 등을 이유로 비판 발생 가능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신력과 친밀도를 토대로 지역사회 미혼남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결혼부부가 탄생하도록 유도 필요¹²⁾
 - 실제 부산 동래구(미혼남녀 만남의 장)와 인천 서구(선남선녀 만남의 장)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구체적 사례는 부록 II 참조)
-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 구성원간 교류 촉진을 통해 함께하는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결혼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12) 일본의 경우, 나라(奈良)현, 후쿠이(福井)현, 오이타(大分)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선파티를 주선하고 있다(동아일보, 2006. 5. 29). 매년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이후 나라현에서는 동 프로그램 이후 약 500쌍의 커플이 탄생하였다.

② 프로그램

○ 참가대상 모집

- 참가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및 사업체(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혼남녀에 국한하거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녀 모두 포함
- 동 프로그램을 시·군·구청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포스터, 플래카드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협조공문 발송
- * 협조기관이나 기업을 동 프로그램의 후원회원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협조 유도

○ 시·군·구청(산하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가신청 접수

-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가신청자에 대한 적격성(기혼여부, 프로그램 위해가능성 등)을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 참가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개의 그룹으로 편성하되, 한 그룹에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사업체 종사근로자 포함

- 그룹별로 프로그램 운영시기를 달리하는 방안 고려

○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되 세부적으로 자기소개, 장기자랑, 게임, 사교댄스, 연회, 공개 프리포즈 등을 운영하여 참가 미혼남녀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진행자의 협조를 받아 운영 고려

○ 행사 종료 후 자발적인 모임이나 인터넷카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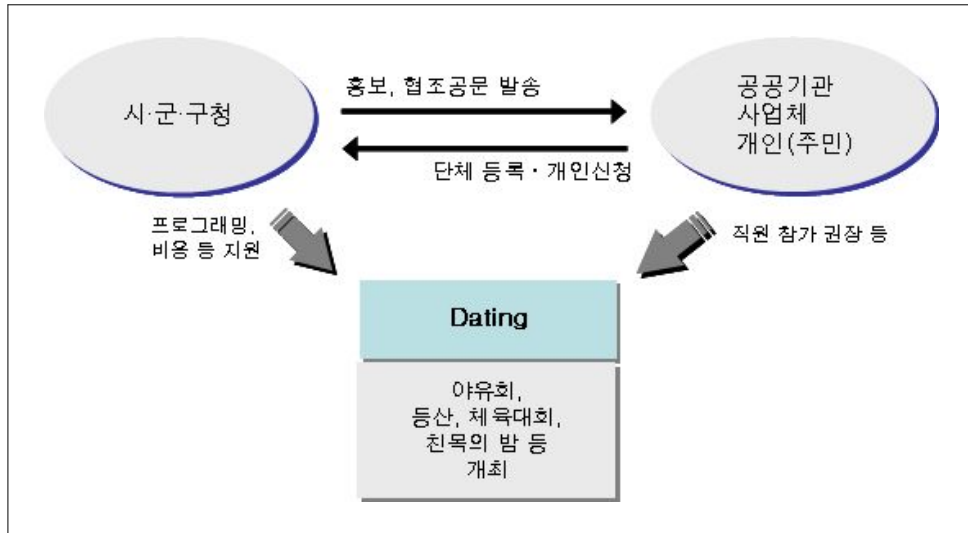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이버 만남의 장’ 등의 명칭으로 인터넷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한편, 결혼 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

○ 프로그램 참가를 계기로 결혼부부가 탄생한 경우에는 결혼경비(예식장대여, 웨딩촬영, 신혼여행 등) 보조, 임신·출산시 검진서비스 무료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적용 적합 지역

- 미혼남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에 보다 적합

[그림 4-1] Dating서비스 모형



사례 2: 결혼준비교육 제공

① 배경 및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들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생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
 - 결혼 준비, 부부관계, 부부와 가족의 역할 및 책임, 올바른 성문화와 부부생활, 임신·출산·자녀양육 준비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필요
 - 결혼 전과 신혼기에 필요한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도 중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에 관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용이 아주 기초적이거나 단편적이며 접근성도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실정
 - 건강가정기본법(제32조 1-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의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¹³⁾의 일환으로 결혼준비교육 실시
 - 그러나 2008년 1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67 기초자치단체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는데다가, 기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도 일부만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 제약
 - 한편,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초점과 내용이 매우 다양
-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준비에 관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운영되지

13)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에는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의사소통 증진교육, 기타 가족교육사업(청소년기 가족생활교육, 중년기 이후 부부를 위한 노후생활설계교육, 노년기가족생활교육 등) 실시(<http://www.familynet.or.kr>).

않고 있는 사각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결혼준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 내 미혼남녀의 결혼생활, 임신·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사전방지 및 사후대처에 기여하여, 합리적인 결혼준비와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유도 효과
- 기존 기초자치단체 사례로는 충북 충주시 결혼예비학교와 강원 동해시 임신 육아교실 운영 등

② 프로그램

○ 참가대상 모집

- 참가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미혼남녀 또는 신혼부부(경우에 따라서는 유자녀 주민의 참여도 허용) 선정
- 동 프로그램을 시·군·구청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포스터, 플래카드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에 협조공문 발송
 - 협조기관·기업을 프로그램 후원회원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협조 유도
- 시·군·구청(산하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가신청 접수
 -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가신청자에 대한 적격성(기혼여부, 프로그램 위해가능성 등)을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 참가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개의 그룹으로 편성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 운영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 고려

○ 참가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의 참여 우선권 제공 등
- 건강검진서비스 무료 제공(충주시 사례)
 - 풍진항체검사 및 풍진예방접종¹⁴⁾, 일반혈액검사(간염, 빈혈),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검사(매독, 에이즈), 뇨검사 등

14) 풍진항체가 음성일 경우 해당되며, 임신초기 풍진감염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아 예방 효과

○ 교육방법

-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 투입인력 규모, 강사진 사정, 대상자 모집의 용이성, 기타 지역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장기간 교육시 대상자의 참여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간(1~2일) 집중교육방식 선택
- 교육시간은 비경제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간시간대에, 그리고 직장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대에 배치
- 교육자료는 동영상 등 각종 기자재를 활용하여 참가자의 흥미 유발 등으로 효과성 제고 노력

○ 교육내용

- 미혼남녀 또는 신혼부부(경우에 따라서는 유자녀 주민의 참여도 허용)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결혼생활,¹⁵⁾ 임신·출산 준비, 자녀양육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¹⁶⁾
- 주요 교육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은 <표 4-3>에 제시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만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
- 일부 분야(결혼준비, 결혼생활, 임신·출산)는 건강검진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
-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환류(feedback)를 통해 질적 개선 도모.

○ 적용 적합 지역

-
- 15) Stahmann and Salts(1993)는 결혼생활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들로 헌신으로서의 결혼, 원가족(family of origin)과 개인적 배경 정보 공유, 파트너의 성향과 기질,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s), 역할기대(role expectations), 커플의 상호작용 패턴, 갈등해결, 의사결정 기술, 각자의 재정과 재정관리방법에 대한 정보, 여가 및 흥미, 인생의 목적 및 목표, 성과 사랑(sexuality and affection), 자녀관과 부모역할, 종교와 영적 가치(religious and spiritual values and expectations), 관계의 건강성 정립(identifying relationships strengths), 결혼계획 등을 제시
- 16) 황나미 외(2001)는 신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로 가임미혼 남녀의 건전한 생식건강 도모, 결혼 초에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질병의 조기발견 능력,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인공임신 중절 시 합병증과 후유증의 심각성 등을 제시

-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에 비해 보다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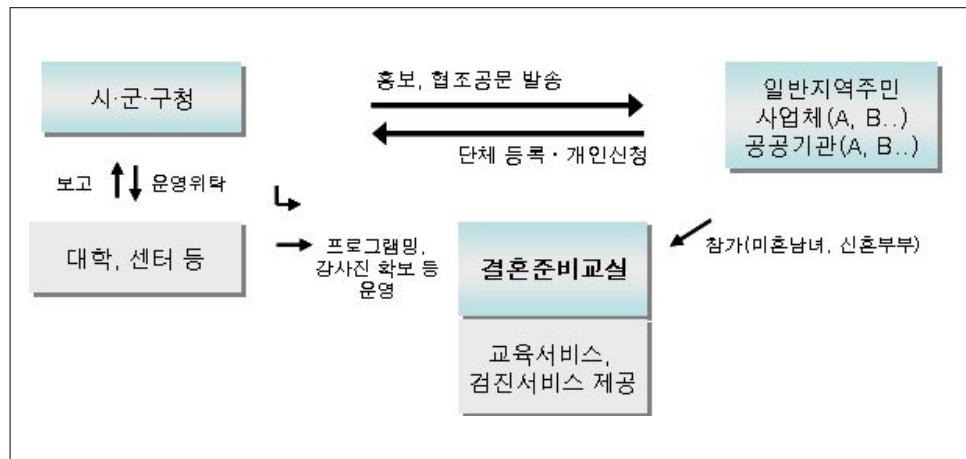
〈표 4-3〉 결혼준비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시

영역	세부 내용	기대역할
결혼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식건강 관리 ◦ 질병의 조기발견 능력 ◦ 원치 않은 임신 예방 ◦ 성교육 및 성문제 사후관리 ◦ 이성교제 ◦ 결혼계획 ◦ 혼수준비 ◦ 결혼관 및 가족관 ◦ 만혼이 미치는 영향 등 	불임방지, 비자발적 결혼연기 방지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사랑 ◦ 부부간 및 가족간 의사소통 ◦ 부부간 상호작용 및 갈등해결 ◦ 의사결정 기술 ◦ 건강한 신혼생활(검진, 예방) ◦ 각자의 재정관리 방법 ◦ 여가 및 취미 생활 등 	안정적인 결혼생활 도모
임신·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건강관리(임신 중 이상 발견 및 대처 방법 등) ◦ 출생신고, 건강보험 이용 방법 ◦ 건강검진, 예방접종, 불임예방 ◦ 태교, 출산방법 ◦ 산전·산후관리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관 ◦ 부모의 역할 ◦ 육아 방법 ◦ 보육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 일-육아 양립 등 	원활한 자녀양육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내용, 수혜대상, 신청방법 등 ◦ 시설 등 가용자원 현황 및 접근방법 	

○ 운영방법

- 시군구에서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참가대상 모집, 홍보, 강사 확보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
- 대학이나 지역 내 센터 등에 위탁·운영하는 방법
- * 지역사정에 적합한 방안 선택

[그림 4-2]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



사례 3: 임산부·영유아 편의증진

① 배경 및 목적

-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은 이동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
 - 임산부의 경우 임신초기에 작은 외부의 위해요소일지라도 유산 가능성이 높으며, 만삭시에는 행동 자체가 불안정
 -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외부 활동 시 영유아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나 부모와 동반한 영유아의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은 아주 열악한 상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도 임산부에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 미비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임산부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 부재
- 따라서 2007년 2월 12일부터 정부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해 배제
 - 그러나 이러한 편의는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일반주민에까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반주민들에게 이동편의서비스 제공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산부전용주차장 등 관계 법률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70세 이상 노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05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 그 사유로 임산부·70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는 장애인에 포함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노인·임산부를 포함한 장애인 등으로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정된 전용주차구역의 합리적 이용을 크게 저해 등(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고 일반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가능
- 기 실시 사례로 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대전 서구, 제주시, 경기 성남시·김포시·화성시), 전용주차장설치(경북 영주시·의성군), 우대창구 운영(부산 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 대전 서구·중구, 경북 영주시) 등(부록 II 참조)

②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임산부 차량 및 임산부·영유아(0~2세) 동승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혜택 제공
 -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정문에서 한시적 요일제 면제 차량을 증명하는 증표 발급(후술 예시 참조) 및 차량 전면에 부착토록 함.
- 임산부 차량 및 임산부·영유아(0~2세) 동승차량에 대해 전용주차장 이용 제공
 -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지자체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주차장의 일정 면수를 임산부 차량 등을 위해 할당
 -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정문에서 한시적 전용주차장 사용을 허락받는 증표 발급(예시 참조) 및 차량 전면에 부착토록 함.

[그림 4-3]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및 전용주차장 이용 허가증 예시

<p>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대상 허가증 (임산부 및 영유아 이용 차량)</p> <p>○ 적용제외기간 : 2008. 1. 1. ~ 2008. 8. 31 ○ 차량번호 : 대상자 ○○○</p> <p style="text-align: right;">2008. 1. 1. ○○시장 (인)</p>
<p>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 허가증 (임산부 및 영유아 이용 차량)</p> <p>○ 적용제외기간 : 2008. 1. 1. ~ 2008. 8. 31 ○ 차량번호 : 대상자 ○○○</p> <p style="text-align: right;">2007. 2. 8. ○○시장 (인)</p>

- 주차구역 공간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할당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 협조기관에게 지 확대 추진
- 임산부 및 영유아(0~2세) 동반 민원인을 위한 우대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대기하지 않고(접수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토록 배려
- 평상시에는 일반민원인의 이용을 허용하되, 임산부 등의 방문시에는 우선적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배려
- 금융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동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
- 대상 확인
 - 임산부임이 증명 가능한 서류(산모수첩, 진료표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임산부의 경우 수혜기간을 임신기간 전체로 설정 고려
 - 영유아 동승(또는 동반)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혜택 제공
 - 영유아는 0~2세 아동으로 한정(3세 이상 아동들은 대부분 보육시설 등에 다

니거나 보행이 가능하므로 제외)

- 이들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는 부모가 원칙이나, 사실 확인 곤란 등을 감안하여 자녀-부모관계와 상관없이 동반 사실만으로 가능토록 배려
- 공공기관 등을 수시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일정기간에 한해 스티커 또는 증표(예시 참조)를 발부하여 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 및 전용주차장 이용 혜택 제공

○ 편의시설 설치

- 전용주차장 설치
 - 임산부 등 민원인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 유지
 - 우천, 결빙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는 동선
 - 임산부 등의 전용주차장에 대한 위치안내표지판 설치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각적 고려 등 배려
- 우대창구 설치
 - 우대창구에 대한 안내판과 표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각적 고려 등
 - 임산부 등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적하고 아늑한 곳에 배치
 - 영유아동반 부모를 위해 수유실(있는 경우)에 인접한 곳, 영유아자녀를 안전하게 잠시 맡길 수 있는 공간 마련
 - 우대창구의 의자는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회전식이 아닌 고정식, 넓은 면적, 부드러운 재질 등 안정성 및 쾌적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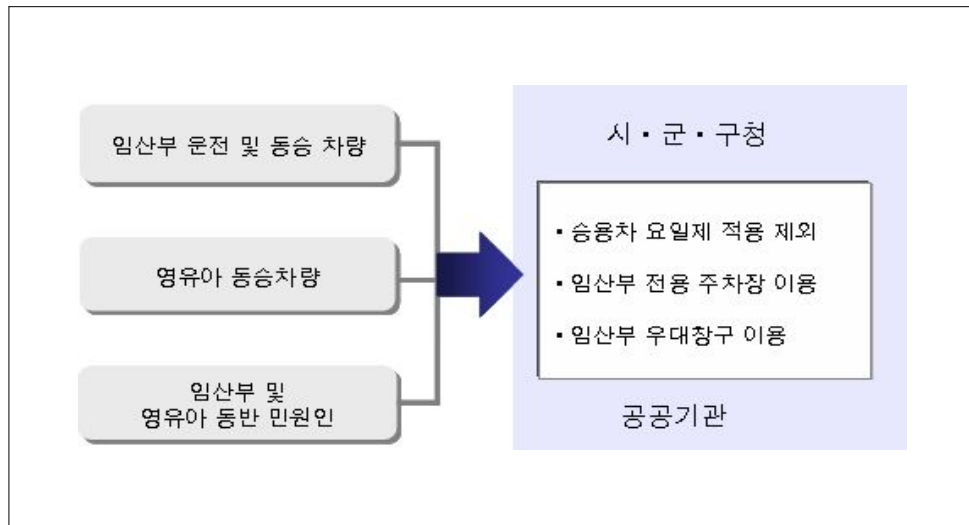
○ 홍보

-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주민의 이해 및 협조 당부(공감대 형성), 임산부 등의 이용 권장, 임신·출산 친화적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
 - 시·군·구 홈페이지, 포스터, 플래카드, 아파트 게시판, 반사회 회보, 지역 산부인과 게시판 등 이용
 - 지역 내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양육가정 등 정책 수혜자에게 적극 홍보

○ 적용 적합 지역

- 주차장 등 편의시설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지역에 보다 적합

[그림 4-4] 임산부 및 영유아 편의증진 프로그램 모형



사례 4: 직장여성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①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직종이 전문직, 사무직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간 활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제약
 -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의 인식개선이 미비하여 더디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예를 들어, 태아검진휴가제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검진서비스 등을 받은 것이 곤란하며, 휴일에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휴진하여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이로 인하여 근로여성 및 그 자녀의 건강 등에 문제 발생 우려
- 이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 노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근로여성들이 휴일에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휴일에 주간생활공간이 주로 가정임을 감안하면, 근로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내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휴일에 검진서비스 제공 필요
 - 기존 사례로 경기 성남시(직장여성 임신부의 날)와 김포시(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토요검진서비스 제공(부록 II 참조)

② 프로그램

- 지역사회 내 임신 중인 직장여성들과 자녀양육 부모를 위해 검진서비스 등 제공
 - 검진시간: 매 토요일 09:00 ~ 13:00(또는 주민 수요에 따라 연장 고려)
 - 실제 방문자수에 따라 격주 토요일 등으로 조정

- 서비스 내용
 -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모성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임산부 산전후 관리, 영양제 공급,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 유축기 대여 등
- 대상
 - 관내 거주 주민으로서 임신 또는 자녀양육 중인 직장여성(직장 소재지 불문)
- 인력 운용
 - 최소 진료의사 1명, 간호인력 1명을 ‘토요검진팀(가칭)’으로 구성하여, 실제 근무인력을 순번제로 운용
- 사업 홍보
 - 관내 사업체에 직접 홍보(공문 및 홍보물 배부), 플래카드, 포스터 등 게시,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지
- 적용 적합지역
 - 근무일(평일)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도시지역에 보다 적합

사례 5: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험료 지원

① 배경 및 목적

-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자녀양육비 부담이 지적
 -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구 자질 향상에 대한 사회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나, 미래 생산가능인구로서 국가 성장동력의 기저가 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백한 정책의지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 가정의 아동보호기능 약화, 가족해체 증가, 유해환경 확대 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아동 청소년육성보호정책의 필요성 증대¹⁷⁾
- 따라서 저출산원인으로서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
 - 궁극적으로 미래의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우수한 투자로 가치
- 이러한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 등 자녀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인데다가 주로 일부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한계성 존재
 - 주로 보육관련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자녀양육관련 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자녀의 안전 및 교육 등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원은 전무
 - 주된 이유로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지나치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

17) 참고로 우리나라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2005년 현재 8.3명으로 OECD 평균 7.4명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아동 교통사고의 경우 2000년부터 최근까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은 감소한 반면 학교 등의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 적극 도입 필요
- 기존 사례로 인천 옹진군의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광주 남구의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강원 평창군의 저출산건강보험료 지원, 경기 김포시의 신생아 보험료 지원, 전남 함평군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전남 화순군의 신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전남 목포시의 신생아 보험가입 서비스, 충남 청양군의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경북 성주군의 아기보험가입 등(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II 참조).

② 프로그램

① 질병·상해 등에 관한 보험료 지원 방안

- 프로그램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 건강, 교육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대납
- 지원기간
 - 5년 납입 10년 보장, 5년 납입 18년 보장 등(월 보험료 및 보장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험회사와 협의 필요)
- 지원대상: 모든 아동(재정 상황에 따라 출생순위의 연차적 확대 고려)
- 지원조건
 - 관내 출생아와 1세미만 전입아동 대상 원칙
 - 전입아동의 연령 제한은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고려
-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선정
 - 지자체는 민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회사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보장내용)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질병입원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80%
- 상해 의료비
 - 사고로 의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
- 암 진단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식중독 위로금, 골절진단
 - 위로금
- 화상 발생 위로금
- 특수 교육자금 :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시
- 자녀 배상 책임 보상

- 추진절차

- 출생신고시(또는 1세미만 아동 전입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보험료 지원에 대한 안내
- 해당 부모는 아동의 보험 가입을 동의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 제출
- 지자체 담당부서는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방식(예시)

구분	단체가입방식	개별가입방식
계약 및 보장기간	1년 정액으로 계약하고 1년간 보장	일정기간 매월 월정액 보험료 납입, 일정기간 보장(예: 5년 납입 10년 보장)
계약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에 1년간 보험가입대상 아동수를 예측하여 보험회사와 계약 및 전체 보험료 선납(예치) ◦ 행정기관은 출생(전입)아동 발생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통보(관리차원) ◦ 계약종료시점(연말)에 연초 예측된 아동수와 실제 아동수(출생아수+전입아동수-전출아동수)를 비교하여 보험료 일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대상아동 발생 즉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체결(단,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월 또는 분기단위로 수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상해보험 의무가입 비용 지원

- 프로그램 내용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법제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¹⁸⁾
- 해당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납부

-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보육시설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상품을 선정하거나
- 또는 지자체에서 일정 지원기준(금액 등)만을 제시하고,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은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보험료 지원 절차

- ① 보육시설에서 시설이용아동의 부모에게 ‘지자체의 보험료 대납’에 관한 동의서를 받음(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지자체의 정책에 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② 보육시설에서 보험료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모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보육시설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를 지정한 경우에 신청서에 해당 보험회사 명기)
- ③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된 보험회사에 당해 보험료를 직접 납부
- ④ 기초자치단체는 납부영수증 사본을 해당 보육시설에 송부하는 한편,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부모에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통보

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제23조 관련]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례 6: 결혼·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제공

① 배경 및 목적

-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육아지원인프라는 보육시설, 유아 교육시설, 보건의료관련 시설 등 포함
- 육아지원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시설 부족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 미흡 등
 -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지식)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망의 부재(부족)나 미흡 때문
 -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 후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별 주민의 경우 자신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정책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그로 인하여 정책 이용률이 낮고 정부 노력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실정
- 현재 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망으로는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각종 여성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정보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보건의료정보,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등 일부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현재 전국에 약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마저 제약되어 있는 실정
 -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관련 정보(규모, 연락처 등 시설 특성)만을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¹⁹⁾
 - 현재 16개 시·군·구에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마저 제약되어 있는 실정(광역

19)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각 1개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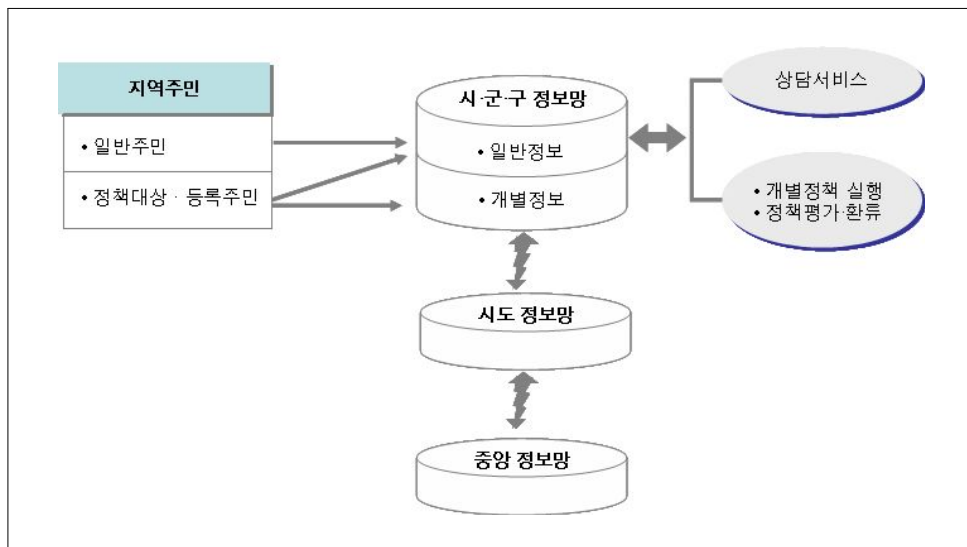
- 경제활동 등으로 가족생활시간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교육에 이르는 이른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주민의 결혼, 출산, 임신, 자녀양육 등이 시·군·구단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정보망은 전국이나 광역단위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될 필요성 증대
 - 이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또는 가구)의 상황에 따른 건강검진, 예방접종, 정책수혜여부 등 실제 서비스 이용과 연계 가능
 - 기존 사례로 서울 중구의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충주시 ‘행복한 5 Family’ 등 (상세내용은 부록 II 참조)
- 기대효과
 -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 발생 가능 위험들의 사전 방지
 - 직·간접적 비용 절감을 통한 자녀양육비용 경감효과 발생
 -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출산관련 정책에 관한 지역사회 욕구 수렴 및 환류 가능 등

② 프로그램

- 정보망 구축 방법
 - 기초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기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망을 강화
 - 대상별 및 주제별로 체계적 구성
 - 주제별로는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등
 - 대상별로는 미혼남녀, 신혼부부, 임산부, 자녀양육부부,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등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Q&A 등의 온라인형식으로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공개적 및 비공개적)

- 필요시 내방 또는 방문 상담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
- 정보망에 등록한 주민에게는 일정한 ID를 부여하고,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 대상 여부, 지원 내용, 지원 일자, 장소, 방법 등)
- 각종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도록 하여 해당 지원은 물론 다른 정책의 대상 여부 등도 개별적으로 통보
-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정보망을 전국적으로 연계(networking)하는 방안 마련

[그림 4-5]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관련 정보망 구축 체계(안)



○ 서비스 제공 내용

-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보육,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표 4-4 및 표 4-5 참조)
-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망(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가사랑' 등)과 연계·운영 방안 고려

-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한 정보
- 정책대상(또는 등록자)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별 지원내용, 시기, 방법, 절차, 장소 등 개별적 제공
-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인터넷상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실질적 상담서비스 제공
 - 필요시 내방 또는 방문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
- 정책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표 4-4〉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관련 정보망 구축 내용(안)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일반정보 제공	일반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등에 관한 지식 ◦ 임신부 및 아동의 건강관리 ◦ 보육·교육 시설관련 정보 등 	<표 4-5> 예시 참조
중앙/지방 정부 정책관련 정보 제공	일반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건강검진(미숙아, 선천성이상 등), 예방접종,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 보육·교육비지원, 방과후학교 및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장애아 가정 취학전 보육·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스타트 등 ◦ 임신부건강검진, 보충영양 관리사업,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모유수유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 직장여성의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제,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및 근로형태 유연화, 직장보육시설, 출산·여성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 ◦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등 ◦ 입양관련 정책: 입양수수료 정부부담 및 양육수당 지급,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지급 등 	
개별정보 제공	정책대상 (등록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정책 대상에 대해 개별적(ID)으로 지원 내용, 일시, 장소, 방법 등 제공 및 관리 	제한적 접근 허용
상담서비스 제공	일반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지원 	내방/방문 서비스와 연계
정책 평가 및 환류	일반주민·정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욕구 조사(정책 수립시 활용) ◦ 정책관련 만족도 조사 등(정책 평가 및 환류) 	

〈표 4-5〉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에 관한 일반정보 예시: ‘아가사랑’ 사례

구분	영역	세부내용
종합 정보 마당	태교	행복한 태교, 태담태교 이야기, 동화구연 이야기, 플래시 태교 동화, 태교를 위한 요가동영상, 미술태교, 태교음악
	임신	임신과 준비, 산전검사, 병원진료, 임신주기별 정보, 임신과 태교, 인공임신중절, 고위험임신
	불임	불임정보, 반복(습관성) 유산
	출산	출산준비, 분만의 종류, 순산노하우, 산후관리, 난산의 위험, 의료시설별 출산비용, 자연분만
	육아	월령별 발달, 예방접종, 엄마젖 먹이기, 영양 및 이유식 백과, 응급처치
	아버지 역할	임신출산에서 아버지 역할, 육아에서 아버지 역할,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활동
	동영상	이용자가 만든 동영상 게시
	E-Book	국제이주여성, 여성장애인, 안전사고예방, 자연분만 가이드북, 아가사랑 사이트, 모유수유, 가임기 여성건강증진관련 E-Book 게시
	의료기관/보육센터 정보	16개 시도별 보건소, 소아과, 산부인과, 조산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연락처 게시
건강 관리	성장발달체크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의 내용을 토대로 성장발달체크 프로그램을 소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유/소아기, 청소년기, 가임기/태아기, 중년기 여성건강관리
	여성건강	교육동영상, 생리다이어리, 가임기간 체크, 출산예정일
	건강정보	건강칼럼, 건강만화
	놀이와 교육	놀이와 교육 관련 칼럼

사례 7: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녀가정 우대

①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제고를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추진
 -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분양시 가구원수에 비례한 가점제,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입소, 세제공제,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등 일부 정책에 불과하고, 그 체감도가 극히 낮은 실정
 - 이외 대부분 정책들은 출산순위보다는 단순히 출생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자녀에 대한 특별우대는 극히 미흡
-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특별우대정책 추진
 -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체험여행이벤트 제공 등
- 그러나 이러한 다자녀우대 정책은 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등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편적인 접근은 극히 미흡한 실정
 -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등의 정책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며, 실제 기초자치단체간 양육수당 지급여부 및 금액차이 등은 형평성 문제 야기
- 따라서 예산이 들지 않거나 적게 소요되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녀가정 우대정책들이 개발·추진하는 것이 긴요
 - 그러한 정책들 중 하나로 다자녀가정에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가시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제공 필요
 - 이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간접적으로나마 완화해주는 동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사회 행사나 프로그램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정책으로 간주
- 기존 사례로 부산 동래구의 다자녀가정 자녀 참여 우대, 경기 성남의 문화교실 접수시 3자녀가정 우선접수 등(상세 내용은 부록 II 참조)

② 프로그램

○ 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

- 대상시설: 고궁, 박물관, 공원, 전시관, 문화시설, 복지이용시설 등
- 프로그램: 각종 문화행사(연극, 콘서트, 공연, 전시 등), 교육·훈련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각종 센터(지역청소년센터, 지역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

※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 제공혜택

- 이용 또는 참가 우선권 부여
- 비용 무료 또는 할인 등

○ 수혜대상

- 부모 이용(참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경우 3자녀 이상의 부 또는 모
 - 아동 이용(참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경우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아 이상
- ※ 사전예약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또는 가족 동반

사례 8: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공

① 배경 및 목적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가임기여성(부부)의 추가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
 -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취학 후 교육비 부담에 의해 발생
 - 교육비 부담은 자녀수에 정비례하므로 다자녀가정일수록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곤란
- 이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취학 전 보육료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
 -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급식비 등 지출 부담은 여전하며, 고등학교까지 완전무상은 재원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공보육 이외에도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교육수당을 제공하여 자녀양육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과 차이
- 완전무상교육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 또는 장학재단 설립(기존재단과 연계)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지원 필요
 - 이는 향후 노동력 부족을 대비하여 인력 개발을 위한 사회투자 차원에서도 긴요
 -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경기 화성시의 인재육성재단 활성화, 충남 서천군의 서천사랑 장학금, 전남 강진군의 군민장학재단 사업, 경북 의성군의 기금 조성 등(상세 내용은 부록 II 참조)

② 프로그램

○ 대상 학교(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을 대상으로 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학교만을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대상 학생

-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경우로 한정(타지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해당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제외)
- 출산순위를 3~5자녀 이상으로 설정하되, 해당 순위에 해당하는 아동(학생)에게만 지급
 - 동일학교에 동일가정의 형제자매 여러 명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출산순위가 가장 높은 학생을 최종 선정
 - 학년 구분없이 졸업 때까지 일정 횟수(예를 들어 1회)만 장학금 제공
- 출산순위만 고려하는 방안과 출산순위, 학교성적 및 해당가정의 소득수준(소득,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 검토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출산순위만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고려(현실적으로 학교성적 우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입각한 장학금 수여 대상자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

○ 재원 마련 방안

- (방안 1) 지역사회 내 기 운영 장학사업(민·관)과 연계하여 장학금 제공 대상에 다자녀가정의 자녀 포함
- (방안 2) 신규 장학사업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지자체 출연금, 지역사회 모금
 - 지자체에서 직접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될 위험성으로 추진이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추진방법 고려 필요
 -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

거나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거 통상적인 업무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조건은 ① 종전의 대상방법, 범위, 시기 등을 확대 변경하는 경우,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③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과되는 경우, ④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등이다.

제 5 장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구축

앞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함을 진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관련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은 등 조직구조가 취약하다. 또한, 마스터플랜 내지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그 기초가 되는 법제적 기반도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으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 및 축적되지도 못하여, 정책개발 역량은 계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실제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정책들은 해당지역의 저출산 원인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일회성, 전시성)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강하며, 그로 인하여 지역 환경이나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구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환류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각 기초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이 낮은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다.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개념과 모형화 사례는 앞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 분석과 모형화 작업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에 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제2절에서는 컨설팅 모형을 개발한다. 제3절에서는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에 대한 시범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제4절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제 1 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개념 및 기본원칙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구성원이다. 정책 과정에서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²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기법 활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문제의식에 밝고, 책임감이 강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 전체 과정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융통성 있게 반영하여 수립한 정책으로서 (조작적) 개념을 가진다. 그리고 지역밀착형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에 대체적 또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 등을 감안한 인구정책의 기획, 집행,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의 전 과정에 대해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컨설팅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상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지역환경과 주민욕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는 쌍방향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포착해주고, 학습을 촉진하며, 관리자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기본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에 관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저출산 대응에 지방공무원의 정책개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인식

20) 역량(competencies)은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내적 능력으로, 역량은 일의 책무나 책임이 아니라, 우수한 수행자를 검토함으로써 규명된다. 환언하면 역량은 사람의 지식, 기능과 그 사람의 역할의 필요 요건 사이를 맞추어 보는 일이다(정재삼·이진구, 2007:113).

제고와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컨설팅 모형은 지역 환경과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환경으로는 인구구조, 지역 경제, 직업·산업구조, 지역문화 등 인문 지리적인 것들과 지방자치단체 조직, 재정, 지역사회 자원 등 기초 인프라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상황들이 컨설팅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로서 정책들의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컨설팅 모형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부담 능력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넷째, 컨설팅 모형은 지역사회에서 유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원들로 개인, 집단, 조직의 자원을 불문한다.

다섯째, 컨설팅 모형은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컨설팅 결과로서 인구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상적일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여섯째, 형식적인 차원에서 컨설팅 모형은 간단명료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컨설팅 모형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복잡한 경우, 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컨설팅은 자칫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릇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일곱째, 컨설팅 모형은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초보적인 수준부터 또는 고도 단계부터 컨설팅이 지원되는 경우, 시간과 인력 등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한편, 담당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감소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컨설팅 모형은 특정 정책의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교육(학습)적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이를 위해 컨설티들로 특정 개인(담당자)보다 집단(조직 구성원들)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컨설팅 모형은 정책 기획과 수행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과차원에도 관여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2 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개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은 총 7단계로 구성한다. 즉, (1) 컨설티 및 컨설턴트 선정, (2) 컨설팅 계획 수립, (3) 자료수집 컨설팅, (4) 지역사회 진단 컨설팅, (5) 정책 도출 및 설계 컨설팅, (6)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컨설팅, 그리고 (7) 정책 평가 및 환류 컨설팅이다. 컨설팅 각 단계마다 컨설턴트와 컨설티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각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되, 단계간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그림 5-1]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1. 단계 I: 컨설티 및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의 중요한 요소는 컨설턴트와 컨설티(고객)이다. 즉, 컨설팅은 컨설턴트(consultant)와 컨설티(consultee)간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본 모형에서 컨설티는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여기에서 컨설팅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집단 모두가 가능하며, 집단의 경우 팀, 과, 국, 지자체장을 포함한 전체 조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부서들이 저출산관련 업무를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컨설티는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T/F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경우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컨설턴트는 저출산 관련 분야(예를 들어, 인구, 사회정책,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육·교육, 여성정책 등)의 개인 또는 집단 모두가 될 수 있다.²¹⁾ 컨설턴트로 가급적 지역사회 또는 인근지역의 적합한 전문가(대학, 지방연구원, 전문민간단체 등)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대상지역의 상황에 보다 정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컨설턴트와 컨설티간 친밀감(rapport) 형성에도 유리하며, 빈번한 상호 교류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저출산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교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컨설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내 전문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적합한 컨설턴트를 물색하여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한다.

컨설턴트의 역할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진단,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도출 등의 단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컨설

21) Block(1981)은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 컨설턴트의 역할을 전문가, 조수 및 협력자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컨설팅 프로세스는 컨설턴트의 능력, 스킬, 지식, 자원,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피환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Weiss, 1992; Philips & Philips, 2002; 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128에서 재인용).

턴트는 개인들간, 집단들간 및 개인-집단간 연계를 강화하는 의사소통 매개로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매개로서 역할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과제의 수행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등 효과를 발생시킨다. 컨설턴트는 정책 개발의 지침 제시, 과정에 대한 상담, 추진 방법 등에 관한 설득, 자료수집 등 지시, 훈련자 또는 교육자로서 정책과 지식 교육, 공동의 문제 해결자로서 대안 제시, 문제 제기 및 질의·응답 등 제 방법을 적용한다. 한편, 컨설턴트는 효율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의 동기와 속성(직위, 상급자와의 체계, 업무분야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은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i)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형태, (ii)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추진하되, 일정 예산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 그리고 (iii)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서 추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i)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컨설팅 지원기관(또는 여러 기관이나 개인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으로 적합한 개인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들을 후보로 선정한 후, 심의(제안서 검토, 질의·응답 등)를 거쳐 사업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ii)와 (iii)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컨설턴트를 모색한다. 컨설턴트 후보로 개인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들을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가장 충족시키는 후보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한다.

[그림 5-2]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턴트 선정 절차



2. 단계Ⅱ: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턴트는 컨설티와 협의하여 컨설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컨설팅 지원체계를 진단한다. 컨설팅 지원체계는 예산, 자료 및 정보, 컨설팅 도구 등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존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제 단계(자료수집, 지역 사회 진단, 정책 도출 및 설계,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정책 평가 및 환류)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항들과 일정을 포함한 컨설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행사항은 가급적 구체화하며, 일정은 보다 세분화하여 컨설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 단계Ⅲ: 자료수집 컨설팅

컨설팅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주로 지역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인 자료와 이차적인 자료로 구분된다. 일차적인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원자료)로서, 주민등록자료, 인구동태통계자료,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주민욕구조사 등이 해당된다.²²⁾ 물론 이러한 일차적인 자료는 컨설팅 대상 지방자치단체(지역)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자료이어야 한다. 일차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하거나 적어도 통계청 등 조사수행기관에 특별하게 집계(제표)를 의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미리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차적인 자료는 통계청, 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조사하여 생산한 통계표 형태의 자료로 각종 통계보고서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22) 주민등록자료, 인구동태통계자료,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등은 통계청 등 중앙부처에서 기획한 조사 또는 행정등록자료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등록)한 것으로 일차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4. 단계Ⅳ: 지역사회 진단 컨설팅

지역사회 진단은 크게 경제사회환경 진단과 인구진단으로 구분하여 컨설팅 한다. 지역사회의 경제사회환경과 인구변동은 상호 불가분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앞의 자료수집이나 지역사회 진단은 지자체의 다른 계획 수립(예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의료발전계획 수립 등)과 연관시켜 진행하는 경우 예산 절감, 타 부문과의 종합적인 연계성 제고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지역경제사회환경 진단

컨설팅 대상 경제사회환경 진단에는 주민의 경제활동상태, 산업 및 직업 구조, 중사상지위,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한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초인프라 등에 대한 진단도 컨설팅 한다.

나. 지역인구 변동 진단

지역의 인구현상을 크게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그리고 인구분포로 구분하여 진단하도록 컨설팅 한다. 인구규모는 지역의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특성별 인구 규모도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집단을 구분하는 특성으로는 성과 연령이 가장 중요하다. 연령별 인구는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대연령층을 세분화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유소년인구(0~14세)는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고위험집단으로서 영아 인구, 보육대상 인구로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령인구, 중학교 학령인구, 고등학교 학령인구 등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핵심생산계층인구(25~49세), 중고령생산계층인구(50~64세)로 구분하도록 한다. 노인인구도 전기고령층(65~74세), 중기고령층(75~84세), 후기고령층(85세 이상)으로 세분화되는데, 고연령층일수록 노동이 어렵고 보건의료지출 욕구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³⁾ 성

별로는 총인구의 성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산력 수준을 결정하는 가임여성인구(15~49세) 등 연령별 남녀인구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과 연령 이외에도 학력수준, 산업 및 직업(전문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 등), 종사상지위(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등), 지역(동부=도시, 읍면부=농촌), 국적 등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구분자이다. 국적별 인구는 지역 내 외국인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구구조는 주로 연령별 인구분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령대집단별 비율(유소년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을 이용하도록 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고령화 수준(population ageing)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데, 그 비율이 7%인 경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단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부양비를 산출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와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로 구분되며, 이를 합한 총부양비가 있다. 이외 잠재적부양비(economical supportive ratio, 생산가능인구/노인인구)는 총합적으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노년화지수(노인인구/유소년인구)는 세대간 교체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년화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인구가 정상적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구의 지리적 분포는 주로 동·읍·면별 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에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인프라 배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인구 규모, 구조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인구변동요인)들로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들 수 있다. 즉, 한 지역의 인구 변동은 다음의 인구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23) 연령별 인구는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P_{2008} = P_{2007} + B_{2007} + D_{2007} + INM_{2007} + OUTM_{2007}$$

(P 연초기준 인구, B 출생아수, D 사망자수, INM 전입자수, OUTM 전출자수)

지역 인구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출산과 전입은 지역인구의 증가요인이며, 반대로 사망과 전출은 지역인구의 감소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사망은 개인의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전쟁이나 전염병 등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므로, 단기간의 인구규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세하다.

사망은 지역인구의 규모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질적 수준을 대변해주는 주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나 현재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율이 높다고 해도 영아사망률 수준이 아주 높게 유지된다면, 그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동들의 건강수준이 열악한 경우 보건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며, 미래에 건강한 노동력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노인인구(특히 후기고령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서는도 작용을 한다.

반면,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요소로 경기(고용), 문화(관습), 정책 등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출산변동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은 후술 내용을 참조한다.

인구이동 즉, 전입과 전출은 지역사회가 안정적이어서 뚜렷한 흡입요인(pull factor)과 배출요인(push factor)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여 지역의 인구 규모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세할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공단 설립 등 인구 흡입요인이나 배출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구이동이 활발하여 지역인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이동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젊은층, 여성 등)의 선택성(selectivity)이 강하여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신도시 건설이나 공단설립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유입되며, 그 영향으로 지역의 출산율 및 출생아수가 증가할 수 있다.

다. 지역의 출산수준 및 결정요인 진단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저출산 원인 및 주민욕구를 파악하도록 컨설팅한다. 특히, 해당지역의 저출산 수준이나 원인이 전국과 유사한지 아니면 지역 고유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에 대해 컨설팅 한다. 또한, 지역의 저출산원인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단하도록 한다. 이는 정책 강도나 지속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출산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 출산율 측정 방법으로 전국적인 비교가 가능한 연령별표준화방법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이용한다. 출생아수도 중요한 측정방법이나, 연도별 가임여성인구의 규모와 연동하여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출산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²⁴⁾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의 연령별로 출생아수를 여성인구규모로 나눈 연령별출산율의 총합이다.²⁵⁾ 연령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을 연도별로 측정하여, 증가 또는 감소의 변동 추이를 파악하도록 한다. 출산행태(behaviors)도 출산수준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출산행태로는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분포, 출산모의 연령별 분포, 출생아 부모의 학력수준과 직업, 전체 출생아수 중 쌍태아 이상 비율 등이 포함된다. 출산행태는 정책대상 집단을 명료화하고 표적화하는데 유용하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이러한 출생아의 특성들은 출생신고서 신고서에 기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항목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사회에서 출생아 대부분은 법률혼에서 발생하므로 지역사회 내 결혼력 변화도 출산수준 변동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체 가임인구 중 결혼건수의 비율인 일반결혼률이나 연령별결혼률을 산정하여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 결혼연령은 출산의 시작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추이는 향후 출산율 수준을 예측하는

24) 예를 들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수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역별 인구 규모에 따라 출생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출산수준이 더 높은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5) $TFR = \sum_{a=15}^{a=49} ASFR(a)$, ASFR은 연령별 출산율, a는 여성 연령.

데 중요하다. 결혼시기가 늦어질수록 생리적으로 불임률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의 출산율을 측정한 후, 출산수준 및 그 변동의 원인들을 진단하도록 한다. 인구학적으로 인구이동이나 세대간 인구규모의 차이로 인한 가임여성인구 감소, 결혼 연기 또는 포기 등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결혼이 감소하면,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기혼부부들이 지역 내 여러 사회경제적인 원인들(또는 장애요인) 또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결혼이나 출산에 미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지역경제 악화에 기인한 고용 및 소득 불안정,²⁶⁾ 자녀양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보육인프라 부족 및 미흡, 일-가정 양립 곤란, 보건의료 서비스 미흡 등을 진단한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개인(가족)에 따라 저출산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지역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결혼 및 출산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단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부장적인 문화 등)나 전통이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단하도록 한다. 요컨대, 저출산원인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진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출산율 변동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 모두를 적용하도록 한다. 거시적인 접근방법으로 지역의 출산수준 변동이 지역의 사회경제지표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²⁷⁾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별 즉, 소지역(읍면동)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수준별로 출산율 차이를 분석하여, 어떤 집단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 내 출생아의 특성도 출산수준 변동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쌍태아 이

26)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외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부산의 열악한 지역경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7) 이와 같은 진단에는 해당지역에 관한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미흡한 경우 자료구축에 관한 컨설팅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상의 출산이 증가한 경우 불임치료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해볼 수 있으며, 고순위(셋째아 등) 출산이 증가한 경우 정책이나 사회분위기의 영향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한다. 이론고찰과 시험조사 등을 통해 조사표(구조화된)를 설계하여, 훈련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소지역별로 결혼 및 출산의 수준과 행태 그리고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인구동태통계(결혼 및 출생 신고에 기반한 자료로 시군구별 집계·분석이 가능), 주민등록통계(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 기본 특성별 주민 파악 가능), 인구주택총조사 등이며, 미시적인 자료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5. 단계 V: 정책 도출 및 설계 컨설팅

가. 정책 도출

종합적인 지역사회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저출산 원인들이 명료화해지면, 이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정책 모색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분위기의 문제인 경우에는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보육시설 등 자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프라 확충 정책을, 자녀양육비 문제인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정책 실시 등을 고려한다. 해당 지역에 중요한 저출산 원인으로 판명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고유한 정책 수요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지역단위 저출산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로 여러 정책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으나 예산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내재된 특수한 원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나 주민의 욕구가 높은 정책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도출된 정책들이 지역사회 환경 하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일지라도 예산, 수행조직, 가용자원(인프라), 주민 태도 등 여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원인 파악-필요 정책 도출-지역사회 여건 진단-최종 정책 도입 결정 등 원인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한다. 진단 결과, 수행이 곤란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추도록 한다.

정책 대상을 명료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인력, 예산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지역(도시, 농촌), 결혼상태(미혼인구와 기혼인구), 성별, 연령, 학력, 직업(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기 출산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가급적 출산수준이 낮고 정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구집단별 혹은 계층별로 출산율을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나. 정책 설계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정책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책설계단계는 정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설계는 크게 비전 및 목표 설정, 기본전략 수립, 추진과제 설정, 평가·환류 기획 등으로 구분하여 컨설팅 한다.

비전 및 목표는 해당 지역의 특수 상황과 주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한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국민의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것으로, 그 비전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출산율 제고가 될 것이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단일정책에 의해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일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결정요인들의 변화로 설정하도록 컨설팅 한다. 예를 들면, 주민 의식의 변화, 결혼률 증가, 보육시설 수 증가,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증가율, 지역사회 직장 내 육아휴직률 증가, 예방접종률 증가, 산모검진을 증가

등이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실천 가능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이 되도록 컨설팅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서 과제는 프로그램 체계화, 서비스 개발 및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정책대상 명료화, 수행기간 책정, 수행조직(인력) 구축, 예산 확보, 가용한 지역사회자원 파악 및 활용, 지역사회 및 주민의 참여 유도, 홍보활동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한편, 정책수행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평가 및 환류도 정책설계단계에서 강구되도록 한다. 여기에는 평가·환류의 주체, 시기(일정), 방법(수단) 등이 구체화되도록 한다.

6. 단계Ⅵ: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컨설팅

개인이나 조직의 역량은 수행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능력으로, 컨설턴트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업무수행 당사자의 어떤 점을 집중해서 컨설팅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실행 이전에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기획 과정부터 실제 모니터링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컨설티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당초 기획되었던 내용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내용간의 차이를 찾아낸다. 차이가 발생한 경우 즉각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기획 상 문제점(예상보다 투입 자원이 부족, 환경이 예기치 않게 변화하는 등) 때문인지 수행자의 착오 등 정책 외부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인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근본 원인이 밝혀지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곧 바로 치유 또는 보정하도록 하며, 정책의 특성상 수행과정에서 치유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번 실행에서 치유하도록 한다.

7. 단계Ⅶ: 정책 평가 및 환류 컨설팅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과정을 컨설팅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획, 관리, 서비스 전달 등 제 영역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표 5-1〉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평가: 성과산물 지표 예시

정책	중간성과산물	최종성과산물
사례1: Dating 서비스 제공	결혼건수 증가	결혼률 제고
사례2: 결혼준비교육 제공	결혼, 임신, 출산 양육관련 지식 상승	출산율 제고, 고위험률 저하, 이혼률 감소 등
사례3: 임신부·영유아 편의증진	임신·출산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의식) 증가	출산율 제고, 고위험률(사고율) 저하 등
사례4: 직장여성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임산부·영·유아 검진서비스율 제고, 예방접종률 상승	출산율 제고, 고위험률 저하
사례5: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험료 지원	자녀양육부담 경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식) 증가	출산율 제고, 미래 노동력 상실 감소
사례6: 결혼·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제공	결혼·임신·출산 양육관련 지식증가	출산율 제고, 고위험률 저하
사례7: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 중요성 의식 제고,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식) 증가	출산율 제고, 가족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
사례8: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공	자녀양육부담 경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식) 증가	출산율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주: 사례 일련번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제4장 참조)

평가 및 환류는 정책설계단계에서 마련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방법에 따라서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부터 평가툴(tool)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책의 산출물로서 성과지표를 미리 설정하여 수행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측정하도록 한다(표 5-1 예시 참조).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곧 컨설팅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²⁸⁾ 컨설티로서 조직이나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도 평가하도록 한다. 특히,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평가자료 준비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의 기회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로 학습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8) 컨설팅은 궁극적으로 ‘성과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여러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성과에 이르게 된다(조일현·황광용·박인정, 2003:126).

제 3 절 컨설팅모형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앞서 개발된 컨설팅 지원모형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상적으로 적용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주된 목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컨설팅 모형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컨설팅 지원모형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험-환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중소도시인 영주시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영주시에서 최근 주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주시의 컨설팅 시뮬레이션 사례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성이 있다. 또한, 영주시의 경우에도 관련 기초자료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단지 방법의 예시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가상·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요컨대,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컨설티 및 컨설턴트 선정(1단계)

□ 컨설티 선정

- 영주시에서는 저출산 대응 조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에 저출산담당(6급 1명, 7급 2명)을 두고 있으나 실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
 - 보건소(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이외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경제활성화팀 등(표 5-2 참조)
 - 정책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일상적 업무 협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
- 따라서 보건사업과장과 저출산담당을 중심으로 관련과의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컨설티T/F를 구성하여 운영(직원의 역량개발 학습효과 발생)

〈표 5-2〉 영주시 저출산 대응 업무 담당부서 및 업무

해당 부서	담당 업무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기혼여성, 영유아 건강관리: 당뇨, 소변, 간염 검사, 출산준비, 모유수유, 산전관리방법, 모자보건수첩 보급, 영유아 철분제·영양제 지급 • 출산지원금 지급 • 상담·홍보: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모자보건 및 성교육 • 영유아 건강관리: 수두 무료 예방접종 • 발육부진아 건강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대상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출산과 관련된 법령에 규정된 사항 • 임신부 우대시책(차량 5부제 면제,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탄력근무제 운영) • 출산지원(경제적 지원, 출산휴가 등) • 자녀양육지원(직원 자녀 보육료,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확충 등) • 다자녀 직원 지원(경제적, 인사우대 등)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건강검진비 지원 •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정보통신과	•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홍보
농정과수과	• 농업 영유아 자녀 양육비
농촌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촉진: 국제결혼 추진 • 어린이 농심가꾸기 교육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경제활성화팀	• 저출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분위기 조성

자료: 1)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2)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 컨설턴트 선정

- 영주시가 오래 전부터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왔던 관내 대학 교수 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시 소재 대학 교수 중 선정²⁹⁾(*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지원단’ 선정 고려)
- 영주시의 지역특성에 정통, 평소 친밀감(rapport) 형성, 시간과 비용 절약 등 장점들 때문

29) 참고로 영주시 관내에는 동양대학교, 경북불교대학, 한국폴리텍6대학 등이 있으며, 인근 대구광역시에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이 있다.

- 보건 등 특정 분야의 전공자로서 저출산 관련 제 영역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존재하므로, 관련전공 교수 또는 지방연구원의 전문가들(인구, 사회정책,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육·교육, 여성정책 등 분야)과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명시

○ 학술용역 형태로 계약 체결

- 인건비, 여비, 회의비 등 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제 비용을 산정하여 프로젝트 예산으로 책정
- 특히, 지역진단을 위한 조사 실시 등을 사전적으로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
 - 컨설턴트는 조사기획만 수행하고, 실질 조사는 컨설티가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은 분리하여 책정
- 컨설팅 기간은 정책 기획(조사 포함), 수행 및 평가·환류의 전 과정(단계)을 포함하여 1년으로 설정
 - 정책 기획만 컨설팅 하는 경우 6개월 기간으로 가능하며, 장기간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

○ 최종적인 컨설턴트 선정은 조달청 공모방식 준용

2. 컨설팅 종합계획 수립(2단계)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환경 진단

○ 동원 가능 조직(인원, 전문성) 진단

- 영주시의 경우 종합행정체제로 과 및 담당은 동시에 많은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컨설티T/F에 소속된 직원들마저 상시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이들 직원마저 전문성이 비교적 낮다는 한계성이 존재
- 결국 컨설팅 전 과정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저출산담당자들과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므로, 전체 컨설팅 일정은 단기적인 수행보다 교육 등을 겸하여 다소 천천히 진행될 필요성 있음.

○ 이용가능 자료(종류, 정밀도 등) 진단

-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사항들을 컨설팅 계획에 반영
- 컨설팅 시간 및 방법 설정
 - 컨설팅은 초기에 집중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필요시 수시로 진행
 - 지자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고려하여 지시적 방법보다 자문적 방법 선택

□ 컨설턴트와 컨설티간 협의 하에 컨설팅종합계획 수립(예시)

- 단계별 수행사항 및 일정(예시에서는 세부 수행사항 생략)

〈표 5-3〉 컨설팅 종합계획(예시)

일정	추진 소요 월수 (1년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컨설팅 종합계획수립 ○ 활용가능 인력, 자료 진단 등 ○ 세부 수행사항 및 일정 수립												
■ 자료 수집 ○ 주민육구조사 실시 ○ 영주시 관련 통계자료 수집 등												
■ 지역 진단 ○ 지역 환경 진단 ○ 주민 의식 등												
■ 지역 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도출 ○ 가능한 복수의 정책 선정												
■ 지역 공청회 개최 ○ 여론 수렴 ○ 정책 보완 및 확정												
■ 정책 세부 설계 ○ 대상 선정, 수혜 내용, 추진방법, 시기·장소 등												
■ 정책 집행 및 모니터링 ○ 정책 홍보 ○ 정책대상 접근 및 수혜제공												
■ 정책 평가 및 환류 ○ 출산율 기여도 등 성과 측정 ○ 만족도 조사 및 정책 보완												

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수행사항 및 일정 작성(여기에서는 가상적으로 약식 제시).

3. 자료수집 컨설팅(3단계)

※지역인구 및 변동요인(출산 포함)의 심층분석을 위한 시계열 자료 수집을 위한 컨설팅
 ※지역인구 변동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대한 컨설팅

☐ 일차자료 수집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영주시에 해당되는 내용(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생산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 의뢰)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성, 연령, 소지역, 경제활동상태, 직업, 종사상지위, 교육수준 등) 인구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모의 연령, 경제활동상태, 직업, 종사상지위, 교육수준 등) 평균 출생아수 등
- 주민등록자료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성, 연령, 소지역 등) 인구
- 인구동태통계(출생신고서 및 혼인신고서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영주시민의 신고 내용에 관한 통계 생산)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부모의 연령, 경제활동상태·직업·종사상지위, 교육수준 등) 출생아수 및 출산율
 - 출생장소, 출산순위, 태수, 출생아 체중 등 출산행태 등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경제활동상태·직업·종사상지위, 교육수준 등) 혼인연령, 혼인회수(초혼, 재혼)
- 표본조사 실시
 - 영주시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저출산원인 및 주민 욕구를 진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미흡
 - 따라서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표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여기에서는 영주시에 기 실시한 조사를 이용)

-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영주시 보건소에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한 “영주시 지역건강현황분석을 위한 지역사회진단(2007)”을 주민 욕구조사로 간주함.
- 동 조사는 건강증진사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현재 영주시 전체 가구에서 20세 이상을 대상(표본인구는 1,467명으로 20세 이상 인구의 1.62%)으로 건강수준과 건강증진행위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가구면접조사방법을 적용

☐ 이차자료 수집

- 통계청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를 이용
 -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상태, 산업구조, 직업구조, 종사상지위, 출산수준 등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통계표

4. 지역사회 진단 컨설팅(4단계)

가.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진단

※인구변동과 연관된 지역의 경제상황, 산업구조, 직업구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변동 상황 진단토록 컨설팅
 ※인구변동과 연관된 지역사회인프라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토록 컨설팅

(1) 지역 재정

☐ 재정자립도

- 영주시의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18.4%에 불과(2008년 행정자치부 자료)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3.9%에 비해 매우 낮고, 경상북도 평균 재정자립도 20.7%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
 - 예산 부족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등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에 한계성으로 작

용할 것으로 판단

〈표 5-4〉 영주시 재정자립도, 2005~2006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회계 총예산	226,000	255,600	29,600
재정자립도	17.7	18.2	0.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2) 지역 경제

□ 사업체 현황

- 사업체수는 2005년 기준으로 총 2,715개소이며, 이 중 숙박및음식점업이 23.4%, 도매및소매업이 22.3%로 약 50%를 차지
- 이외 기타공공및수리개인서비스업 14.6%, 제조업 7.7%, 교육서비스업 7.1%, 건설업은 6.0% 순

〈표 5-5〉 2005년도 영주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수, %)

산업	전 산업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	운수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개인 서비스업
사업 체수	2715	5	11	209	4	163	605	635	62	7	90	44	58	192	136	98	396
비율	100.0	0.2	0.4	7.7	0.2	6.0	22.3	23.4	2.3	0.3	3.3	1.6	2.1	7.1	5.0	3.6	14.6

자료: 통계청(2005).

□ 종사자수 현황

- 이들 산업에의 종사자수는 2005년 기준으로 18,725명이며, 이 중 17.26%가 제조업에 종사하여 가장 많음.

- 다음으로 도매및소매업(14.6%), 운수업(14.0%), 숙박및음식점업(11.1%), 교육서비스업(10.2%) 등에 집중
- 여성의 경우, 숙박및음식점업(20.7%), 도매및소매업(18.4%), 제조업(14.0%)교육서비스업(12.9%), 보건및사회복지사업(10.5%) 등에 집중

〈표 5-6〉 2005년도 영주시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		여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산업	18,725	100.00	11,396	100.00	7,329	100.00
농업 및 임업	94	0.50	70	0.61	24	0.33
광업	129	0.69	118	1.04	11	0.15
제조업	3,232	17.26	2,209	19.38	1,023	13.9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16	0.62	100	0.88	16	0.22
건설업	1,330	7.10	1,180	10.35	150	2.05
도매 및 소매업	2,734	14.60	1,383	12.14	1,351	18.43
숙박 및 음식점업	2,074	11.08	556	4.88	1,518	20.71
운수업	2,617	13.98	2,455	21.54	162	2.21
통신업	81	0.43	67	0.59	14	0.19
금융 및 보험업	1,209	6.46	607	5.33	602	8.21
부동산 및 임대업	291	1.55	211	1.85	80	1.09
사업서비스업	407	2.17	279	2.45	128	1.75
교육 서비스업	1,912	10.21	967	8.49	945	12.8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69	5.71	297	2.61	772	10.53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349	1.86	225	1.97	124	1.69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1,081	5.77	672	5.90	409	5.58

자료: 통계청(2005).

□ 종사상지위

- 종사상지위로 상용직이 6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직(14.8%), 무급(가족)종사자(10.9%), 자영업주(10.5%) 순
- 여성취업자의 경우, 상용직이 54.2%로 전체 주민에 비해 낮고 대신 임시 및 일용직 18.4%, 무급(가족)종사자 17.3% 등
- 여성 고용불안정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며, 소득수준도 낮은 것으로 판단

〈표 5-7〉 영주시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05

(단위: 명, %)

구분	계		남		여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총 종사자수	18,725	100.0	11,396	100.0	7,329	100.00
자영업주	1,960	10.5	1,219	10.7	741	10.1
무급(가족)종사자	2,035	10.9	766	6.7	1,269	17.3
상용종사자	11,954	63.8	7,981	70.0	3,973	54.2
임시및 일용종사자	2,776	14.8	1,430	12.6	1,346	18.4

자료: 통계청(2005).

(2) 지역사회 인프라

☐ 보건의료시설

- 영주시 관내 의료기관은 총 123개소로 보건소(지소, 진료소)의 공공부분을 제외한 민간병의원은 99개소
 - 민간의료기관 대부분 영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면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약
 - 면지역에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운영

〈표 5-8〉 영주시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수)

[illegible]

〈표 5-8〉 (계속)

(단위: 개소수)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순흥면	2	-	-	-	-	-	-	-	-	-	1	1
단산면	2	-	-	-	-	-	-	-	-	-	1	1
부석면	4	-	-	1	-	-	-	-	-	-	1	2
상망동	1	-	-	1	-	-	-	-	-	-	-	-
하망동	21	-	-	11	-	-	7	-	3	-	-	-
영주1동	32	-	1	17	-	-	6	-	8	-	-	-
영주2동	18	-	1	9	-	-	6	-	4	-	-	-
휴천1동	2	-	-	1	-	-	-	-	1	-	-	-
휴천2동	7	-	-	3	-	-	2	-	1	1	-	-
휴천3동	3	-	-	2	-	-	1	-	-	-	-	-
가흥1동	4	-	1	3	-	-	-	-	-	-	-	-
가흥2동	-	-	-	-	-	-	-	-	-	-	-	-

자료: 영주시(2005).

나. 지역인구 변동 진단

※지역의 인구규모, 구조, 분포와 관련한 제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컨설팅
 ※지역의 인구변동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분석토록 컨설팅
 ※지역의 인구문제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인구규모

- 총인구는 1997년 135,381명에서 2007년 115,083명으로 지속적 감소(지난 10년간 20,298명 또는 15.0% 감소)
 - 인구감소율은 2002년 -2.08%을 저점으로 최근 다소 둔화 추세
- 외국인인 1998년 123명에서 2005년 570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약 4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구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미세
 - 2005년 외국인인 총인구의 0.5% 수준에 불과
- 세대수는 1997년 41,219세대에서 2005년 43,914세대로 지속적 증가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노인부부, 노인단독)가 증가한데 기인(실제 평균가구원수가 급격 감소)

- 가구 증가가 출산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임세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표 5-9〉 영주시 인구 추이(1997~2007)

(단위: 명, %)

구분	인구			인구증가율	외국인	세대	세대당인구
	계	남	여				
1997	135,381	67,623	67,758	-1.24	151	41,219	3.3
1998	134,897	67,532	67,365	-0.36	123	41,990	3.2
1999	133,664	67,006	66,658	-0.92	130	42,261	3.2
2000	131,351	65,808	65,543	-1.76	176	42,561	3.1
2001	128,924	64,491	64,433	-1.88	217	42,746	3.0
2002	126,303	63,257	63,046	-2.08	263	42,918	2.9
2003	124,084	62,092	61,992	-1.79	278	43,423	2.9
2004	121,908	61,014	60,894	-1.78	395	43,648	2.8
2005	119,668	59,858	59,810	-1.87	570	43,914	2.7
2006	117,734	58,777	58,957	-1.64	769	44,182	2.7
2007	116,062	57,808	58,254	-1.44	979	44,447	2.6

자료: 1) 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2) 2006~2007년 인구는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

□ 인구구조

- 2007년 기준으로 유소년인구는 15.2%, 생산가능인구는 67.7%, 노인인구는 17.1%로 나타남.
-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 전망
- 주로 보육 대상이 되는 0~4세 인구는 2000년 7,072명에서 2007년 4,222명으로 감소 추이
-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93,049명에서 2007년 77,939명으로 감소하여 지역사회 내 노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
-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

난 7년 동안 4,363명 증가

- 보건의료지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

〈표 5-10〉 영주시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07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총인구	131,175	100.0	119,098	100.0	115,083	100.0
유소년인구(0-14)	22,790	17.4	19,172	16.1	17,545	15.2
0-4세	7,072	5.4	4,715	4.0	4,222	3.7
생산가능인구(15-64)	93,049	70.9	81,688	68.6	77,939	67.7
노인인구(65세이상)	15,336	11.7	18,238	15.3	19,699	17.1
전기고령층(65-74)	9,757	7.4	11,692	9.8	12,605	11.0
중기고령층(75-84)	4,529	3.5	5,223	4.4	5,662	4.9
후기고령층(85세+)	1,050	0.8	1,323	1.1	1,432	1.2

자료: 1) 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2) 2007년 인구는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

□ 인구분포

- 영주시 관내 9개 동, 1개 읍, 9개 면의 인구분포는 큰 변동이 없음.
 - 2000년도 비교하여 상망동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을 뿐,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
 -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출생아수 감소와 유출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영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표 5-11〉 영주시 동읍면별 인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07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체	131,175	100.00	119,098	100.00	115,083	100.00
상망동	8,147	6.21	8,746	7.34	9,180	7.98
하망동	8,225	6.27	8,629	7.25	8,205	7.13
영주1동	8,485	6.47	6,563	5.51	5,995	5.21
영주2동	6,632	5.06	5,473	4.60	5,193	4.51
휴천1동	6,515	4.97	7,485	6.28	7,902	6.87
휴천2동	13,947	10.63	11,716	9.84	11,072	9.62
휴천3동	13,099	9.99	11,406	9.58	10,773	9.36
가흥1동	12,360	9.42	11,089	9.31	10,605	9.22
가흥2동	7,093	5.41	8,407	7.06	8,042	6.99
풍기읍	16,093	12.27	13,523	11.35	12,865	11.18
이산면	3,552	2.71	3,227	2.71	3,163	2.75
평은면	2,742	2.09	2,494	2.09	2,327	2.02
문수면	2,426	1.85	2,071	1.74	2,048	1.78
장수면	3,142	2.40	2,695	2.26	2,590	2.25
안정면	4,236	3.23	3,663	3.08	3,586	3.12
봉현면	3,744	2.85	3,209	2.69	3,160	2.75
순흥면	3,047	2.32	2,510	2.11	2,417	2.10
단산면	2,908	2.22	2,392	2.01	2,344	2.04
부석면	4,782	3.65	3,800	3.19	3,616	3.14

자료: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

□ 인구변동요인

- 출생아수가 1996년 1,537명, 2000년 1,400명, 2005년 878명으로 지속적 감소
 - 총인구(1,000명당)대비 출생아수 비율인 조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규모 감소뿐만 아니라 출산율 자체의 감소에 기인
-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조사망률(총인구대비 사망자 비율)도 감소하여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사망률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이는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인구고령화 속도를 가속시키는 작용
- 혼인건수와 혼인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혼인 연기·기피 경향
 - 대부분 출생이 법률혼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혼인 감소는 출생아 감소

로 직결되어 나타날 것임.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은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족불안정은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 가능

〈표 5-12〉 영주시의 연도별 인구동태, 1996~2006

(단위: 명, ‰)

구분	출산		사망		혼인		이혼	
	출생아수	조출산율	사망자수	조사망율	혼인수(쌍)	조혼인율	이혼수(쌍)	조이혼율
1996	1,537	11.21	1,160	8.46	1,370	10.00	201	1.47
1997	1,493	11.03	1,185	8.75	1,141	8.43	202	1.49
1998	1,457	10.80	1,182	8.76	1,018	7.55	238	1.76
1999	1,375	10.29	1,177	8.81	837	6.26	233	1.74
2000	1,400	10.66	1,118	8.51	767	5.74	222	1.69
2001	1,263	9.80	1,136	8.81	696	5.40	300	2.33
2002	1,041	8.24	1,138	9.01	571	4.52	252	2.00
2003	1,013	8.16	1,041	8.39	609	4.91	275	2.22
2004	932	7.65	1,049	8.60	541	4.44	216	1.77
2005	878	7.34	1,041	8.70	617	5.16	232	1.94
2006	836	7.10	908	7.71	551	4.68	251	2.13

자료: 1) 영주시, 「통계연보」, 각년도.

2) 2006년 자료는 통계청 KOSIS(인구동태).

-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은 초과전출이 2000년 2,721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2천명 이상에서 다시 증가
 -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초과전출현상은 특별상황(신도시 개발, 공단 설립 등 인구 흡입요인 발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출생아수 증가가 영주시 인구 유지에 중요
 - 특히 출생아수 감소와 젊은층 인구의 유출(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한 젊은층과 여성인구 유출이 심함)로 인하여 지역의 인구고령화는 가속화되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활기가 사라질 것임.

〈표 5-13〉 영주시의 연도별 인구이동, 1996~2005

(단위: 명, %)

구분	이동자수			이동률(%)		
	전입	전출	전입-전출	전입	전출	전입-전출
1996	18,299	20,289	-1,990	13.5	15.0	-1.5
1997	16,165	18,283	-2,118	12.0	13.6	-1.6
1998	18,712	19,388	-676	14.0	14.5	-0.5
1999	18,838	20,349	-1,511	14.3	15.5	-1.2
2000	16,285	19,006	-2,721	12.6	14.7	-2.1
2001	15,468	18,175	-2,707	12.2	14.4	-2.1
2002	15,831	18,342	-2,511	12.8	14.8	-2.0
2003	18,879	20,954	-2,075	15.5	17.2	-1.7
2004	13,787	15,857	-2,070	11.5	13.3	-1.7
2005	14,543	16,861	-2,318	12.4	14.3	-2.0

자료: 영주시(2007).

□ 영주시 인구변동 특성 분석결과의 함의

- 저출산현상으로 출생아수 감소 및 그로 인하여 미래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
 - 혼인건수 감소에 기인한 가족형성 지연 및 이혼건수 증가에 따른 가족불안정성 증가로 저출산현상 가속화 우려
- 인구유출(이동)로 인한 노동력 감소 전망
 - 인구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한 젊은 가임인구의 유출이 심화되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 발생
- 사망률 개선에 따른 사망자수 감소로 노인인구의 절대규모 증가
 - 출생아수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구고령화 가속화 작용
- 종합적으로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고령화 가속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불활성화 및 지역경제 침체 전망
 - 지역의 인구흡입요인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영주시의 인구위기는 출산 증가로 해결하는 방안 모색

- 출산 증가는 결국 가임여성인구 증가와 이들의 출산율 증가에 의해 가능하므로, 이들 가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유인과 이들이 출산하기에 유리한 지역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
- 따라서 저출산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저출산원인의 명료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도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

다. 지역의 출산수준 및 결정요인 진단

(1) 출산수준

※지역의 출산수준과 시계열적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출산율 변동이 심한 시기의 지역상황을 진단하여 간접적으로 원인을 규명토록 컨설팅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지역의 출산수준 변동의 특이상황을 진단하도록 컨설팅

☐ 출산수준

- 영주시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1.49에서 2005년 1.10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 1.19로 다소 회복
- 영주시도 2002년부터 초저출산사회(합계출산율 1.30 미만) 진입

☐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 영주시의 합계출산율은 경상북도 수준보다 낮으나, 전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 유지(1997년과 2004년 제외)
- 영주시의 저출산 원인구조가 전국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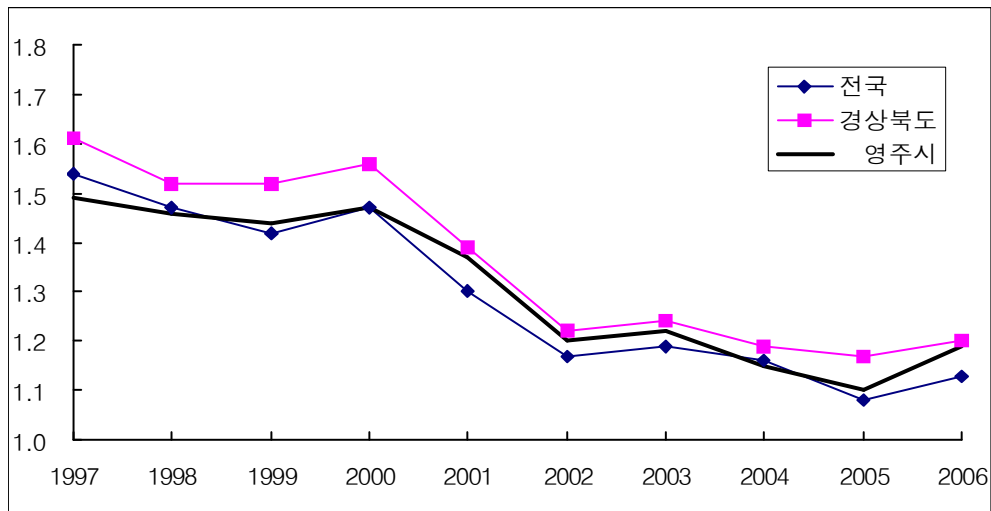
〈표 5-14〉 영주시 합계출산율 추이, 1997~2006

(단위: 명)

구분	전국	경상북도	영주시	지역간 비교	
				영주시-전국	영주시-경북
1997	1.54	1.61	1.49	-0.05	-0.12
1998	1.47	1.52	1.46	-0.01	-0.06
1999	1.42	1.52	1.44	0.02	-0.08
2000	1.47	1.56	1.47	0.00	-0.09
2001	1.30	1.39	1.37	0.07	-0.02
2002	1.17	1.22	1.20	0.03	-0.02
2003	1.19	1.24	1.22	0.03	-0.02
2004	1.16	1.19	1.15	-0.01	-0.04
2005	1.08	1.17	1.10	0.02	-0.07
2006	1.13	1.20	1.19	0.06	-0.01

자료: 1) 1997~2004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출생신고 원자료와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2) 2005~2006년은 통계청 KOSIS(인구동태).

〔그림 5-3〕 전국, 경상북도 및 영주시 합계출산율 비교, 1997~2006



자료: 1) 1997~2004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출생신고 원자료와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2) 2005~2006년은 통계청 KOSIS(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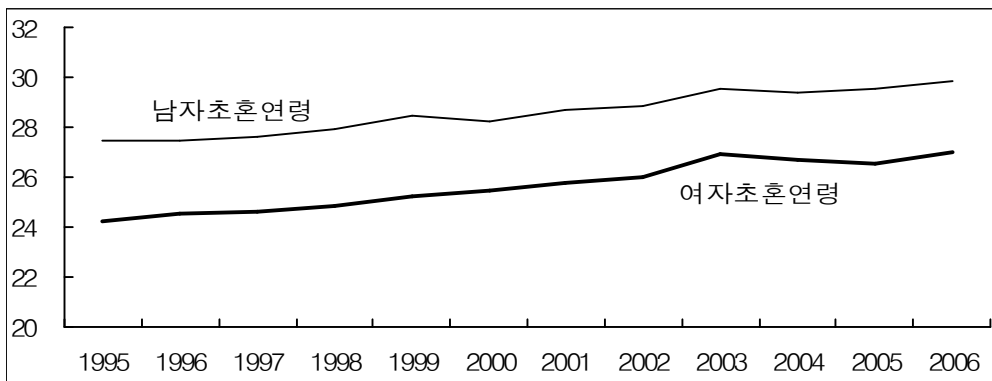
(2) 출산행태

※주민의 출산행태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출산변동 원인을 규명토록 컨설팅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지역의 출산행태 변동의 특이상황을 진단하도록 컨설팅

□ 초혼연령 변동

- 영주시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6년 27.5세에서 2006년 29.8세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평균초혼연령도 1996년 24.5세에서 2006년 26.5세로 증가
- 이러한 만혼화는 출산에 부정적 역할(후천성불임 발생 등)

[그림 5-4] 영주시 남녀의 평균초혼연령, 1995~2006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자료(원자료).

- 2005년 기준으로 영주시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51.9%로 반절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30~34세 여성의 경우에도 12.5%가 미혼상태
- 영주시 남성의 경우 25~29세와 30~34세 미혼율은 82.4%와 38.1%로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
- 특히, 남성의 미혼율은 35~39세의 경우 17.8%, 40~44세의 경우 10.2%, 45~49세의 경우 5.0%로 비혼화 경향이 뚜렷하며, 이들 고연령층 남성들의 비혼은 주로 비자발적인 것으로 판단

〈표 5-15〉 영주시 가임기 남녀인구의 미혼율(200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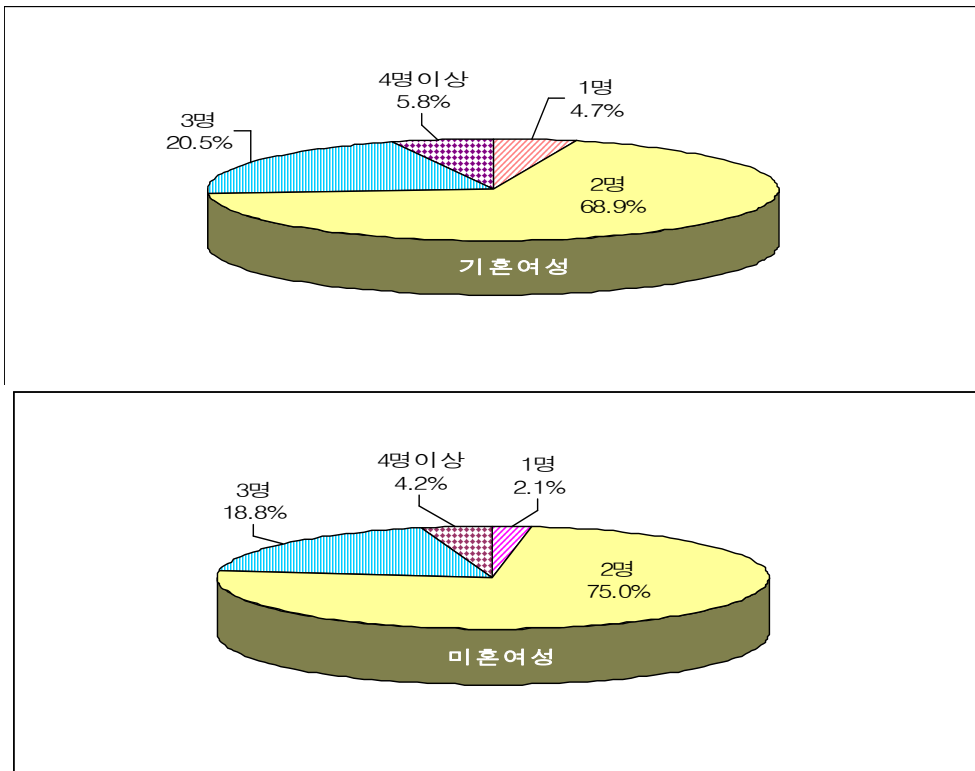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성	100.0	99.0	82.4	38.1	17.8	10.2	5.0
여성	99.7	92.6	51.9	12.5	4.6	2.8	1.9

자료: 통계청 KOSIS(인구총조사).

□ 평균자녀수, 기대자녀수(추가출산 의향) 등 가족규모 관련 행태

- 기혼여성(20~49세)의 출생아수는 2명 68.9%, 3명 20.5%, 4명 이상 5.8% 반면, 미혼여성의 희망출생아수는 2명 75.0%, 3명 18.8%, 4명 이상 4.2%
- 미혼여성의 다자녀출산 희망율이 낮아, 향후 저출산현상 심화 판단

[그림 5-5] 영주시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및 미혼여성의 희망출생아수 비교, 2007



□ 출산순위

- 영주시 출생아의 출산순위 구성비는 2006년의 경우 첫째아 47.5%, 둘째아 39.8%, 셋째아 이상 12.7%
 - 전국 및 경상북도와 비교해보면, 첫째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영주시 출생아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는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의 고출산순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 지역에서도 저출산현상이 그 대로 반영되고 있음.

〈표 5-16〉 출산순위별 출생아 분포

(단위: %)

구분	출생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아	47.2	47.6	48.7	49.6	51.1	51.8	52.0
2아	42.4	42.3	41.3	41.0	39.3	38.6	38.5
3아+	10.4	10.1	10.0	9.5	9.6	9.6	9.5
경북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아	45.8	45.2	46.5	46.7	48.7	49.6	51.0
2아	43.3	44.2	43.0	43.4	41.1	40.4	39.0
3아+	10.9	10.6	10.5	9.9	10.2	10.0	10.1
영주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아	46.7	44.3	41.3	41.7	47.9	44.5	47.5
2아	40.6	41.8	45.1	44.2	41.0	43.0	39.8
3아+	12.8	14.0	13.6	14.0	11.1	12.5	12.7

자료: 통계청 KOSIS(인구동태).

□ 출생성비

- 영주시 출생아의 출생성비는 연도에 따라 다소 큰 폭으로 변화하는 특징
 - 2000년 116.1에서 2001년 105.4로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2002년에는 123.1로 큰 폭으로 상승

-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어 2003년 108.2로 낮아지다가 다시 2005년에 121.3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06년에는 105.4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
- 전반적으로 영주시 출생아의 출생성비는 전국은 물론 경상북도의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부 연도의 경우에는 영주시 출생성비는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2001년, 2003년, 2006년)
- 일부 연도에서 예외적이나, 영주시 출생성비가 전국이나 경북의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남아선호도가 높은 점을 의미
- 특히, 고출산순위에서 높은 출생성비는 남아를 낳기 위해 추가 출산으로의 이행이 비교적 활발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출산순위의 출생아비율이 높은 점과도 연계될 수 있음.
- 영주시 보건소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박재용, 2007) 결과,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기혼남성 중 34.6%, 기혼여성 중 34.1%가 남아를 반드시 가질 생각으로 응답

〈표 5-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동 추이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구분	출생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계	110.2	109.0	110.0	108.7	108.2	107.7	107.4
1아	106.2	105.4	106.5	104.9	105.2	104.8	105.6
2아	107.4	106.4	107.3	107.0	106.2	106.4	106.0
3아+	143.9	141.4	141.2	136.6	132.7	128.2	121.7
경북계	113.6	111.9	114.5	110.9	112.8	110.6	110.6
1아	108.7	104.3	109.9	105.8	107.2	103.9	107.4
2아	109.9	109.3	107.8	106.2	109.3	111.4	107.4
3아+	156.6	169.7	178.6	164.6	164.4	142.3	140.6
영주계	116.1	105.4	123.1	108.2	111.9	121.3	105.4
1아	108.7	89.8	97.6	105.1	107.1	96.7	96.5
2아	106.8	102.1	125.5	100.9	106.5	130.7	109.5
3아+	200.0	203.7	248.7	142.9	154.1	215.6	1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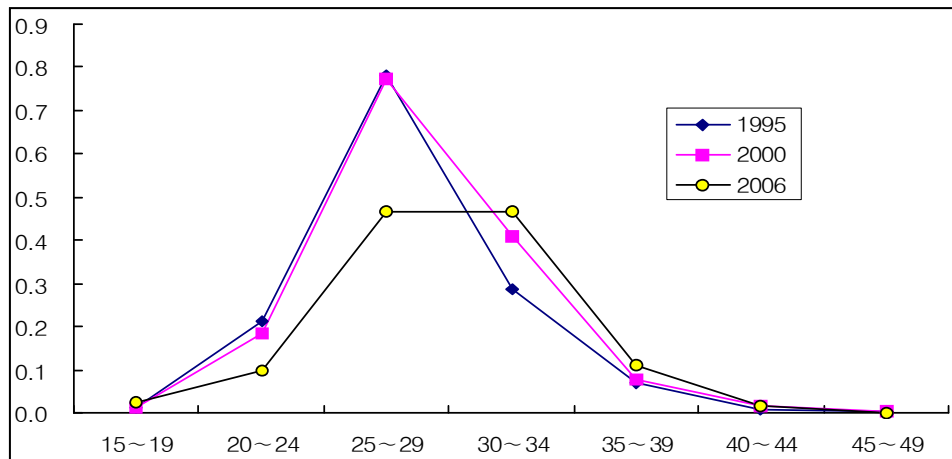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인구동태).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산력 차이

○ 영주시 가임여성인구의 연령별출산율

- 25~29세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30~34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6년에 두 연령대의 출산율이 유사
- 영주시 여성의 초혼연령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주된 출산연령층이 과거 25~29세에서 30~34세로 전이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
 - 만혼으로 인한 고령출산은 후천성불임증과 사회적 이유(늦은 나이에의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출산 축소 또는 포기 가능

[그림 5-6] 영주시 가임기여성의 연령별출산율 추이(1995, 2000, 2006)



자료: 1) 1995년과 2000년 자료는 통계청 출생신고 원자료와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
2) 2006년 자료는 통계청 KOSIS(인구동태).

- 이외 출생아 부모의 학력수준과 직업별 출산율을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집중 필요
 - 여기에서는 자료 부재로 생략

(3) 저출산 원인

※지역의 출산변동 원인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영역별로 진단하도록 컨설팅
 ※이를 위해, 인구통계에 대한 심층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파악, 지역문화에 내재된 출산관련 관행 등에 대해 분석토록 컨설팅

□ 인구학적 원인

-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가임여성인구 감소, 초혼연령 상승(결혼 연기 혹은 포기) 등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결혼 감소
 - 영주시 가임여성인구(15~49세)는 1995년 37천명 수준에서 2000년 34천명, 2007년 26천명으로 지속적 감소
 - 영주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 실제 결혼건수는 1996년 1,370건에서 2006년 551건으로 지난 10년간 59.8%로 감소

〈표 5-18〉 영주시 가임여성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15-49세)	38,537	38,086	35,318	34,312	33,355	31,866	30,628	29,439	28,154	27,031	25,967

자료: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

- 영주시에서 이혼의 증가는 가족안정성을 위협하여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혼건수는 2001년 300건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 251건으로 나타남(표 5-12 참조).
 - 가임여성인구 감소는 향후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

□ 사회경제적 원인

○ 일-가정 양립 곤란

- 영주시민(20~49세) 중 맞벌이부부인 비율은 38.5%(여성 기준)
- 영주시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 54.2%, 임시일용직 18.4%(표 5-7 참조), 이들은 일-가정 양립 문제를 겪을 것으로 판단

〈표 5-19〉 영주시 맞벌이부부 현황, 2007

(단위: 명, %)

구분	전체 (n=528)	성별		지역별	
		남(n=219)	여(n=309)	동(n=378)	면(n=154)
맞벌이부부	37.7	36.5	38.5	35.6	42.9
홀벌이부부 및 기타	62.3	63.5	61.5	64.4	57.1

출처: 박재용(2007).

○ 보육인프라

- 영주시 기혼인구(20~49세) 중 60.1%가 부인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육아에 전념을 택한 반면, 미혼인구의 경우 41.7%가 보육시설 이용 희망
 - 기혼인구가 자녀양육방법으로 여성 스스로 양육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신 및 비용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
 - 보육시설 이용 희망을 양적 및 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출산 축소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 존재

〈표 5-20〉 영주시 기·미혼인구의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의식

(단위: %)

구분	기혼(20~49세)			미혼(20~49세)		
	계	남	여	계	남	여
아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육아만 전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가 양육하되 탁아소, 보육원 이용	60.1	60.3	59.9	15.7	13.8	18.0
부부가 양육하되 부모님의 일부 전담	18.4	17.2	19.2	41.7	40.0	44.0
부모님 전담	12.8	13.4	12.3	31.3	32.3	30.0
기타	4.4	5.7	3.4	7.8	7.7	8.0
기타	4.4	3.3	5.1	3.5	6.2	-

출처: 박재용(2007).

- 기혼인구의 경우에도 향후 추가출산시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현재 보다 높은 23.7%(기혼여성 22.2%)로 나타나 보육인프라의 중요성이 큼.

〈표 5-21〉 영주시 기혼인구의 향후 추가출산시 희망 자녀양육방법

(단위: 명, %)

구분	전체 (n=528)	성별		지역별	
		남(n=219)	여(n=309)	동(n=378)	면(n=154)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경우 양육 방법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육아만 전담	55.2	56.8	54.1	56.5	51.7
부부가 양육하되 탁아소나 보육원 이용	23.7	25.8	22.2	22.6	26.4
부부가 양육하되 부모님의 일부 전담	9.5	6.1	11.9	10.9	5.7
부모님이 전담	3.2	3.0	3.2	2.6	4.6
기타	8.5	8.3	8.6	7.4	11.5

출처: 박재용(2007).

- 영주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44개소(2008년 3월 현재)로, 이 중 5개소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이고 나머지는 민간보육시설 36개소, 가정보육시설 3개소
 - 4개 면지역에는 전무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접근성 제약
- 이용아동수는 1,893명(0~4세 아동 중 약 40%)으로, 이중 85.5%가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13.2%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2005년 말 기준)

〈표 5-22〉 영주시 보육시설 현황(2008년 3월 현재)

(단위: 개소)

읍·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동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풍기읍	1	2	2	1	상망동	-	1	2	1
이산면	-	1	1	-	하망동	1	-	5	-
평은면	-	-	-	-	영주1동	-	1	1	-
문수면	-	-	-	-	영주2동	-	-	1	-
장수면	-	1	-	-	휴천1동	-	1	2	1
안정면	-	-	-	-	휴천2동	-	-	3	-
봉현면	-	-	-	-	휴천3동	-	1	1	-
순흥면	1	-	-	-	가흥1동	1	2	2	-
단산면	-	1	-	-	가흥2동	-	-	5	-
부석면	1	-	-	-					

자료: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 <http://www.gbcare.or.kr/>.

- 민간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국공립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영주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주민의 보육료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될 소지가 커 저출산원인으로 작용 가능

○ 열악한 지역경제 및 고용불안정

- 영주시 산업구조가 영세한 도매및소매업(14.6%) 및 숙박및음식점업(11.1%), 교육서비스업(10.2%) 등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표 3-6 참조)
- 종사상지위도 임시일용직 14.8%, 무급종사자 10.9%(여성취업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18.4%, 무급종사자 17.3%) 등으로 불안정(표 3-7 참조)
- 요컨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도 낮아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
 - 자녀양육비 증가 등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나, 관련 자료 부재로 영주시민의 자녀양육부담 계량화 곤란

□ 문화적 원인

-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양성평등관 등)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주시민 중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60.7%, 여성의 경우 56.1%

〈표 5-23〉 영주시민(20~49세)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n=699)	성별		지역별	
		남(n=316)	여(n=383)	동(n=472)	면(n=2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바람직하다	1.8	1.1	2.4	0.7	4.0
자연스런 사회현상이다	31.6	28.7	33.9	35.8	23.0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58.1	60.7	56.1	55.5	63.5
모르겠다	8.5	9.6	7.6	8.0	9.5

출처: 박재용(2007).

- 이는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이삼식 외, 2005a) 미혼남성의 75.2%(매우 심각 24.6%, 심각 50.6%), 미혼여성의 경우 78.7%(20.9%, 57.8%), 기혼여성의 경우 80.9%(33.3%, 4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영주시민(20~49세) 결혼가치관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45.0%,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5.0%(박재용, 2007).
- 전국 조사(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미혼 남성(20~44세)의 경우 29.4%, 미혼여성(20~44세)의 경우 12.9%, 기혼여성(20~44세)의 경우 10.8%에 불과(이삼식 외, 2005)
- 영주시민의 결혼가치관이 전국에 비해 긍정적인 편이나, 과거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의무로 여겨왔던 것에 비하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
- 영주시민의 자녀가치관의 경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60.8%,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9.2%로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박재용, 2007)
- 전국 조사(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미혼남성(20~44세) 61.1%, 미혼여성(20~44세) 53.8%, 기혼여성(20~44세) 64.4%로 영주시민의 생각과 큰 차이 없음.
- 그러나 결혼가치관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가져야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영주시민의 자녀관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
- 영주시민의 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은 여전히 성분업적 역할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기혼남성(20~49세)의 경우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찬성비율이 30.2%에 불과하며, 기혼여성(20~49세)의 경우에는 23.3%로 더욱 낮게 나타남.
- 반면, 육아의 여성전담에 대한 찬성비율은 남성의 경우 28.8%, 여성의 경우 10.4%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는 상반되게 나타남.

- 앞서 출생성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영남지방에 위치한 영주시에서 남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강함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이는 결국 문화적으로 가정 및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

〈표 5-24〉 영주시민(기혼남녀 20~49세)의 성역할에 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n=528)	성별		지역별	
		남(n=219)	여(n=309)	동(n=378)	면(n=154)
가사분담은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렇다	26.1	30.2	23.3	28.6	28.6
아니다	73.9	69.8	76.7	71.4	71.4
육아문제는 전적으로 아기 어머니가 담당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렇다	18.0	28.8	10.4	16.1	22.7
아니다	82.0	71.2	89.6	83.9	77.3

출처: 박재용(2007).

□ 영주시 저출산 원인구조 명료화

- ※ 앞선 개별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영주시의 저출산 원인구조를 명료화하는 컨설팅 수행(개별적인 분석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저출산원인을 확증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저출산원인들간 상대적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 앞선 개별적 영역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과 다른 영주시의 고유한 저출산원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저출산원인의 지속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하도록 함.

-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원인을 조사한 결과(박재용, 2007), 자녀양육 부담(44.0%), 경제적인 문제(28.4%),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한 일-가정 양립문제(12.1%), 여성의 의식(가치관) 변화(8.1%), 결혼연령 증가(5.3%) 순
- 이러한 저출산원인구조는 남녀응답자별 및 거주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남.
- 앞선 영역별 분석 결과에서도 자녀양육부담문제, 경제적 불안정, 일-가정 양립문제,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 변화, 비자발적 만혼화(비혼화), 지역사회의 관행

(남아선호) 등으로 영주시의 저출산 원인구조를 제시할 수 있음.

- 이러한 원인구조는 전국적인 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 변화, 비자발적 만혼화(비혼화), 지역사회의 관행(남아선호) 등은 영주시 고유의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음.

〈표 5-25〉 영주시민(20~49세)의 저출산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체 (n=699)	성별		지역별	
		남 (n=316)	여 (n=383)	동지역 (n=472)	면지역 (n=227)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적인 문제	28.4	28.8	28.1	27.8	29.6
자녀양육의 부담	44.0	42.4	45.3	46.2	39.7
결혼연령의 증가	5.3	7.0	3.9	3.7	8.5
출산 후 신체적 문제	0.5	0.4	0.6	0.2	1.0
맞벌이 부부의 증가	12.1	12.5	11.8	14.1	8.0
여성의 의식구조 변화	8.1	5.9	10.0	6.7	11.1
기타	1.5	3.0	0.3	1.2	2.0

출처: 박재용(2007).

5. 정책 도출 및 설계 컨설팅(5단계)

가. 정책 도출

- ※ 지역사회 진단 결과 및 저출산 원인구조를 토대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모색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
 - ※ 지역 환경 및 가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컨설팅

□ 주민 정책욕구

-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영주시민의 욕구는 보육료·교육비 지원(25.2%), 미숙아 및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 대한 요양급여 전액 지원(20.0%), 출산 보조금 지원(10.5%), 출산휴가 연장 및 급여보전(월급여 100%) 순

〈표 5-26〉 저출산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관한 영주시민(20~49)의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체 (n=699)	성별		지역별	
		남 (n=316)	여 (n=383)	동지역 (n=472)	면지역 (n=2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15.4	17.5	13.8	15.2	16.1
미숙아 및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 대한 요양급여 전액 지원	20.0	19.1	20.8	19.9	20.2
임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5.1	6.1	4.4	3.5	8.9
지자체 중심 출산 보조금지원	10.5	13.4	8.1	9.6	12.5
유아원, 유치원 교육비 지원	25.2	22.8	27.2	27.1	20.8
출산 휴가의 연장과 그에 따른 보수 100% 보전	8.1	6.1	9.7	6.1	12.5
육아휴직제도 활용 장려	2.4	1.6	3.0	2.9	1.2
보육시설 확대	4.4	4.5	4.4	4.8	3.6
야간보육 프로그램 개발	2.0	1.6	2.3	2.9	-
저소득층 가정 아동 보육비 지원	3.1	2.8	3.4	4.0	1.2
2자녀 가정 인센티브 제공	3.7	4.5	3.0	4.0	3.0

출처: 박재용(2007).

- ☐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및 인구에 대한 진단 결과를 종합화하여 영주시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도출
- 영주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데다가, 인구의 초과전출이 지속되어 미래 노동력 감소 및 급격한 인구고령화(조만간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불가피) 전망
- 최근에도 혼인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여 초저출산현상 지속 우려
 - 인구구조 상 그리고 젊은 인구의 유출로 가임여성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향후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이와 같은 지역인구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젊은 인구 유입(동시에 유출 방지)을 위한 인구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영주시에 신도시 건설, 공단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외부 인구의 유입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우선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은 타지의 가임기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관내 가임기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구이동정책으로도 간주할 수 있음.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사업)은 영주시의 저출산 원인구조를 토대로 도출
 -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 결과, 영주시민의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자녀관 및 결혼관 약화, 자발적 및 비자발적 만혼화, 성분업적 역할관 유지 순
 - 이 중 비자발적 만혼화, 성분업적 역할관 유지 등은 영주시에 특화된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영주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이들 원인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성 제기
- 그러나 저출산 원인별 중대성과 함께 주민 욕구, 영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예산의 한계성),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시에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도입하여야 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컨설팅
 - 우선 저출산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책은 여러 정책을 강구하기보다 대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지원 통합) 고려
 - 양육수당 지원은 예산 부담이 많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중앙정부 도입시 폐지하는 것으로 컨설팅(정책설계 참조)
 - 경제적 불안정에 대응한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대책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도록 컨설팅
 - 일-가정 양립 곤란에 대응한 정책은 산전후휴가 현실화, 육아휴직제 활성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고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컨설팅
 - 직장 관리자 및 남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을 고려하며, 공공기관

에서 술선수범하여 가족친화적(임신, 출산 및 양육) 직장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컨설팅

- 영주시 사례로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임신부 희망부서 우선 배치,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등 그리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등
- 영주시 일부 면지역에 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면단위 농촌지역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음.
- 결혼관 및 자녀관 약화, 성분업적 역할관 유지 등 가치관관련 정책은 홍보·교육사업으로 접근하도록 컨설팅
- 홍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편적으로 접근하며, 교육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개별적 접근 고려(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설계 참조)
- 비자발적 만혼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혼수비용 절감을 위한 홍보·계몽, 농촌노동자 결혼지원 등을 고려(구체적인 내용은 정책 설계 참조)

나. 정책 설계

※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 각각을 설계하기 위한 컨설팅
※ 비전 및 목표 설정, 기본전략 수립, 추진과제 설정 등에 대한 컨설팅
※ 세부정책별 대상, 방법,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컨설팅

☐ 비전

- 영주시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 설정

☐ 정책 목표

-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영주시 출산율 제고

☐ 추진과제

-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통합) 도입

- 지역경제 활성화
- 일-가정 양립 제고
 - 중앙정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직장 관리자 및 남성 대상 홍보·교육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적(임신, 출산 및 양육) 직장분위기 조성 시범
 - 이외 면단위 농촌지역에서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음.
- 결혼관 및 자녀관 약화, 성분업적 역할관 유지 등 가치관관련 홍보·교육
- 비자발적 만혼화에 대한 혼수비용 절감 홍보·계몽과 농촌노총각 결혼지원
- 세부정책 설계
 - 여기서는 양육수당을 예시로 제시하며, 다른 정책은 4장에서 제시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 등 참조

[양육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예시)]

구분	내용
정책	◦ 보육료 등을 포함한 양육수당 지급
목적	◦ 영주시민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을 제고
대상	◦ 2009년부터 태어난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인 가정(추후 둘째아까지 확대)
수당액	◦ 월 5만원 지급하되, 연차적으로 증액(예: 10만원)
지급기간	◦ 해당 아동의 2세까지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5세 이하까지 확대
지급방법	◦ 출생신고시 통장계좌번호를 제출하면, 시청에서 매월 입금
재원마련	◦ 지방비(지방일반회계 등)
담당부서	◦ 저출산대책 담당(또는 회계부서)
기타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6.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컨설팅(6단계)

※ 정책별로 기획내용과 실제수행내용간의 차이 분석 및 해결책 모색에 관한 컨설팅

□ 양육수당 지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컨설팅(예시)

- 재원 확보의 안정성
- 대상 파악의 투명화(누락 및 중복 방지)
- 전달체계(통장 입금 등)의 효율성
- 지원기간의 중첩 여부
- 실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7. 정책 평가 및 환류 컨설팅(7단계)

※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정책별 평가방법, 평가결과 분석, 환류 등에 관한 컨설팅

□ 양육수당 도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예시)

- 평가
 - 양육수당 수혜자의 추가출산이행에 관한 의식 변화 및 실제 이행률 측정
 - 양육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급 절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환류
 - 양육수당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환류)

제 4 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지원 확산 방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은 사업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컨설팅과 실질 정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컨설팅만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컨설팅 지원의 전국 확산방안은 이들 외형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1. 컨설팅-정책 연계 지원방안

가장 바람직한 컨설팅 확산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정책(사업)들에 대해 사업예산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컨설팅부터 관련정책의 수행 및 평가·환류까지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한편, 컨설팅과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소요예산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컨설팅 대상 기초자치단체를 연차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체계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적인 전문조직으로서 컨설팅지원단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이 경우 컨설팅 모형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단계는 생략된다). 컨설팅지원단은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구축하도록 한다(연구용역 발주형태).

컨설팅-정책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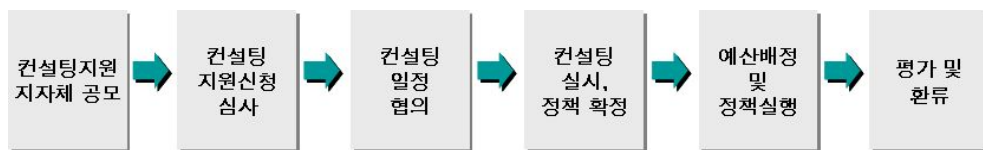
- (1)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받도록 한다. 이와 관련,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도록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신청서를 수합·정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컨설팅 신청서의 양식은 ① 배경 및 필요성, ② 지역 특성, ③ 기존 정책 추진 현황 및 신규정책에 대한 욕구, ④ 지역사회자원 현황, ⑤ 수행 조직(인력) 및 자체적으로 투입 가능 예산(matching fund), ⑥ 희망 사업기간 및 컨설팅 일정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2) 보건복지가족부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접수한 컨설팅 신청서를 심사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심사단을 구성한다. 심사기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저출산 대응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사업들의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심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1차심사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들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정밀하게 분석하는 단계로, 그 결과 컨설팅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초자치단체수의 1.5~2배수를 선정한다. 이때 컨설팅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초자치단체수는 기 확보된 예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차심사는 1차심사를 통과한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사업의 수행 여건을 심사한다. 1차심사와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컨설팅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초자치단체들을 확정한다.
- (3)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필요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최종적인 컨설팅 일정 등을 협의한다.
- (4) 컨설팅지원단은 기초자치단체 컨설티와 협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컨설팅을 수행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컨설팅 계획 수립 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진단, 정책 도출 및 설계 과정 등을 거친다. 한편,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완료되면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당해 예산을 배정 받는다(예산 배정의 편의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시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5) 예산을 배정받은 후에 컨설팅지원단의 컨설팅 지원 하에 해당 정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한다.

- (6) 마지막으로 정책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미흡점들을 보완·수정한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추후 컨설팅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그림 5-7] 컨설팅-정책 연계 지원방안 수행 절차



2. 컨설팅 서비스만 지원하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컨설팅의 결과로서 도출된 정책의 시행은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 방안은 다시 두 가지 세부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며, 다른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보건복지가족부가 컨설팅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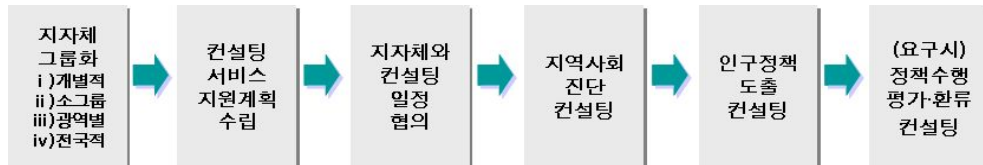
- (1)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컨설팅지원단으로 하여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한 수만큼 개별적 컨설팅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컨설팅서비스는 주로 지역사회 진단과 정책 도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출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행과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한다.
- (2) 컨설팅지원단이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일시에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컨설팅서비스 지원 이전에 연간 컨설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컨설팅 대상 집단(가급적 소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성이 클 것이다)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컨설팅 대상 집단별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연간계획(컨설팅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컨설팅 장소로는 동일집단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중 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별도의 장소 또는 중앙(종합청사)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가급적 1박2일 또는 2박3일간의 집중적인 컨설팅 일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번잡하거나 방해요인이 많은 장소를 피하도록 한다. 이 방안도 지역사회 진단과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도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 수행과정에서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또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시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컨설턴트를 상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공간적 한계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 이러한 방식의 컨설팅은 자칫 컨설턴트와 컨설턴간 쌍방작용이 아닌 훈련·교육 형식이 되어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 (3) 광역자치단체별로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합식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2)의 방안과 유사하나, 일시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가하므로, 그 효과성은 더욱 낮을 수 있다.
- (4)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합식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컨설팅 서비스이기보다 컨설팅에 관한 교육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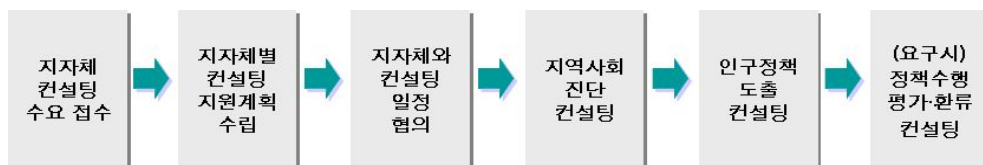
이들 방안을 도식화 하면 [그림 5-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들의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모형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참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지원단은 매뉴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등에 응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전화, e-mail,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림 5-8] 보건복지가족부의 컨설팅서비스 일방적 지원방안 수행절차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아, 연중 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컨설팅지원단에서는 동 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진단부터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도출에 대한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련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정책수행과 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5-9]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수행절차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 확산 방안들을 도식화 하면 <표 5-27>과 같다. 각 방안의 장·단점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들 방안 중 컨설팅 효과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방안들로는 중앙정부의 컨설팅·정책 동시 지원 방안, 지방정부의 컨설팅 요청에 대한 개별적 지원 방안, 중앙정부의 컨설팅 일방적·개별적 지원 방안 등의 순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표 5-27〉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확산 방안 비교

우선 순위	방안	장점	단점
1	중앙정부의 컨설팅-정책 동시 지원 방안	◦ 지역사회진단부터 평가·환류 의 전 과정에 대한 개별적 컨설팅 지원 가능	◦ 많은 예산 확보 곤란
2	지방정부의 컨설팅 지원 요청 - 개별적 지원 방안	◦ 자발적 요청 ◦ 개별적 컨설팅 ◦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정책을 연계시 더 효과적	◦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서비스 지원 가능
3	중앙정부의 컨설팅 일방 지원 - 개별적 지원 방안	◦ 개별적 컨설팅 ◦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정책을 연계시 더 효과적	◦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서비스 지원 가능
4	중앙정부의 컨설팅 일방 지원 - 소그룹별 지원 방안	◦ 특성이 유사한 지역간 경험 공유 가능	◦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서비스 지원 가능
5	중앙정부의 컨설팅 일방 지원 - 중그룹별(시도) 지원 방안	◦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서비스 지원 가능 ◦ 일방적 교육훈련 형식으로 효과성 감소
6	중앙정부의 컨설팅 일방 지원 - 대그룹(전국적) 지원 방안	◦ 시간 및 비용 절감	◦ 정책도출까지만 컨설팅서비스 지원 가능 ◦ 일방적 교육훈련 형식으로 효과성 감소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21세기에 들어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에서 지속되고 있고 총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6~2010년의 시간틀을 설정하고 있어 시행 이래 약 2년이 경과되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은 정책수립 이전부터 아주 높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별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지역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지역 차원에서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획일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각 지역의 특수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시스템의 성격을 가지면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최적적인 정책을 기획·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며, 이는 부족한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귀결되곤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

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의 자료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연구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정책담당자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산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한계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조정 및 통합 기능을 수행할 전담조직이나 인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저출산관련 업무들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자체 규모나 타 업무들과 관계를 고려할 때,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저출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정책들을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은 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셋째, 2007년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들은 다양하나, 정책 대상의 설정의 합리적이지 못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나 지역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 및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지자체의 조직체계 미흡, 인식 부족, 인력 부족, 전문성 미흡 등을 포괄하는 정책적 역량 부족의 문제와 연계된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량 부족의 원인들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에 대해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컨설팅 모형은 궁극적으로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하여 내용면에서 지역 욕구를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정책들을 모형화 하였다. 그러한 정책들로는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여 결혼률을 제고하기 위한 **Dating**서비스지원정책, 임신부 및 영유아의 이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증진지원정책,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 및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준비교육정책,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험방식의 자녀양육지원정책과 지역장학활성화정책,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역인프라로서 정보망운영정책 등이다.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모형은 컨설팅 체계구축, 컨설팅 계획수립, 지역사회 진단, 인구정책 개발, 정책 실시 및 모니터링, 정책 평가 및 환류 등 6단계로 구성한다. 실제적인 컨설팅은 지역사회진단부터 정책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과정들에 대해 실시한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와 컨설티간의 쌍방향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컨설턴트는 전문가, 조력자,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지정하되, 보다 효율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전문가(컨설턴트)로 구성되는 컨설팅지원단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이나 정책수행조직 환경을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발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밀한 진단부터 시작된다. 지역사회 진단은 인구 규모와 구조, 출산수준과 결정요인, 경제사회 환경, 인프라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환경과 주민욕구에 가장 적합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컨설팅은 분석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형을 구축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책 개발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실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와 환류는 정책의 개선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을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환류시켜 컨설팅 모형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컨설팅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컨설팅서비스와 이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실시를 위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계성이 있으므로, 컨설팅과 실제정책실행의 연계방안은 심사를 통해 적합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추진하는 연차적인 계획 하에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실시와 관련하여 요청을 하면, 컨설팅지원단이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에서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매년 일정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만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끝으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관계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다. 약 20년 이상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상황과 주민욕구에 적합한 정책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재원과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문제 치유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하는 일은 재원과 인력의 한계성을 치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설팅지원모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정책컨설팅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천동,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고령군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춘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급주체와 경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혜정,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위한 지역 역량』, 『한국정책학회보』, 제15권 제3호, pp. 73-100, 2006.
- 라휘문, 「기초자치단체 평가모형에 대한 개념적 구상」,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2호, pp. 53-73, 2004.
- 박병현, 『한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시, 군의 소지역을 중심으로』, 한일교류 발표, 2004.
- 백종만, 「한국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변화」, 『200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27-145, 2003.
- 손승영,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동덕여성연구』, 제10호, 2005.
- 송다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pp. 225-251, 2005.
- 영주시, 『2005 통계연보』, 2005.
- 『2007 통계연보』, 2007.
- 이계탁, 『복지행정학강의』, 나남출판사, 1995.
-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a.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b.
- 이삼식·신인철·김정연 외,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

- 정책 개발 촉진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순철, 『신경영기법』, 매일경제신문사, 1997.
- 이의준, 『21세기 한국의 컨설팅』, 서울: 새로운 제안, 1999.
- 이정호, 『사회복지행정론』, 동국대학교, 2001.
- 장혜경 외,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전재일·모지환, 「지역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6권 제2호, 사회복지개발연구원, 2000.
- 정재삼, 『수행공학의 이해: 기업교육 리엔지니어링의 틀』,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정재삼·이진구, 「수행공학을 적용한 컨설팅 사례」, 『기업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 93-119, 2007.
- 조봉근,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94.
- 조일현·황광용·박인정, 「e-learning 컨설팅 발전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기업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 125-149, 2003.
-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6.
- 최일섭,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사회복지』 봄호, 1988.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4.
- _____, 『사업체노동실태조사』,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수요 분석』, 1991.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지원업무와 복합민원처리업무를 중심으로』, 2004.
- 황나미 외,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지원·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Barcus III, S. W. & Wikinson, J. W., *Handbook of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2nd ed). McGraw-Hill, Inc, 1995.
- Block, P., *Flawless Consulting*, Pfeiffer, 1981.
- Cohen, P.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sult."

<http://www.hci.com.au/default%20hci.htm>(2004.7.20).

- Lasley, P., *Developing a learning organization*, London : Kogan Page, 1998.
- Lippitt, G. & Lippitt, R., *The consulting Process in Action*(2nd ed.), University Associates, Inc., 1986.
- Lucia, A. & Lepsinger, R.,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9.
- Nelson, B., & Economy, P., *Consulting for dummies*, IDG Books, 1997.
- Philips, J. J. & Philips, P. P., *In action: Building a successful consulting practice*, VA: ASTD., 2002.
- Prahalad, C. K. & G. Hamel,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0.
- Robinson, D. & Robinson, J., *Performance consulting: Moving beyond training*,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1995.
- Robinson, D. & Robinson, J., *Moving from training to performance: A practical guidebook*,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1998.
- Stahmann, R., & Salts, C., "Educating for marriage and intimate relationships", In M. E. Arcus, J. D. Schvaneveldt, & J. J. Moss(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Vol. 2, pp. 33-61), Newbury Park, CA: Sage, 1993.
- Stalk, G., P. Evans & L. E. Shulman, "Competing on capabilities: The new rules of corporate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92.

부 록

〔부록 Ⅰ〕 2007년 기초지자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2차심사표(서식)

〔부록 Ⅱ〕 2007년 기초지자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사례

〔부록 Ⅲ〕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현황

〔부록 Ⅳ〕 임신·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부록 I] 2007년 기초지자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2차심사표(서식)

심사 항목 (배점)	세부 체크리스트	점수
총 계		
□ 저출산 대응 추진체계 (20%) ○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 - 당해 지자체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시행규칙 ○ 저출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력 - 전담 조직 및 담당인력의 지정과 운용상황 ○ 저출산 관련 부서간 업무 연계·협조성 - 저출산 극복관련 내부 회의개최 실적 - 부서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및 협조체계	법제화(0~4점) : 저출산대응 추진정책 법제화	
	창의성(0~4점) : 추진체계 구축에서의 창의성	
	체계성(0~4점) : 수행 조직 체계적 구축 정도	
	연계성(0~4점) : 지자체 관련타 부서 및 업무와의 연계성	
	확산가능성(0~4점) :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의 용이성	
□ 출산및양육지원 등 인구정책 (35%)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 제시 - 예산·비예산 사업 불문 - 예산사업 경우의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체계성(0~7점) : 정책 형성 → 기획 → 집행 → 평가단계에서의 체계성	
	적합성(0~7점) : 지역 주민의 욕구에 적합성	
	창의성(0~7점) : 개발된 정책의 창의성	
	확산가능성(0~7점) : 타 지자체로 확산 용이성	
	효율성(0~7점) : 정책의 비용대비 효과성	
□ 저출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분위기 조성 (25%) ○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 민관협의체(상설/비상설), 간담회, 발표문 등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사례 - 의료기관·민간단체·자원봉사자와의 연계체계 구축,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 등 ○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사례 - 경진대회, 웹사이트전담코너 구성, 전문가특강 등	제도화(0~5점) : 지역사회 참여방법의 제도화 및 상시성	
	포괄성(0~5점) :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참여	
	창의성(0~5점) : 수행방법의 창의성	
	확산가능성(0~5점) :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의 용이성	
	효율성(0~5점) : 정책의 비용대비 효과성	
□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20%) ○ 공직내 출산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 법정 출산가족친화 제도 이행 실적 - 자체 출산가족친화제도 개발사례·활용도 ○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유도	참여성(0~4점) : 프로그램 도입에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형평성(0~4점) : 프로그램 이용자와 미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창의성(0~4점) : 운용중인 프로그램의 창의성	
	확산가능성(0~4점) :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업들로의 확산 용이성	
	효율성(0~4점) : 운용프로그램의 비용대비 효과성	
□ 가점 사항 (+ 10% 이내) ○ 기관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기관장 결재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회의 기관장 주재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기관장 기고 - 지방의회 저출산 대응 관련 결의안·건의안 ○ 우수 출산·양육지원 정책 사례 - 창의성, 효과성이 크고 파급이 용이한 사례 ○ 저출산 극복에 기여도 - 저출산 극복에 명백한 효과성 입증 ○ 기타 감안사항	심사평	

〔부록 II〕 2007년 기초지자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사례

1. Date support program

1-1.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혼남녀 만남의 장’

- 목적: 결혼 적령기 구민을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치관 변화를 도모하며, 결혼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대상: 동래구 거주 미혼(25~35세) 남녀 27쌍, 54명
- 주관 및 주최: 동래구청
- 후원: 동래구 금강웨딩홀, 고객우대권 1인당 1매 증정
- 소요예산: 3,000천원 (구비 100%)
- 내용
 - 전문 진행자 초청(결혼전문기관 등 협조), 구청 전 부서 및 유관기관, 지역업체 등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결혼의 중요성, 자기소개 및 저녁 식사, 이벤트사 팀별 게임을 통한 서로를 알기, 남성 참여자의 공개 프로포즈
 - 만남에서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예식비 할인 인센티브 제공(약 300천원)
 - 행사 종료 후 자발적으로 2차 모임을 만들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있음.
- 성과 및 평가: 결혼의 중요성 인식 고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풍토조성에 기여, 실제로 2007년 행사를 통해 3쌍의 커플 성사

1-2. 인천광역시 서구 ‘선남선녀 만남의 장’

- 목적: 유관기관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여 미혼인 신세대가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대상: 8개 기관 직원 중 미혼 남녀 60여명
- 주관 및 주최: 서화회 (인천 서구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
- 소요예산: 4,000천원 (서화회 예산)
- 내용: 레크레이션 및 화합의 장
- 성과 및 평가: 1회성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없으며, 연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없음.

2. 결혼 준비 교육

2-1. 충청북도 충주시 '결혼예비학교'

- 목적: 미혼남녀의 합리적 결혼준비와 행복한 결혼생활 유도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대상: 충주 관내 미혼 남녀 500여명
- 주관 및 운영주체: 충주시, 관내 대학(충주대학교) 위탁 운영
- 소요예산: 1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충북 충주시 '결혼예비학교' 운영 개관〉

구 분	내 용
기간 및 대상	2007년 9월 ~ 12월, 충주 관내 미혼 남녀 500명
운영방법	관내 대학(충주대학교)에 위탁
소요예산	10,000천원 (기념품 증정, 다과, 강사비 등)
수료자 혜택	· 풍진항체검사 및 풍진예방접종(풍진항체가 음성일 경우 해당) · 임신초기 풍진감염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아 예방 · 일반혈액검사(간염, 빈혈), 간 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검사(매독, 에이즈), 요검사
홍보방법	· 지방지, 일간지 등 각종 언론매체, 관내대학, 읍면동, 반상회보 활용

○ 주요내용

- 충주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5대 로드 맵인 '결혼예비학교 운영,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교실,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사랑카드 보급, Five family 홈페이지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운영기간 및 운영방법: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6주동안 12회의 집단교육 형태로 진행
-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및 실습

〈충북 충주시 '결혼예비학교'의 내용〉

운영 내용	방법	비고
<input type="checkbox"/> 사랑있습니까? - 오리엔테이션, 건전한 이성교제, 결혼의 조건	강의	전문강사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란?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부부와 가족간의 역할과 책임, 올바른 성문화 및 부부생활	강의	전문강사
<input type="checkbox"/>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 - 생명의 신비, 준비된 임신	강의 동영상	전문강사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내가 원하는 가정 상 - 나의 미래설계(출산·양육 등), 설문지 작성, 건강검진 결과, 성격검사 발표	강의 실습	전문강사

2-2. 강원도 동해시 '임신육아교실 운영'

- 목적: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육아 및 예비신혼부부의 결혼·출산 준비 지원
- 대상: 동해시 임산부, 예비신혼부부 등
- 주관 및 운영주체: 동해시, 삼척 MBC 공동주최
- 내용: 임산부 건강관리, 태교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격월 실시함.
- 성과
 - 2007년 상반기 2회 실시(320명 참석*)
 - * 1회(2007. 4. 19. 14:00, 170명), 2회(2007. 6. 21. 14:00, 150명) 참석

3. 임산부 등 편의 증진

3-1. 요일제 적용 제외 ① 대전광역시 서구 '미취학 자녀 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 목적: 미취학 자녀 동승 부모 및 임산부 편의 증진
- 대상: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부터
- 주관 및 운영주체: 대전 서구청
- 소요예산: 비예산
- 내용
 - '07. 5.월중 임산부와 유아동승차량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계획 통보
 - '07. 5월중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파악 및 대상차량 스티커 발급
 - 요일제 적용제외 스티커 미부차시 정문통제(청원경찰)
- 성과 및 평가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24명 발급)
 - 2007년 5월18일 15명, 5월22일 1명, 6월5일 2명, 6월14일 5명, 6월18일 1명 발급

3-1. 요일제 적용 제외 ② 경기도 성남시 ‘저출산 대응 차량 5부제 면제’

- 목적: 임신부 및 유아보호를 통해 출산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율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2007. 2. 12)
- 대상: 임신부 및 유아동승 차량 (공무원에 한함.)
- 주관 및 운영주체: 성남시
- 소요예산: 비예산
- 내용: 임신부 및 유아동승 차량에 한해 요일제 면제차량증명 스티커 발부
- 성과 및 평가
 - 2006년 현재 전체 성남시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1,491대이며, 이 중 승용차 요일제 면제차량은 83대로 전체 차량 중 5.57%가 혜택을 받고 있음.
 - 일반인의 경우, 사례수가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방문시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확대·적용하지 않고 있음.

3-1. 요일제 적용 제외 ③경기도 화성시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 목적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임신부 탑승차량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당면적용 제외대상으로 결정됨('06.12.18).
 - 동 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신부 및 영아탑승차량에 대해 요일제 적용을 제외하고 '07.2.12부터 시행되었음.
 - 임신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며, 특히 유아동승차량의 경우, 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음.
- 대상
 - 임신부: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부 수첩을 소지)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일반민원인 포함) 소속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함.

3-1. 요일제 적용 제외 ③ (계속)

○ 대상

- 유아동승차량: 유아의 부모가 맞벌이 또는 직장여성으로 유아를 영아원 또는 유아원에 출퇴원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국한함.
- 따라서 유아를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주관 및 운영주체: 경기도 화성시

○ 소요예산: 비예산

○ 내용

- 다만,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부착하여야만 주차단속대상에서 제외가 가능
- 일반민원인인 임산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출입하는 경우(신문 및 우유배달 등) 공공기관에서 제외증명서 발급가능
- 기관소속 임직원 및 일반 민원인이 차량에 유아를 동승하였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출입은 무조건 가능함.
- 차량에 유아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은 재원증명 제시 또는 기관 발급 제외증명서를 부착하여야만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 출입이 가능한 반면, 타공공기관 출입은 불가능함.
- 일반민원인의 경우 재원증명서로 출입도 불가능하고, 공공기관은 일반민원인을 대상으로 제외증명서 발급도 불가함.
- 각 공공기관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거지가 유아원과 근거리에 있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퇴근과 관련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일제 제외증명서” 발급을 자제하였음.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대상
(저출산·고령화대책 참여차량)**

- 적용제외기간 : 2007. 2. 1. ~ 2008. 1. 31
- 차량번호 : 대상자 ○○○

2007. 2. 8.
화성시장 (인)

3-2. 전용 주차장 설치 ① 경상북도 영주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사업’

- 목적: 임산부가 편리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상: 영주시청 및 산하 읍면동사무소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
- 주관 및 운영주체: 영주시
- 소요예산: 2,400천원(전액시비)
- 내용
 - 저출산에 대응하는 임산부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 시청산하 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추후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확대 설치
 -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입간판 설치는 각 부서에서 설치하며 사업비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
- 성과 및 평가
 - 2007. 3. 30까지 영주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 등 시청산하 기관 28개소 가운데 장소가 협소한 읍면동 4개소를 제외한 24개소에 사업소별 1면 이상 설치하였음 (24개소 26면 설치).
 - 출산에 대응하는 임산부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출산장려 시책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보
 - 임신·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시책 개발과 시민적 공감대 확보와 책임의식 확산

3-2. 전용 주차장 설치 ② 경상북도 의성군 ‘임산부 전용 주차장구역 설치’

- 목적: 임산부의 편의 증진
-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 주관 및 운영주체: 의성군
- 소요예산: 비예산
- 내용: 보건소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지정
- 성과 및 평가
 - 임산부 외에 영유아 보호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자녀양육 가정의 편의 증진 도모

3-3. 임신부 우대창구 운영 ①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및 운영’

- 목적: 임신부의 편의 증진
- 대상: 관내 임산부
- 주관 및 운영주체: 대전 서구청
- 소요예산: 비예산
- 내용
 -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 성과 및 평가
 - 2007. 1월부터 실시하였으며, 비예산으로 임신부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임산부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산부 우대 창구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4. 임신·영아양육 공무원의 당직·비상근무 제외

4-1. 대전광역시 서구 ‘임신·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 목적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대상: 임신·출산 공무원 (배우자 제외)
- 내용
 -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신확인 증명원 혹은 산모수첩(사본) 제출하면, 30-40일에 한번씩 담당하는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신부 제외
- 향후계획: 임신·출산 후 당직근무 제외, 직장 근무 시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4-2. 경기도 성남시 '임신·출산 복지 우대 실시'

- 목적: 임산부 및 유아보호를 통한 출산 분위기 확산 및 출산율 증가 기여
- 대상: 임신 근로자 혹은 배우자 임신 근로자
- 내용: 임산부(배우자) 당직 및 비상근무 등 면제

5. 직장여성 건강의 날

5-1. 경기도 성남시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

- 목적: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여성들에게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편의 제공
- 대상: 성남시 거주 임산부
- 주관 및 운영주체: 성남시 보건소
- 소요예산: 인건비(수당으로 지급)
- 내용
 -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관리(영양제 공급, 모성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운영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 현재 총 12회(374건)의 진료 실시.
 - 예진 의사 1명, 임산부·영유아 담당간호사 1명, 일시사역 간호사 1명으로 구성.

5-2. 경기도 김포시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 목적: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의 경우 토요일무 등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관련 보건의료서비스(풍진검사, 기형아검사, 기본검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월1회 토요일진료를 실시함.
- 대상: 경기도 김포시 내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
- 주관 및 운영주체: 김포시 보건소
- 소요예산: 인건비(수당으로 지급)
- 내용
 - 임산부 산전검사, 빈혈치료제 지급 등 임산부 관련 서비스
 - 2007년 1월 27일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진료 실시
 - 진료 의사 1명, 간호인력 1명으로 구성.

6. 아동건강보험

6-1. 경기도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김포시 출생 신생아의 건강·복지증진 도모, 저출산·고령사회 적극 대처
- 소중한 아기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고 가계의 의료 보장적 수혜금을 비축,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분위기 조성
- 일회성이 아닌 장기(5년~10년)지원으로 출산장려사업의 신뢰성 확보

○ 사업개요

- 지원범위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김포시 거주, 셋째아 이상 5년간, 1년 납입 1년 보장반복
- 지원금액 및 기간 : 131,165원(1인/1년) , 5년
- 지원대상 : '07. 1. 1. 이후 김포시 출생아중 3째아 이상
- 지원내용 : 상해 및 의료보장 등
-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작성: 신청인(부 또는 모)
② 접수: 읍면동 사무소
③ 익월 5일까지 송부: 읍면동 - 보건소
④ 보험계약 통보: 보건소 - 신청인
- 소요예산 : 25,830천원(시비 100%)
- 추진방법: 단체보험 형식으로 1년 단위 반복 계약. 매년 1년간 보험료를 선납하고 1년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예정보다 보장대상자가 적을 경우 그만큼의 보험료는 환불 받음. 단체보험의 경우 가입제한 조건이 없어 개인보험에 비해 유리.
- 업체와 협약 맺은 후 대상자에게 계약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 동시에 전체 대상자 명단을 업체에 송부하여 업체에서도 개별적으로 대상자에게 안내 및 관리.
- 이때 보장성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함. 부모가 추후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설계를 하도록 안내함.
-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9조, 제10조
- 0~3세 대상자와 4~5세 대상자의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계해야함. 그 이유는 연령별로 위험의 종류가 상이하여 보장의 내용도 달리해야 하기 때문임.
- * 전출입의 문제: 단체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전출입에 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예를 들어 1월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가 3월에 전출하였다면, 1년후 정산 시점에서 잔여 개월 동안의 보험료는 환불 받게 됨.

6-2. 강원도 평창군 '저출산 건강보험료 지원'

- 목적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사업량 및 추진실적 : 300명,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계획 수립 완료
- 사업내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둘째 아이부터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받고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의 보험 지원제도임.
- 추진체계
 - ① 보호자 출생신고시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
 - ② 보험료 지원대상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 ④ 군수는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후 보험기관에 통보
 - ⑤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 청구에 의거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
 - ⑥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격 상실
 - ⑦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
- 소요예산 : 108,000천원

6-3.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 사업목적: 군민의 출산장려
- 사업개요
 - 사업추진체계: 옹진군(보건소)
 - 소요예산: 총 17,000천원 (군100%)
 - 지원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보건복지부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관련 지침」
 -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계획안 작성 : 2006. 10월 18일
 -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계획 확정 : 2006. 12월 27일
- 사업내용: 보험기간 동안 관내 출생 등록 신생아의 경우 계속 관내 거주 할 경우 5세 까지 보장, 출생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 주요보장내용
 - 질병입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80%
 - 상해 의료비: 사고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
 - 암 진단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식중독 위로금, 골절진단(위로금)
 - 화상 발생 위로금, 특수 교육자금(사고로 후유장애 발생시)
 - 자녀 배상 책임 보상
- 추진실적 : 200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보험가입- 70명 (7월)

7. 공공교양교육 프로그램 다자녀우대

7-1. 부산광역시 동래구 ‘다자녀가정 자녀 참여 우대’

- 목적: 다자녀가정 자녀 참여 혜택으로 저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출산 장려에 기함
- 기간: '07. 연중
- 대상: 다자녀가정 자녀(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신청자 중)
- 내용: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접수자 중 다자녀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킴
- 실적: 어린이 한자교실·어린이 생활영어 18회, 30명 (명륜2동)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30회, 60명 (사직1동)
 청소년 뇌호흡 12회, 40명 (안락2동), 한문예절교실 18회, 40명 (명장2동)
 청소년 기초한자·중국어·생활영어교실 12회, 20명 (명장1동)

7-2. 경기도 성남시 ‘문화교실 접수시 세자녀 가정 우선접수’

- 현황
 - 교육과정: 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2월)
 - 교육과목: 문화교실(17과목), 컴퓨터교실(8과목), 독서회(4과목), 방학특강(4~6과목)
- 2007년도 추진계획
 - 세자녀 이상 가정은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시 과목당 30% 우선접수
 - 문화교실 : 한자교실 등 17과목 46명(모집인원 465명)
 - 컴퓨터교실 : 컴퓨터기초 등 8과목 56명(모집인원 560명)
- 소요예산: 비예산

7-3. 경기도 성남시 '여성문화교육 3자녀 이상 여성 수강신청 우대'

- 현황
 - 여성문화교육 수강생 : 년 3,200명
 - 현재 3자녀 이상 둔 여성이 여성문화교육 수강신청시 일반여성 과 동등하게 모집하고 있음 (수강료 : 월 1만원 납부)
 - 현 우선모집 및 수강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모자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수강료 40,000~50,000원 (4~5개월과정)
- 2008년도 추진계획
 - 3자녀 이상 여성 수강생 우선모집 및 수강료면제 혜택 부여
 - 적용시기: 2008년 제1기 여성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시부터
 - 대 상 자: 셋째자녀 이상을 둔 여성
 - 모집비율: 모집 정원대비 5%범위내 (연 160명 수혜)
 - 수강료 면제는 성남시여성문화회관 조례 개정 검토필요
- 추진체계
 - 수강료면제: 조례개정 발의 → 의회상정 → 조례개정 → 면제
 - 수강생 우선모집: 모집공고 → 수강신청 → 3자녀 이상 여부확인 → 모집
- 사업기간: 2008년 1월 ~ 계속
- 소요예산: 비예산

8. 장학재단 설립 및 연계

8-1. 경기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 목적: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학구열 고취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 추진 개요
 - 설립근거 및 형태: 민법 제32조에 의한 공익재단법인
 - 재단조직: 이사회 및 사무국
 - 총사업비: 6,000백만원
 - 재원: 시비 100%
 - 사업내용: 저소득층 자녀 및 우수하고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장학관 수탁운영등 재단설립 목적에 충실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경기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년도별 기금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06~07년	08년	09년	2010년이후
총 계	40,000	3,600	8,000	11,000	17,400
시 출연액	8,600	2,600	2,000	2,000	2,000
재단확보액	31,400	1,000	6,000	9,000	15,400

- 추진 상황
 - 2007. 04월: 제4회 이사회 개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후원회 가입 및 관리규정」 제정으로 후원회원 모집활동 근거 마련
 - 2007. 06월: 기관·단체장 및 출향인사 소식지 발송, 시 및 읍면동 주요회의 참석 홍보활동 추진, 주요 시행사 참여 재단 홍보활동 추진
 - 2007. 08월: 제5회 이사회 개최 기본재산 6억에서 18억원 재설정 의결

〈경기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기금확보 추진방안〉

구 분	시민대상 홍보	시민·사회단체 연계		후원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각종 홍보	Net-Work	프로그램 연계	우수회원 홈페이지 게시	회원대상 소식지 배부
내 용	홍보물 및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추진	각 분야별 연계 구축, 후원 회원 확보 추진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 재단홍보 추진	회원명단 및 우수 회원 홈페이지 홍보	장학사업, 지속적인 관심유발

8-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사랑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고등·대학생
- 지원인원: 80명
- 지원수준
 - 고등: 1인당 80~150만원
 - 대학생: 1인당150~300만원
 - 특기장학생: 체육기능대회 3위내 입상자(30~200만원)
- 집행액: 105,300천원
- 2001년 3월부터 계속

8-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민 장학재단 사업'

- 목적 : 특화된 교육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우수인재 양성
- 사업내용 : 명문학교 육성,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타운 조성, 축구꿈나무 지원, 일반장학금 지급, 초·중 교원 사기 진작,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 지원
-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04.21. 조례 제1947호
-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 특출한 재능이 인정된 사람에 대한 학자금, 장려금, 장학금 지원사업
- 저소득층 자녀, 아동복지시설아동, 기타 불우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 소요예산 : 2,069,000천원
- 추진실적 : 원어민 보조교사 6명/3,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U-Learning 시스템 운영 학습지원 : 초·중·고생 1,000명/2,000천원
 - 교육환경 개선사업 : 저소득 초·중·고생 600명/1,460천원
 - 영어타운 설치 : 3,500천원

8-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장학금 기금 조성'

- 일시: 연중
- 대상: 군민, 출향인사
- 내용: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향토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제공

9. 양육정보센터

9-1. 서울시 중구 ‘육아 코디네이터(Coordinator)사업’

- 배경: 소자녀, 핵가족시대에 자녀 양육에 대한 통합된 정보와 효과적인 대응기술 제공으로 육아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추진기간: 2007년 1월~12월
- 추진목적: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대응기술 제공으로 육아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
- 추진대상: 지역주민
- 추진내용
 - 육아 상담실 운영: 내소 또는 방문상담
 - 정보제공A: 우편, SMS, ACS, E-mail, 전화, 등
 - 정보제공B: 홈페이지, 중구광장, 지역신문, 지역방송, 정보지 등

〈서울시 중구청 보육관련 정보제공 내용〉

구 분	내 용
보육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세부추진사항
저출산지원사업	추진방향, 사업별세부추진사항, 소요예산, 관련조례, 출산양육지원금
보육시설	시설명칭, 소재지, 시설별 정원, 연락처

출처: 서울시 중구 홈페이지 참조, <http://woman.junggu.seoul.kr/e/e04/e04010100.php>

9-2. 충청북도 충주시 '5 Family 홈페이지 운영'

- 운영내용
 - 2007. 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 제공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정보 제공
 - 보건소 출산장려 지원프로그램 전자책 제공
 - 함께 나누기 마당을 통한 개인정보 공유 공간 제공 등
- 운영사이트
 - 충주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cj100.net>)
 - 행복한 5인 가족 만들기(<http://happy.cj100.net>)
- 운영실적: 357명/12,781건

[충주시 보건소의 '행복한 5 Family' 홈페이지]



출처: <http://happy.cj100.net/>

〔부록 III〕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현황

〈부표 III-1〉 기초자치단체 출산·양육지원금 등 지급 현황

지역	출산장려금품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교육비지원
서울 중구	둘째이상	셋째이상	셋째이상	
대구 달서	셋째이상			
대구 남구	셋째이상		셋째이상	
인천 옹진	모든출생아		모든출생아	
광주 동구	모든출생아			
광주 남구	쌍둥이			
울산 북구	셋째이상			
강원 동해	둘째이상			
강원 양양	모든출생아			
경기 성남			셋째이상	
경기 김포	셋째이상		셋째이상	셋째이상
경기 화성	둘째이상		셋째이상	셋째이상
경기남양주	둘째이상		셋째이상	
충북 충주	모든출생아	셋째이상-만5세		
충북 청주	모든출생아		셋째이상	
충북 단양	모든출생아	셋째이상-만5세		
충남 청양	모든출생아			
충남 당진	모든출생아			
충남 서천	모든출생아			
전북 순창	모든출생아	모든출생아		
전북 정읍	둘째이상	저소득층		
전북 완주	셋째이상	셋째이상		
전남 목포	모든출생아			
전남 함평	모든출생아			
전남 강진	모든출생아	셋째이상		
전남 화순	셋째이상			
경북 경주	둘째이상	셋째이상-만3세		
경북 영주	모든출생아			
경북 성주	모든출생아			
경북 의성	모든출생아	셋째이상-만5세	저소득층	
경남 김해	둘째이상		셋째이상	
경남 밀양	둘째이상	둘째이상-만4세		
경남 함안	셋째이상			
제주	셋째이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제2차 심사자료) 분석.

〈부표 III-2〉 지방자치단체 수당 지급 실태

지역	출산장려금품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서울 중구	둘째아 이상	둘째-2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넷째-300만원(1회)	셋째이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 지 않는 아동	10만원 (72개월동안 매월)	셋째아 이상, 만3세미만인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정부 지원금을 제 외하고 보육 료 50%지원	-	-
대구 달서	셋째아 이상	30만원(1회)	-	-	-	-	-	-
대구 남구	셋째아 이상	30만원(1회)	-	-	셋째아 이상, 만1세~만2세 까지 보육시 설이용아동	20만원 (매월)	-	-
인천 옹진	모든 출생아	첫째-50만원(1회) 둘째-100만원(1회)	-	-	모든 출생아	보육시설수 납 보 육 료 100%	-	-
광주 동구	모든 출생아	첫째-5만원 상품권 둘째-5만원 상품권 셋째-50만원(1회)	-	-	-	-	-	-
광주 남구	쌍둥이	쌍생아-50만원(1회) 삼생아-100만원(1회)	-	-	-	-	-	-
울산 북구	셋째아 이상	10만원(1회)	-	-	-	-	-	-
경기 성남	-	-	-	-	0~만5세,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아동	국공립 보 육료 수납 액의 70%	-	-
경기 김포*	여성 장애인출 산자녀 셋째아 이상	100만원(1회) 100만원(1회)	-	-	25개월~만 5 세, 셋째아 이상, 보육시 설 이용아동	만1세19천원 만2세131천원 만3세90천원 만45세81천원	취학전 만5 세까지, 셋째아 이 상, 유치원 이용아동	법정 유치원 수업료의 50% ⇒12,400원~ 81,000천원/월
경기 화성	둘째아 이상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	-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이 용아동	1인, 최고 10만원	셋째아 이상, 유치원 이 용아동	1인, 최고 10만원
경기 남양 주	둘째아 이상	둘째-30만원 셋째-100만원	-	-	모든 보육시 설이용아동	입소료 3만 원(년 1회)	모든 유치 원이용아동	입학금 3만 원(년 1회)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이 용아동	연령별 보육 료기준단가 의 20~30% 지원	-	-

〈부표 III-2〉 (계속)

지역	출산장려금품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강원 동해	둘째아 이상	둘째-35만원(1회) 셋째-75만원(1회)	-	-	-	-
강원 양양	모든 출생아	첫째-10만원(1회) 둘째-10만원(12개월) 셋째-10만원(36개월)	-	-	-	-
충북 충주	임신부 모든 출생아	10만원(1회) 첫째-30만원(1회) 둘째-10만원(1년간 매월) 셋째-15만원(1년간 매월) 다태이는 각 100만원(1회) (첫째, 둘째 다태아일 경우 중복 가능)	-	-	-	-
충북 청주	모든 출생아	첫째-3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0세~만5세까지	15만원(매월)	-	-
충북 단양	임신부	단양사랑상품권 20만원	-	-	셋째아이상, 0세~만5세 까지	소득층 위 별 정부지원단가 가정에 지급
충남 청양	모든 출생아	첫째-3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0세~만5세 이동	10만원(매월)	-	-
충남 당진	모든 출생아	첫째-20만원(1회) 둘째-3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	-	-	-
충남 서천	모든 출생아	첫째-30만원(1회) 둘째-30만원(1회) 셋째-80만원(1회), 20만원 상품권	-	-	-	-
전북 순창*	모든 출생아	첫째-80만원(1회) 둘째-80만원(1회) 셋째이상-330만원(1회)	모든 출생아	첫째5만원(1년간 매월) 둘째5만원(1년간 매월) 셋째5만원(3년간 매월)	-	-
전북 정읍	둘째아 이상	둘째-20만원(1회) 셋째이상-30만원(1회)	저소득층	3세이하-5만원(매월) 4세~6세미만-25천원 (매월)	-	-
전북 완주	셋째아 이상	10만원 상당 용품 30만원(1회)	셋째아 이상	10만원 (9개월간 매월지급)	-	-

〈부표 Ⅲ-2〉 (계속)

지역	출산장려금품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전남 목포	모든 출생아	첫째-1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	-	-	-
전남 함평	모든 출생아	첫째-5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다음해부터 10년간 매년 100만원 적립, (1,000만원적금통장)	-	-	-	-
전남 강진	임신부 모든 출생아	20만원(출산준비금) 첫째-120만원(년간) 둘째-240만원(년간) 셋째-420만원(년간)	셋째아 이상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 각 100만원 양육지원금	-	-
전남 화순	셋째아 이상	셋째-50만원(1회) 넷째-100만원(1회)	-	-	-	-
경북 경주	둘째아 이상	둘째-10만원(1년간 매월) 셋째-20만원(1년간 매월)	-	-	-	-
경북 영주	모든 출생아	첫째-50만원(1회) 둘째-50만원(1회) 셋째-50만원(1회)	셋째아 이상	10만원 (3년간 매월)	-	-
경북 성주	임산부 모든 출생아	임산부-10만원(1회) 첫째-10만원(1회) 둘째-20만원(1회) 셋째-100만원(1회)	-	-	-	-
경북 의성	모든 출생아	첫째-100만원(2회분할지급) 둘째-100만원(2회분할지급) 셋째-150만원(2회분할지급)	-	-	-	-
경남 김해	-	-	셋째아 이상, 만5세까지	10만원(매월)	저소득층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경남 밀양	둘째아 이상	둘째-20만원 셋째-100만원	-	-	만4세 셋째이후 아동 64명	보육료 전액지원
경남 함안	둘째아 이상	둘째-50만원(1회) 셋째-520만원(5회)	둘째아 이상, 만4세까지	7만원(매월)	-	-
제주	셋째아 이상	셋째-50만원(1회) 넷째-100만원(1회)	-	-	-	-

〔부록 IV〕 임신·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부표 IV-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주요내용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서울]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②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 50만을,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 지원	1.신청서 1부 2.예금통장사본 3.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4.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중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①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②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됨. ③다만, ①,②항 모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여섯째 700만원 일곱째 1,000만원 여덟째 1,500만원 아홉째 2,000만원 열 번째 이상 3,000만원	• 신생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 다만, 제4조 제2항의 대상자는 중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구비서류는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양천구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①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 ②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는 10만원, 셋째아이 30만원, 넷째아이 5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별로 지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신청인 예금통장 사본)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기간 동안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셋째아이는 30만원이하,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이하 지원하며, 쌍생아인 경우 개별 지원	제4의 규정에 의한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관악구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①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부/모 ②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로 한다)	둘째아이는 10만원을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이상 일 경우는 출생아별로 지원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신청인 예금통장 사본)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 에 관한 조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인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일 경우는 출생아수별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동대문구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①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②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생자녀 수별로 각각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아의 출생신고 여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여부
[부산] 중구 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대상자의 둘째 또는 셋째아이 이상)	둘째아이 60만원 지급 셋째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금액은 신청월과 신청 후 6개월 되는 달에 1/2씩 지급)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구관리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인천] 중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조례	①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②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직업으로 인한 경우부모 중 1인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도 보호자는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을 지원 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는 1.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 금 지급 조례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②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①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 50을 가산 지급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등급 1-3급 : 100만원이내 나. 장애등급 4-5급 : 70만원이내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등급 1-2급 : 70만원이내 나. 장애등급 3-4급 : 30만원이내 ②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 지급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사람당 100만원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첫째 이후 쌍둥이일 때에는 제2조제4호에 불구하고 1사람만 100만원을 지급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하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금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강화군 인구증대 시책지원 조례 시행규칙	주민등록이 강화로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자(쌍태아일 경우 태아별로 지급) • 장려금 및 양육비에 대한 적용은 2006.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양육비 지급 대상자 전출할 경우 전출하는 달의 양육비는 일할계산 지급 • 출생 후 익월부터 양육비 지급	• 첫째, 둘째 아이 • 출산 장려금 1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5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5년간 매월 10만원	• 출생 신고시 출생 장려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셋째 아이 이상 출생신고시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웅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1.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군에 출생등록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둔 신생아 또는 영유아) 2.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출생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영유아로 보호자 중 1명이 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① 보육료의 지급액은 매년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액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다른 법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에서 지원 받는 보육료가 제1항에서 정한 보육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 1.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첫째 50만원, 둘째 이후 자녀부터 10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 2.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1년 15만원 범위 내에서 만 5세까지 보장한다. 3. 영유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 보호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짐.	• 보육료는 지원대상 영유아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신청 • 보육료의 지급은 매월 25일 보육시설에 지급 •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및 관내 거주 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증명 민원대조 확인 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달 5일까지 웅진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장려금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③입금 및 보험가입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배서증권 및 약관은 신청인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영유아 건강보험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가입 지원 조치
[광주] 동구 인구증가 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구증가 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	출산장려시책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가 없을 경우에는 모, 모가 없을 경우에는 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둘째아 : 5만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 셋째아 이상 : 출산장려금 5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및 처리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동장은 관련공부(호적, 주민등록 등) 및 현지 확인으로 기재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신청서 송부 • 보건소장은 매월 15일까지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구증가시책지원 관리대장(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은 5만원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셋째자녀 이상의 신생아의 가정으로 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원	출산축하금지원신청서 출생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
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남구 (이하"남구"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2007년 1월 1일 이후 세번째 출생아부터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친권자)가 한다. 2.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지원에 관한 조례			<p>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 동장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4.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 후 대상자에 통보</p>
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	<p>①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원</p> <p>②제1항의 경우 첫째, 둘째자녀는 생존하여 있고 주민등록은 관내에 등재</p>	<p>①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매월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받은 후 보험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다.</p> <p>②신생아 건강보험은 광산구와 보험기관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신생아)의 부모(친권자)로 한다.</p>	<p>1.동장은 셋째이상 자녀 출생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관계대장에 정리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셋째이상 출생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관리팀장에게 보고</p> <p>2.보건관리팀장은 셋째이상 자녀 출생현황을 보고 받았을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보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보험기관에서 보험료가 청구되었을 경우 사실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납부</p> <p>3.보건관리팀장은 보험료 납부 즉시 해당동장에게 그 결과통보, 통보받은 동장은 신</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생아의 보험보장내역과 보험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신청방법 등 부모에 알림.
[대전] 본청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조례	①출산장려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대리인에게 지원 ②양육지원금은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24월까지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출산장려지원금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고, 양육지원금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50을, 자치구가 100분의 50을 부담	신청인이 주소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청
[경기] 수원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①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이내로 지급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 신청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	셋째자녀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지원	• 구청장,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신청 • 신청서 1부. •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부천시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 이전부터	셋째아 이상에게 각각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쌍둥이 이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생아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을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
광명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호적법상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광명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 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영아의 출생신고지를 광명시 로 함.	셋째 아이 500,000원, 넷째 아 이 이상 1,000,000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인 경 우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사 본 1부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①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 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 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 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 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 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 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이 내로 지급	•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 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 산지원금을 지급
평택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 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 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 인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경우 2. 영아의 출생 후 제1호의 사 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	• 둘째 30만원 •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 로 지원	①신청인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 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 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 는 보호자가 신청인 ②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장 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 인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신 청서와 구비서류(신청서 1 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 고 제출(제3조 제2항의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3.영아의 부 또는 모가 보직이동의 특수성이 있는 군인가족인 경우		호(제)적등본(본적이 다른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나.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③신생아의 출생 신고 후 6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동두천시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	①영아의 출생일전 3월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영아 부모의 이혼 또는 직장 관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1인만 영아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영아의 출생 후 함께 제1호의 사유로 보호자가 영아와 함께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둘째 50만원 이하, 셋째 이상 1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 영아별 각각 지원	①신청인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 ②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후 6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직증명서 또는 입증서류 1부(부 또는 모가 영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2.예금통장 사본 1부
안산시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장려금 지원대상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자 • 영유아 양육비지원대상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 단, 시	• 출산장려금 셋째자녀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 영유아 양육비 1인당 월 5만원 이하	• 출산장려금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영유아 양육비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달부터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의 그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과천시 출산 장려금 지 원 에 관한 조례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공부확인가능) 3.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오산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 례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함.	• 셋째 50만원 • 넷째 이상 1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 영아별로 지원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군포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①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 ②신생아의 부모가 군포시에 6개월 이하 거주자인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둘째 500,000원 • 셋째 이상 1,000,000원	• 신생아 출생신고후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이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한다. *신청서1부 *예금통장1부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50만원 • 쌍생아 이상 경우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 	①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경우 축하금 수령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셋째이후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1개월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셋째이후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대상(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관리 ③신청기간은 생후 3개월 이내
파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셋째영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	1.신청서 1부 2.주민등록등본(셋째이상 영아에 한함) •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금 지급 조례	①신생아를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으로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 1.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신생아를 출생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셋째이후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주민	• 셋째이후자녀1인당 100만원 • 쌍태아 이상 경우 태아별로 지급	•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조례	등록법」이나 「호적법」 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는 최초 신청 시 1인당 50만원을 보건소에서 지급 • 사회복지과에서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추가 지원 *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사본 1부 <p>*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p>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이상 100만원 • 쌍생아 이상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비의 지원대상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군 관내거주자로서(부모 중 1인 이상)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 기간은 출생일(만0세)부터 만2세까지 지원 2. 건강보험료 지원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비의 지원액 출산 축하금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매월 5만원씩 24개월 동안 지원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매월 1인당 2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 <p>*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제출 2.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	
가평군 자녀출산 입양축하금 지급 조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 가정 셋째 이후 자녀 출산 및 입양을 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출산부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 • 다만, 첫째이후 쌍둥이일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 	읍·면장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축하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보내야 함.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출산 또는 육아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출산일 현재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또는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둘 또는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출산 지원금은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부터 출산할 때에 100만원을 지급 ②육아지원금은 셋째 자녀를 출산한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제3조에 따른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어 신청인이 출산 및 육아지원금의 지급 신청 •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출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
[강원]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 ②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자녀는 100만원 •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원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아를 입양한 사람은 영아의 첫돌이 도래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만,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①출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 ②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자 범위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대상.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 2.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둘째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①출산일 현재 원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②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급	1. 첫째아 : 10만원 2. 둘째아 : 30만원 3. 셋째아 이상 : 50만원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 태아수별·출생 순위별로 지원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을 신청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연도 둘째아 2007 35만원 2008 40만원 2009 45만원 2010이후 50만원 연도별 셋째아 이상 2007 75만원 2008 80만원 2009 85만원 2010이후 90만원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태백시	①출산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순	1. 출산양육비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출산 양육비 지원조례	<p>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p> <p>②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지원</p> <p>③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 하였을 경우 지원. 단, 입양아는 시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이어야 한다.</p> <p>④셋째이상 신생아·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지원하며 출생일기준 잔여 개월수만큼 지원</p> <p>⑤부·모 모두 사망한 셋째이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이 주소를 같이 하면 지원</p>	<p>위로 각각 지원하되,</p> <p>- 첫째는 1회 10만원</p> <p>- 둘째는 1회 50만원</p> <p>- 셋째이상의 경우는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p> <p>* 단 출생순위는 주민등록 등재순</p>	<p>하되 공부담당공무원의 확인·서명후 제출)</p> <p>2.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p>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p>①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의 임신부</p> <p>②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p> <p>③출산준비금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p> <p>*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p>	<p>1. 건강검진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를 포함하여서도 1회만 지원</p> <p>2.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하되,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순위는 주민등록 등재순</p> <p>3. 출산준비금은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하며, 쌍태아 또는 쌍생아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p>	<p>•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p> <p>1.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p> <p>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p> <p>3. 예금통장 사본 1부</p> <p>•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다만 제3조제4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 신청</p> <p>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p> <p>2. 예금통장 사본 1부</p> <p>• 출산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p> <p>1. 출산준비금 지원신청서 1부</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홍천군 출생아 안전 보험료 지원 조례	①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둘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	1인당 월 2만 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조기출산시 미숙아 출생 보고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부모 또는 보호자는 셋째 자녀가 출생한 6월 이내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영월군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①영아의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모가 6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입양은 타시군구에서 입양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	①영아 1인당 장려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 ②군수는 출산·입양장려를 위하여 출생(입양)순위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다 만,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현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은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 100, 넷째아 이상 300만원	1.신청서 1부 2.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3.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는 출산·입양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①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둘째 아이부터로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순차별 지원 ②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 2.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보험료 지원신청서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③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짐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①「호적법」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보호자가 철원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 후, 둘째 이상 신생아가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도 지원대상	• 둘째 영아는 30만원, • 셋째 영아 이상 50만 •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영아”라 함은 출생후 1년 미만의 자	1. 신청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사본 1부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①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 ②출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③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둘째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인제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①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①영아 1인당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②군수는 셋째이후 자녀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원액을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직업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 예금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현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은 - 첫째, 둘째: 500,000원 - 셋째: 1,000,000원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조례,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①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3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후 100일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로 지급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은 다음과 같음. •출산 자녀별 차등지급 - 첫째아 : 20만원(일시지급) - 둘째아: 50만원(2개월 분할 지급) - 셋째아(이상) : 100만원(4개월 분할지급) ※ 출생아 부모 계좌 입금 (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양양군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	①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1.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 지급 2. 첫째아이 : 1회 10만원 3. 둘째아이 : 1년간 월 10만원 4. 셋째아이 이상 : 3년간 월 10만원 *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수별로 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호·제적등본 - 직업으로 인한 경우 재직 증명 등 입증서류 구비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후 또는 출산후 6월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충북]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①출산장려지원금 1.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2. 신생아가 출생후 2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1년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상주소를 둔 부모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②양육지원금은 청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모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출산장려지원금 ①1자녀의 경우 30만원, 2자녀의 경우 50만원, 3자녀이상의 경우는 100만원 일시금 ②양육지원금은 월15만원씩 지급	신청인 또는 신생아 명의로 개설된 개별통장에 계좌이체 •출산장려지원금 - 신청인이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 •양육지원금 1. 출산월 및 전입월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최초지급시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같이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만 5세까지 지원		3. 양육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시(충청북도 거주 포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1인당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12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80만원 • 출산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아이부터 신생아 1인당 30만원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청원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	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	출생신고 접수 시 별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제출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①출생아와 부모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출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출생 후 부모 모두가 사망했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당 월 2만원 이하, 5년간	출생아의 출생신고 후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보건소장에게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공주시	부부 중 1인이 3월 이상(출산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1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조례	<p>일 기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생하여 신고한 자 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p> <p>②미혼부·미혼모로부터의 출생 또는 신생아의 출생전 부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신생아와 함께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 제1호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3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신설 2006. 5. 11)</p>	<p>인당 50만원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1인당 80만원 이내에서 지급(자녀 1인당 1회에 한함)</p>	<p>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공주시 홈페이지와 공주시보에 공고</p>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p>①주민등록 출생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써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p> <p>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영아의 부모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으로써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p> <p>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p>	<p>• 둘째 50만원 이내 • 셋째 80만원 이내 •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p>	<p>• 영아의 출생신고 후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3.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보령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주기간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아산시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아산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여도 됨.	①영아 1인당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②출생한 영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조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아·둘째아는 1개월 이상, 셋째아 이상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셋째아 이상 중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는 30만원 이내로 지원	• 1인당 첫째아·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아·둘째아는 1개월 이상, 셋째아 이상은 6개월 이상 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셋째아 이상 중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는 30만원 이내로 지원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등록하는 가정 ②부모가 모두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 갖추어야 함.	①첫째, 둘째인 경우 3십만원, 셋째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②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 ③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호주의 호적등본으로 확인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①신생아가 출생한 가정으로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후 신생아가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됨.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됨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	①신생아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 현재 출산장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	• 출생신고 후 신청서 접수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p>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p>		
금산군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p>①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산군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부모 또는 모</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군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자녀 30만원 • 둘째자녀 50만원 •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 <p>다만, 출생한 영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영아별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연기군 출산 장려금 지급조례	<p>①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2.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연기군에 전입하는 경우 3. 혼인으로 연기군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가 연기군에 거주하여야 하며 제1항의 거주기간을 부와 모 중 한쪽만 갖추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아 신생아 1인당 500,000원 • 셋째아부터는 1,000,000원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하고 첫째아 이후 쌍태아 출산 시에는 출생순서대로 적용 	<p>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신청인에게 신생아용품 또는 상품권을 전수</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4. 타 시군에서 연기군으로 전입신고 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와 모가 연기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자가 됨.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은 둘째아이부터 지급	둘째아이는 500,000원, 셋째아이부터는 1,000,000원	
서천군 출산 수당 등 지원에 관한조례	<p>①영아가 출생한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군관내로 전입 후 영아가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p> <p>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2. 영아 출생 후 제1호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①영아 1인당 출산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p> <p>②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 지원</p>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돌아진 상품권(20만원 상당)에 상응한 출산수당을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청양군	①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쌍태아 이상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읍, 면장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조례	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②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직업 상 등의 이유로 다른 보호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	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 •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지원 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 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 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홍성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1인당 첫째는 300,000원, 둘째 부터는 500,000원	• 신생아의 출생일로 부터 100일 내에 지급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 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자.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미혼모, 직업 등 그 밖의 불가피한사유로 부 모가 동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지원	• 첫째 300,000원 • 둘째 500,000원 • 셋째 이상 3,000,000원 * 다만, 셋째아이 이상부터 는1년에 1,000,000원씩 3 회 지급하되 신생아 부모 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 이 타 시·군으로 전출시 에는 지급을 중지	• 신생아의 부모는 출생신고 시 출생신고서와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신생아 육 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 •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당진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조례	• 둘째 이상의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을 기준으 로 신생아 부모가 3월이상 계속하여 당진군에 주민등 록을 두고 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당진군으로 되 어 있어야 함.	• 신생아 1인당 300,000원	•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생 신고시 출생신고서와 신생아 육아용품구입비 지원신청서 제출 • 분기별로 지급하되 다음 분기 10일까지 지급. 단,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또는 신생아의 부모가 전 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전북] 익산시 자녀출산 장려금	①시 관내에서 둘째 영아이상 을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 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 속하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 어난 영아별로 지원	•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지급조례	<p>고 있는 가정</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시관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하고 신청할 시 이를 확인하고 현재 1년이상 계속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p> <p>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 됨.</p> <p>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2. 영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④200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아로 함.</p>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p>①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진안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p> <p>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p> <p>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p> <p>2. 신생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p>	<p>• 첫째, 둘째 신생아 출생한 월로부터 12개월간 120만원</p> <p>•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출생한 월로부터 36개월간 360만원</p>	<p>• 출생아 예금통장에 입금</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p>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p> <p>③첫째 출산아 이상 쌍생아일 경우 태어난 신생아 별로 지원 한다.</p> <p>④2007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함.</p>		
<p>장수군</p> <p>자녀출산 장려금 지급조례</p>	<p>①장수군 관내에서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p> <p>②다음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됨.</p> <p>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p>	<p>• 첫째,둘째 신생아 출생시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p> <p>•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출생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p> <p>• 쌍생아일 경우 태어난 신생아 별로 지원</p>	<p>• 출생아의 예금통장에 입금</p>
<p>부안군</p> <p>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p>	<p>①셋째이상 영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군 관내로 전입 후 영아를 출생·입양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 가정이 됨.</p> <p>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됨.</p> <p>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p>	<p>•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p>	<p>•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신청인은 부 또는 모)</p> <p>• 장려금 분할 지원</p> <p>* 분할 지원은 출생 후 신청 시 30퍼센트, 6개월 30퍼센트, 12개월 40퍼센트 지원</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p>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경우</p> <p>2. 영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전남] 목포시</p> <p>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임산부</p>	<p>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임산부의료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표준산전관리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기준금액 이내에서 해당항목의 합계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음파검사 5회(100,000원) 2. 산전기본진료비 11회(77,000원) 3. 풍진검사 1회(19,000원) 4. 기형아검사 1회(71,040원) 5. 기타검사(혈액, 매독, 임신성당뇨등 12종) 2회(43,540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거주 일을 기준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내 병·의원에서 진료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전입으로 인하여 그 사유가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전입신고일 이후의 진료분에 대한 의료비부터 적용</p>	<p>의료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및 의료비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p>
<p>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조례</p>	<p>• 신청인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입양하여 주소지에 주민등록신고 등을 하는 가정</p> <p>* 신청인 신생아를 출산하였거나 신생아를 입양하는 가정 중 최초</p>	<p>• 첫째 10만원</p> <p>• 둘째 50만원</p> <p>• 셋째 100만원</p> <p>• 넷째 150만원</p> <p>• 다섯째 이상 200만원</p>	<p>• 신청인 계좌 지급</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주민등록 신고를 시에 한 보호자(부 또는 모)	• 쌍태아 이상이 동시에 태어날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여주시 신생아 출산·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p>①시 관내에서 셋째 영아이가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한 후 셋째 영아이가 출생한 가정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p> <p>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됨.</p> <p>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영아가 부모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2. 영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와 제1항 또는 제2항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 셋째 영아이는 300만원</p> <p>• 쌍둥이이상인 경우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p>	•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신청인:영아의 부 또는 모)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지원금	1. 시 관내에 출생시점 이전으로부터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인당 150만원	•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자원 조례	<p>2. 타 시·군에서 임신한 후 우리시로 전입하여 3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p> <p>3. 3자녀이상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3자녀이상 자녀의 부모중 1인과 함께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또는 부와 모가 모두 양육하지 못할 경우 3자녀이상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친인척 등 보호자</p>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장려금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셋째 이후 출산 가정 •어린이집 교육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인 아동과 학구 문제로 타 지역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자로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3년 이내)로 하되,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장려금 1인당 200만원 이하로 하고, 쌍태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급 •어린이집 교육비 1인당 매월 5만 원 이하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장려금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신청인: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및 자녀의 보호자(부 또는 모)) •어린이집 교육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신청인: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및 자녀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시책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보육장려지원대상 지원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 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및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와 자녀3명이상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부 또는 모(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등)와 자녀 3명 이상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부모가 없을 경우)와 자녀3명 이상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p>⑤ 임신부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70만원으로 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곡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 ②곡성군내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 순위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아부터 해당 둘째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30만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 1인당 1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 순위별로 각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등을 제출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신생아와 함께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구례군	1.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①양육비 지원액은 첫째아, 둘째아는 50만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출산 전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2.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타 지역에서 3세미만 자녀를 입양한 경우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로 각각 지원. ②양육비 지원방법은 첫째아, 둘째아는 출생신고 후 첫 회 30만원 지원 후 매월 10만원씩 2개월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은 출생신고 후 첫 회 30만원 지원 후 매월 10만원씩 27개월을 지원하고 출산순위는 주민등록 등재 순.	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 •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 1년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는 전라남도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항에 의하여 규정된 양육비 지원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둘째아는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48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급에는 계속해서 고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둘째아는 출생일로부터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셋째아 이상은 출생일로부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아별로 지원 • 입양아는 최초 입양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제2항 내지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신청인: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보성군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 • 첫째아 매월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신청인: 신생아와 함께 주민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을 두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 ②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산양육비를 지급 ③6개월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외지에서 입양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아 매월 30만원 • 셋째아 이상은 매월 50만원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로 각각 지원 • 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 	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만 5세까지 영유아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군내에 신청인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영유아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에 한한다. 단, 군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셋째이후 영아 출산시 출산 영아는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봄. •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화순군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매년 15만원으로 한다.(도서구입비 1인당 10만원과예능교구비 1인당 5만원) •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지원대상자:영유아만5세) ①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②영유아보육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육료는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제1항의 지원 금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지원 ③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④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 •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30만원 2. 셋째아는 20만원·넷째아 이후는 30만원씩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 동안 매월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신청인 입금 계좌 •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시설장에게 지급 •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 신청인 입금계좌 • 보험료납부는 보험회사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②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일정금액을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 ②장흥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 지원. ③1년이상 장흥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이상은 400만원 • 둘째아는 지급시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장흥군내에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액의 50퍼센트씩 2회(출생일로부터 6,12개월)로 나누어 지원 • 셋째아이상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장흥군내에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액의 25퍼센트씩 4회(출생일로부터 매 6개월 마다)로 나누어 지원 • 쌍태아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아별로 지원 • 입양아는 최초입양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상 둘째아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둘째아이상은 출생일로부터 지급기준일 매 6개월 마다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이상 계속 강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②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 지원 ③3개월이상 계속 강진군내에	①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로 각각 지원하되, 첫째아는 매월 10만원씩, 둘째아는 매월 20만원씩, 셋째아이상은 매월 35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출산순위는 주민등록 등재순 ②제1항에 의한 셋째아 이상의	• 양육비지원신청 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양육비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시 또는 입양신고시 읍·면장에게 신청서 제출 • 출산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10개월 또는 조기분만시 보건소장에게 신청서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 다만, 입양아는 강진군 외지역에서 입양한자 ④3개월전부터 계속 강진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중 10개월 또는 조기분만시에 출산준비금을 1회 지원하며 쌍태아 이상은 자녀수에 따라 지원	경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둘때 추가 양육비 300만원을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18개월,24개월,30개월에 각 100만원을 지원 ③출산준비금 20만원을 임신 10개월째 또는 조기분만시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제출 * 양육비지원출산일 기준 1년간 지원 - 출산준비금 지원신청서 1부 - 의료기관 임신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 조기출산시 미숙아 출생 보고서 1부 • 신청인예금통장입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 양육비의 지원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 다만, 그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①양육비의 재원은 지방비 ②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군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첫 번째 자녀 50만원, 두 번째 자녀 100만원, 세 번째 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으로 하고, 쌍태아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③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 기념품 등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금통장 사본 1부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제출 •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지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다만, 그 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양육비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출생 후 1회에 한하여, 첫 번째 출산자녀 50만원, 두 번째 출산자녀 100만원, 세 번째 출산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한다(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 양육비의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조례 지원대상 범위에 적합하고 함평군 관내에	• 양육비의 지원액 1인당 3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	• 신생아 양육비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 • 신생아 건강보험료 1.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신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타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함평군에 생후 12개월 이내에 전입하였을 경우 지원	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셋째아부터는 출생시 100만원을 선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10년간 적금식 통장으로 지원. 단,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중 타지역으로 전출시 적금식 통장에 지원된 양육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매월 1인당 4만원 범위안에서 최고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종류를 선정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	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에 의거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 지급 2. 보험기관에서는 10년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조례	①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 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및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는 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1. 첫째·둘째아일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40만원을,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순위에 따라 지원 2. 건강보험료는 1인당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	• 신생아 양육비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 • 건강보험료 -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지원 조치하며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청구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
완도군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조례	• 군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만5세까지)	①지원대상 영유아 1인당 월 150,000원 ②영유아보육법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 한도액 범위안에서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액에 해당된 금액을 지원	• 영유아 보육 시설장에게 지급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③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함.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조례	1. 양육비 지원 대상 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기준에 적합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 나. 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입양한 자도 양육비, 출산장려금,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는 진도군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진도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주민등록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안에서 지원 하며 10년간 보장 •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액 - 양육비 지원액은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 기준에 적합하면 1인당 3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진도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주민등록상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인 경우에 1인당 70만원	• 보험기관 • 신청인 통장입금
신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신생아 부모가 신안군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신안군에 등재한 자	• 지원내용 1. 전입세대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및 만1세 미만 영아에 대한 미래보장형보험료 지원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3.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	
[경북] 경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	①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경주시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이상 출산한 가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장려	1. 둘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2.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3. 출산용품은 둘째(이상) 자녀인 경우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1회 지원	• 영아 부모 또는 양육보호자의 금융계좌로 일괄 지급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p>금을 지급</p> <p>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여 양육하는 경우</p> <p>2.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p> <p>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p>		
<p>김천시</p> <p>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p>	<p>①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 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p> <p>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p> <p>2.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p> <p>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다른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p>	<p>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만원 아기 돌때 20만원 지원</p> <p>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70만원 아기 돌때 80만원 지원</p> <p>3. 신생아가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50만원 아기 돌 때 150만원 지원</p>	<p>•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일괄 계좌입금</p>
<p>안동시</p> <p>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p>	<p>①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p> <p>②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원</p> <p>③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안동시에 전입을 한 24개월 이하의 영아도 전입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p>	<p>1. 양육비지원대상 신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6만원씩 지원</p> <p>2. 양육비지원대상 신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원</p> <p>3. 양육비지원대상 신생아가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지원</p> <p>* 지원기간:출생일(입양일)기준으로 2년</p>	<p>• 양육비 매월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 입금</p>
영주시	①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①신생아 1인당 출산 장려금	• 신생아 부모 또는 양육보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중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②신생아 출생 후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가정	은 출산 가정에 각 50만원 ②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정액 지급	호자의 금융계좌로 신생아가정에 50만원 일괄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 정액을 3년간 지급
영천시 출산·양 육 지원금 지급조례	①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 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신부가 출산한 신생아 ②영천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③지원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순위를 정하여 태아별로 각각 지원	①신생아 1인당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생후 1년 경과 시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을 지급 ②셋째아 이상은 생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	• 최초 신청일과 첫 돌로부터 14일 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상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①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가 출산한 신생아 ②신생아 출생 후 부모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③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1.첫째자녀 30만원 2.둘째자녀 50만원 3.셋째(이상)자녀인 경우 100만원 지원	• 보호자 통장계좌 입금
문경시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출산 장려금등 지원에 관한조례	<p>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첫째자녀이상 출산한 자</p> <p>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p> <p>2.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p> <p>• 영유아양육보조금</p> <p>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p> <p>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p> <p>2.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p> <p>• 지원기간은 첫째자녀의 경우 0세, 둘째자녀 만 2세, 셋째자녀 이상 만 3세까지 신청일의 그 다음 달부터 지원</p>	<p>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7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p> <p>• 영유아양육보조금 1인당 월 2만원</p>	<p>신청인 입금계좌</p> <p>• 영유아양육보조금 • 신청인 입금계좌</p>
영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p>①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영양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p> <p>②영양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 지원</p> <p>③1개월 이상 영양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p>	<p>1. 첫째아인 경우 월3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첫째아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모두를 첫째아로 인정</p> <p>2. 둘째아인 경우 월5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다만, 둘째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모두 둘째아 인정</p>	<p>1. 생후 1년간은 거주확인 후 동조1항 각호에 정한 지원 금액을 매월 계좌 지급</p> <p>2. 1년 이후부터는 생후24개월(만2세), 36개월(만3세), 48개월(만4세), 60개월(만5세)이 되는 달에 거주확인 하여 계속 거주자에 한하여 동조1항 각호</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 지원.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입양순서에 따라 양육비지원액 및 지원방법은 출생아에 준함.	3. 셋째아 이상일 경우 월10만원씩 5년간 지원 *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이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	에 정한 지원금액을 일시에 계좌 지급
영덕군 출산 장려금등 지원에 관한조례	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산한 가정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여 양육하는 경우 2. 영아를 입양한 경우 3.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권자가 출생신고를 지연한 경우 4. 첫돌 및 초등학교입학 시 지원은 출생 후 관내 계속 거주자로 한다.	1. 출생 시 : 300,000원 2. 첫 돌 : 300,000원 3. 초등학교 입학 시 : 400,000원 * 다태아인 경우는 영아별로 각각 지원	• 지원대상 영아 부모 또는 양육보호자의 금융계좌 지급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부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2. 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자 3. 신생아 출생후 부모 사망,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30만원 지원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50만원 지원하고, 만1세시 50만원, 만2세시 100만원 지원 3. 신생아가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시 100만원 지원하고, 만1세시 100만원, 만2세시 100만원 지원 * 다만,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는 각각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보호자의 통장계좌입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이혼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4.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고령군 정주인구 증대지원 조례, 시행규칙	• 영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고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첫째 및 둘째자녀의 경우 1인당 30만원이내 셋째이후자녀는 100만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성주군 출산 장려금등 지원에 관한조례	①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부 및 주민등록상 영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1. 미혼부,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및 위와 같은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입양아도 포함됨) 2.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① 자녀수에 관계없이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5만원 이하의 출산기념품 지원 ② 첫째 아기 출산장려지원금 : 10만원 ③ 둘째 아기 출산장려지원금 : 20만원 ④ 셋째 아기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 100만원 *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	•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조례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위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 첨부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조례	• 지원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	• 둘째 500,000원 이하 • 셋째 이상 1,000,000원 이하	•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제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셋째이후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출산 가정	• 1인당 100만원 *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1.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출생아와 함께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부모 또는 모 2. 군 관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면서 양육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중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모 *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1. 첫째아인 경우 매월 7만원씩 5년간 지원 2. 둘째아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 3. 셋째아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자녀가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원 ②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별도 지원	• 신청인 계좌에 입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하며,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 지원	① 매월 10만원이하 5년간 지원 1. 호적부·주민등록표상 두 번째 자녀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 2.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인통장계좌로 입금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p>②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p> <p>③입양아의 경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p>	<p>하되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3. 입양아의 경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p>	
울릉군 신생아 보건 관리비 지원에 관한조례	<p>①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울릉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p> <p>②울릉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p> <p>③울릉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p>	<p>• 보건관리비 지원 출산순위에 관계없이 1인당 500천원(금오십만원정)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지원금을 각각 지원</p>	<p>•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p>
[경남] 창원시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조례	<p>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시 보건소에 등록된 자</p> <p>2. 시 관내에서 둘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p> <p>3.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 부모 중 1인과</p>	<p>• 둘째아 : 30만원</p> <p>• 셋째아 이상 : 50만원</p>	<p>•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월 이내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p> <p>•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p>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마산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조례	①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셋째 아 이상 출산한 가정 ②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①셋째 영아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만원 ②출산시 35만을 지급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진해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등 에 관한 조례	①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둘째 30만원 • 셋째 이상 각각 100만원	•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
통영시	• 시 관내에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300만원으로 하되 3회 분할(다만, 쌍	•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조례	제 거주하면서 2007년 1월 1 일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 산한 부모로 한다. 다만, 전 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일 이 전 1년이내의 기간 내에 주 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 과 전입일 이후 거주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	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 출생신고시 신청서에 의하 여 100만원 • 그 후 출생일로부터 6월, 12 월에 각각 100만원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신 생아 부모가 3월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 는 사람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①신청일로부터 김해시에 거주하 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셋째이후 출생한 자 ②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 의 그 다음달부터 취학전(만 6세미만)까지로 하며, 시행 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③제2항의 연령은 당해년도 여성부 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	• 1인당 월 10만원이하	• 신청서 및 대상자 예금통 장 사본 제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조례 인구증가 를 위한 지원조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군 에 주민등록상 거주 • 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 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 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 주하고 신생아의 주민등록 을 군내에 등재한 사람	•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 액 범위 안에서 지원 하며 10년간 보장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이 이상 300만원	• 보험기관에 지급
함안군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군내에 6월이전	• 둘째: 500,000원 • 셋째이상: 5,000,000원	①둘째아는 신청서에 의거 1 회에 전액 지급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조례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 단,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인한 경우 부모중 1인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군 내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다만,쌍태아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②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4회 분할 지급 1. 출생신고시 신청서에 의거 2,000,000원 지급 2. 그 후 6개월마다 신청서에 의거 1,000,000원씩 지급 3. 2회 지원분 부터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양육하고 있는 자가 직접 군에 신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년전부터 연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1년미만 거주자 셋째이상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만5세 이하(취학 전)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와 자녀 3명이상 모두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부 또는 모(부모이혼·사망)와 자녀 3명이상 모두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외·조부모(부모사망)와 자녀 3명이상 모두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아동 양육수당 군내에 1년 미만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신청서 읍·면장에게 신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부가 없을 경우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남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가 없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시책 지원사항: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 장려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지 관할 읍·

〈부표 IV-1〉 (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방법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경우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품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 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등	면장에게 제출